모두가 꿈꾸는 미래!
지속가능한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시범지표 모니터링 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CONTENTS

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003

지속가능발전의 의미 04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07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11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L-SDGs) 22

Ⅱ.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 027

소개 28
주요 연혁 30

Ⅲ.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 035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 소개 36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40

Ⅳ. 시범지표 모니터링 결과 ····· 049

J-SDGs 2-2-2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출하량 51
J-SDGs 3-1-1 도민 1,000명 당 공공병상 수 61
J-SDGs 5-1-1 지역 성평등 지수 69
J-SDGs 8-1-2 비정규직비율 85
J-SDGs 8-3-1 청년 창업 건수 및 폐업률 99
J-SDGs 7-1-1 가정용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 113
J-SDGs 15-4-1 전북특별자치도에 서식하는 동식물 법정보호종 수 125

Ⅴ. 함께한 사람들 ····· 143

2020년~2024년 활동사진 144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179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Part

I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속가능발전의 의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L-SDGs)

지속가능발전의 의미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의미

- 1972년 스톡홀름에서 유엔 인간환경회의(UNCHE: 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가 개최될 때, 인디라 간디 당시 인도 수상이 '가난이 최악의 오염'이라는 연설을 하면서 환경과 경제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모색이 진행되었다.
- 이후 1983년 유엔총회는 '2000년 이후 환경에 관한 특별위원회(Special Commission on the Environment for the Year 2000 and Beyond)'를 구성하였고, 당시 노르웨이 수상 그로 할렘 브룬트란 트(Gro Harlem Brundtland)가 의장을 맡아 1984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 Development)로 이름을 바꿔 연구를 수행했다.
- WCED의 연구 결과물이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의장의 이름을 따 '브룬트란트 보고서'라고 부름)로 발표되었고, 이 보고서에서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확립했다.
- 이 보고서에서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되었다.
- 이를 위해 그간 경제, 사회, 환경 각 부문이 따로 고려되어 왔던 것을 경제발전, 사회통합, 환경보전을 통합적 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이후 환경이 지탱하는 선에서 사회를 발전시키고, 포용적인 사회 안에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동심원 모델'로 정립 · 발전되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 Our Common Future (UN Brundtland Report, 1987) –

*자료출처: 환경부_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매뉴얼

지속가능발전은 생태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공간안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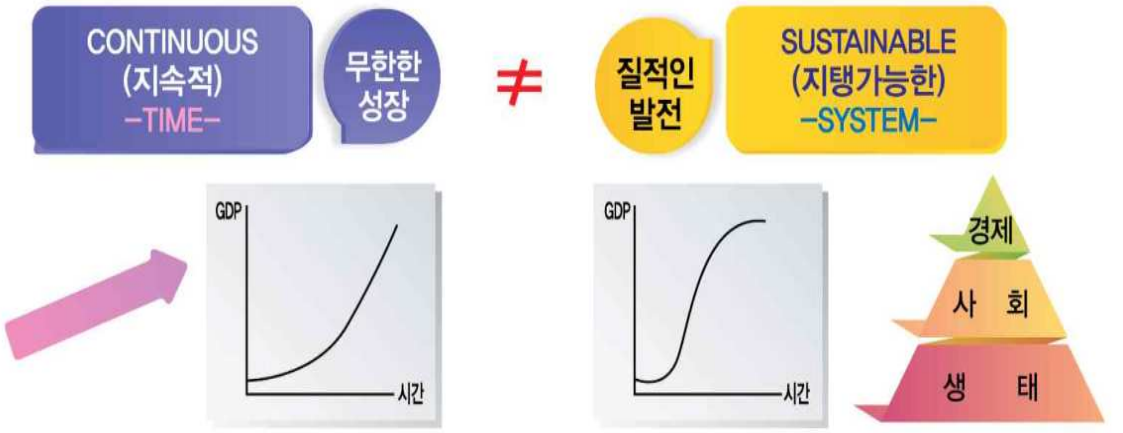
지속가능발전의 개념화 과정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환경과 경제의 양립 가능성을 모색하며 지속가능발전 개념으로 정립되었고, 지속가능발전을 이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 회의 (UNCED: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에서 국가 단위의 '의제21(Agenda 21)' 작성, 지방 단위의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 작성, 그리고 그 이행을 위한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 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글로벌 거버넌스로 이어졌다.
- 2012년 리우+20회의에서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틀을 모색하기로 하면서 2015년 유엔총회에서 193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17개 목표로 구성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채택되었다.

*자료출처: 환경부_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매뉴얼

‘지속가능’발전과 ‘지속적’발전 의미의 차이

- ‘지속가능발전’과 ‘지속적 발전’은 본질이 전혀 다른 개념이다.
- ‘지속가능한’이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는 시간적 지속가능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관점에서 생태계가 인간의 사회체계와 경제활동 체계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능력 범위의 의미를 담고 있다.
- 지속가능발전은 발전을 지속시킨다는 무한 성장의 의미가 아니라 환경이 사회와 경제를 부양하고 지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류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 특히 현대사회의 모든 문제가 어느 한 영역에서의 처방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통합적인 관점을 확보해야 하며, 문제 중심의 사고와 문제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가 강조되는 것이다.



자료: 김병완 외, 2019,「지속가능발전 정책과 거버넌스형 문제해결」, 35쪽 수정보완

*자료출처: 환경부_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매뉴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내용

- 2015년 9월 채택된 유엔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합의문인 「Transforming Our World」 서문에서는 “이 의제는 사람, 지구, 그리고 번영을 위한 행동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좀 더많은 자유가 있는 보편적인 평화를 강화하고자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서 “모든 국가와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이 계획을 이행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 유엔 SDGs 2030은 17개의 목표(Goals)와 169개의 세부목표(Targets)로 구성되어 있다. 169개 세부목표는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193개국이 모두 참여한 것이라 17개 목표별로 각국의 발전 단계에 따른 세부목표가 서로 다를 수 있다.
- SDGs의 목표연도인 2016부터 2030년까지 각국은 매년 7월 유엔총회에 SDGs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4년에 한 번씩은 각국 정상회담을 통해 이행체계를 점검하기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 230여 개의 평가 지표(Indicators)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 세계의 변혁 :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가지 목표

*자료출처: 환경부_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매뉴얼

■ 2015년 채택한 SDGs의 목표와 세부목표는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 등 소위 5개 축(5Ps)을 바탕으로 정립된 것이다. 사람, 지구, 번영 축은 사회발전, 경제 개발, 환경보호를 위한 목표이고, 평화와 파트너십 축은 지속가능발전의 전제조건과 방법을 의미한다.

- 첫째, 사람 축은 모든 인류가 존엄성과 평등 속에서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킬수 있도록 모든 형태와 차원의 빈곤과 기아를 종식시킨다.
- 둘째, 지구 축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기후변화에 대한 긴급한 행동을 비롯하여 지구가 악화되는 것을 막아 현재와 미래의 필요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한다.
- 셋째, 번영 축은 모든 인류가 번창하고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진보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 넷째, 평화 축은 근심과 폭력 없는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사회를 촉진한다.
- 다섯째, 파트너십 축은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의 필요에 초점을 두면서 모든 국가, 모든 이해당사자, 모든 사람들의 참여로 강화된 지구적 연대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부흥시킴으로써 이 의제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수단들을 동원한다.

UN SDGs 세부목표들 간의 연계성(Nexus)

- UN은 SDGs의 1번 목표부터 17번 목표까지 각 목표별 세부목표의 연계가 어떻게 직접·간접적으로 연계되는지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각 목표들의 실현을 위해서는 관련 행정부서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17개 목표체계를 활용하여 행정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등 활용법이 중요하다.
-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립한다면 광역과 기초지자체, 마을 단위에서 목표의 우선순 위가 나타날 것이며, 목표의 달성이나 특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목표 간 연계, 해당 목표와 관련된 부서 간 협력, 나아가 관련 시민사회 영역과의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가령 물 문제는 물 관련 목표인 6번 목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목표와 영역이 물 문제를 고려하고, 물 목표는 모든 목표와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one for all, all for one)

*자료출처: 환경부_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매뉴얼

‘지방의제21’에서 ‘지방 SDGs 2030’으로

- 1992년 6월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Agenda 21)’의 제28장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이에 근거한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의 수립과 실천이 전 세계의 지방정부에서 거버넌스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의 추상성을 벗어나 구체적인 의미를 담는 17개의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지방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한 방향성과 임무를 재인식하게 되는 전환점을 부여하게 됐다.

〈지방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비교〉

구 분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채택연도	1992년	2015년
회의명칭	유엔환경개발회의	유엔총회(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문서명칭	의제21 (Agenda 21)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The 2030 Agenda for SD)
의제구성	Ⅰ. 전문 : 1장 Ⅱ. 사회·경제부문 : 2~8장 Ⅲ. 자원보전·관리 : 9~22장 Ⅳ. 주요그룹의 역할 : 23~32장 ① 여성 ② 청소년 ③ 원주민 ④ 민간단체 ⑤ 지방정부 ⑥ 노동조합 ⑦ 산업계 ⑧ 과학계 ⑨ 농촌 Ⅴ. 이행수단 : 33~40장	Ⅰ. 서문 : 5P 개요 Ⅱ. 선언 : 머리말, 비전, 공유원칙과 약속, 오늘날의 세계, 새로운 의제, 이행 수단, 후속조치와 검토, 세계변화를 위한 행동 요구 Ⅲ.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세부목표 :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230개 지표 Ⅳ.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Ⅴ. 후속조치와 검토 : 국가, 지역, 세계차원
주요그룹	9개 주요 그룹	이해관계자 그룹(MGoS)
지방정부의 역할	제28장에 지방정부의 역할 명시 (지방의제21 추진 권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농촌 구별 없이 모든 지역에서 SDGs 추진 권고
주요특징	ESSD(환경중점) 개념에서 출발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지구 차원의 실행계획으로서 구체적인 목표와 지표의 제시가 없이 추상적 선언의 성격이 강함	MDGs(사회중점)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와 지표(230여 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 기한을 2030년으로 제시함

*자료출처: 환경부_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매뉴얼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세계적 흐름과 함께 우리나라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라는 공식 명칭을 정하고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라는 비전을 내걸었다.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구현,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보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성장, 인권 보호와 남북평화구축, 지구촌협력과 같은 5대 전략을 세웠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17개 목표와 119개 세부목표, 236개의 지표들(제4차 기본계획 기준)을 설정하여 정부기관은 물론 지자체와 시민단체, 전문가, 이해관계자 그룹 등 다양한 집단에서 노력하고 있다.

국가 지속가능발전 배경

UN은 경제, 사회, 환경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도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했다. 이를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의 틀 내에서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할 인류 공동의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범부처간 협의와 국민참여에 기반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외형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양극화, 미세먼지 등 환경악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국민 삶의 질은 실질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모순이 지속되어 왔다. 2017년 기준 OECD 삶의 질 지수는 38개국 중 29위로 2014년 25위에 비하여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정부는 지속가능발전 강화를 2018년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보완하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수립했다. K-SDGs는 ‘체감할 수 있는 국민 삶의 변화’와 포용국가로의 전진을 위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

*자료출처: 환경부_국가지속가능발전포털(http://ncsd.go.kr)

K-SDGs 수립 및 제 4차 기본계획 수립

K-SDGs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목표를 담아 17개 분야, 122개 세부목표 및 214개 지표로 구성됐다. 전체지표 중 UN-SDGs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지표는 122개로 전체의 57%를 차지하여 글로벌 지표와 국가 특화형 지표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과거 국내 관련 지표들은 환경분야 중심으로 구성되어 한계가 있었으나 K-SDGs는 사회, 경제부문 지표가 보완되어 균형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 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143개 지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부지표 목표치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국가 비전에 따라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 전문가 작업반에서 주도했다는 게 특징적이다. 이렇게 마련한 세부목표 및 지표체계는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한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2021-2040 기간의 지속가능발전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K-SDGs 목표 및 지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지향적으로 구성하였다. 현재에 근거하여 행동하기 위하여 현 상황에서 취해야 할 정책을 전략적으로 구성하였다.

■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개편 방향성**

① 기존 K-SDGs 17개 목표체계를 그대로 유지

②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세부목표 및 지표 보완
(122개 세부목표, 214개의 지표 → 119개 세부목표, 236개 지표)

③ K-SDGs 달성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17개 목표별 제시

④ 향후 5년 중점 추진 및 관리 필요한 정책목표 및 지표 선정

*자료출처: 환경부_국가지속가능발전포털(http://ncsd.go.kr)

K-SDGs 추진체계

K-SDGs 수립은 기존 하향식 방식과는 다르게 관계부처와 민간 작업반 및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참여를 통하여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정부는 2018년 2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추진계획'에 따라 민·관·학 공동작업반을 구성하고 환경부, 기재부, 국토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협의체 및 실무 테스크포스를 통하여 K-SDGs를 수립하도록 했다. 여기서 정부는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열고, 논의 결과를 정리하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여 실제 목표설정 작업은 SDGs 목표별 민·관·학 합동 작업반에서 주도했다. 특히 국가 SDGs 포럼, 일반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K-SDGs를 마련하였다.

*출처 :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보고서 2019

*자료출처: 환경부_국가지속가능발전포털(http://ncsd.go.kr)

K-SDGs 수립과정

2018년 1월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K-SDGs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그 이후 범부처 K-SDGs 협의체, 작업반, K-MGoS(Korean-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등을 구성하여 K-SDGs 수립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18년 12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K-SDGs를 마련하였다.

전 국민이 참여한 K-SDGs

환경부는 2018년 6월 7일부터 12일까지 동남권에서 시작하여 호남권과 수도권을 순회하면서 K-SDGs 수립의의 및 과정에 대한 발표와 함께 전문가, 지역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지역별 순회토론회 및 제1차 국민 대토론회에 이어 2018년 10월 제2차 국민 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K-SDGs 비전 및 전략

- (비전) 포용성을 강조하는 현 정부 지향점 및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위협 속에서 미래 한국의 지속가능성장을 추동할 핵심 가치로 '혁신' 반영 * (2018)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 ⇒ (2020) 포용과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국가 실현
- (전략) 기존에 수립한 5대 전략의 핵심 가치인 '사람', '번영', '환경', '평화', '협력'은 계승하되, 평화와 협력을 통합하여 4대 전략 마련

*자료출처: 환경부_국가지속가능발전포털(http://ncsd.go.kr)

〈 K-SDGs 비전, 전략, 목표 〉

비전	포용과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국가 실현			
전략	사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번영 혁신적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환경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는 깨끗한 환경	평화·협력 지구촌 평화와 협력 강화
K-SDGs 17개 목표	**[목표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목표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목표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목표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목표5]** 성평등 보장 **[목표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목표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목표9]**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 기반시설 구축 **[목표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목표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목표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목표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목표13]** 기후변화와 대응 **[목표14]** 해양생태계 보전 **[목표15]** 육상생태계 보전	**[목표16]** 평화·정의·포용 **[목표17]** 지구촌 협력 강화

*출처: 환경부,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21-2040 1부

*자료출처: 환경부_국가지속가능발전포털(http://ncsd.go.kr)

SDGs 목표별 주요 법령 및 계획

Goal	주요 법률	주요 계획	주요 부처
G1. 빈곤퇴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사회보장기본법	•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4-18) • 제1차 기초생활보장 3개년 계획(18-20)	보건복지부
G2. 기아종식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기본계획(15-19)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G3. 건강과 웰빙	• 국민건강증진법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16-20)	보건복지부
G4. 양질의 교육	• 교육기본법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평생교육법	• 제2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12~) • 제3차 국가평생교육진흥 종합계획(13-17)	교육부 고용노동부
G5. 성평등	• 양성평등기본법 • 여성발전기본법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 •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13-17)	여성가족부
G6. 깨끗한위생	• 수도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2015 전국수도종합계획(16-25) •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16-25)	환경부 국토교통부
G7.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 에너지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14-35) •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14-35)	산업통상자원부
G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 산업발전법 • 중소기업기본법 • 고용정책기본법	•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미수립) • 고용정책기본계획(미수립)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G9. 산업, 혁신, 사회기반 시설	• 국토기본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11-20) • 지역산업 진흥계획(시도별)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G10. 불평등 해소	• 차별금지 관련 법률	• 분야별 차별금지 및 약자 보호 관련 계획(장애인, 여성, 외국인 등)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G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환경정책기본법	• 도시계획(광역, 시군)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16-35)	국토교통부 환경부
G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 자원순환기본법	• 자원순환 기본계획(수립예정)	환경부
G13. 기후변화 대응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14-18) •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17-36) •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16-20)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G14. 해양생태계 보존	• 해양환경관리법	•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11-20)	해양수산부 환경부

*자료출처: 환경부_2022년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 최종본

Goal	주요 법률	주요 계획	주요 부처
G15. 육상생태계 보호	• 자연환경보전법 • 산림보호법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16-25) •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14-18) •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13-17)	산림청 환경부
G16.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청탁금지법		법무부

*출처 : 환경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 이행현황 및 추진과제 분석 연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 제도 및 추진체계

구 분	내 용
관련법률	◦「지속가능발전법」 - '07년「지속가능발전기본법」제정 - '10년「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 - '22년「지속가능발전기본법」제정
관련 계획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기본법」제7조에 근거 -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 - 2년 단위 이행 점검
위원회	◦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 소속: 환경부장관 ('00년 대통령소속 출범→'10년 환경부장관소속 전환→'22년 대통령소속으로 재전환) - 구성: 본위원회 60인 이내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 전문위원회
위원회 기능	◦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변경 ◦ 중앙추진계획 협의·조정 ◦ 정책의견 제시 ◦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통보 ◦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및 평가 ◦ 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 보급 ◦ 교육 및 홍보 ◦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자료출처: 환경부_2022년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 최종본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전략별 K-SDGs 목표 및 주요 정책과제

전략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목표	**세부목표 주요내용**	**주요 정책**
	- 빈곤인구 비율 감소 -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최소화 - 빈곤층·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강화 및 재난회복력 강화	- 공공부조제도 역할 강화 -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 시스템 강화
	- 취약계층 식량접근성 보장 -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 -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 구축 - 유전적 다양성 유지	- 공공급식 활성화 - 취약계층 식품지원제도 확대 -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 친환경 농업 확산 - 농업유전자원 다양성 유지 - 쌀 수급 안정
	- 만성질환 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 - 교통사고 등 인명사고 사망 예방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모성 및 아동·청소년 건강 보호 -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사망 감소 - 저출생 극복 및 고령화 대비 - 보편적 의료보장	- 만성질환 관리 - 자살 고위험 집단 관리 - 감염병 발생 및 피해 최소화 - 고령화 대비 관리체계 구축 - 공공의료기관 접근성 제고
	- 양질의 초·중등교육 이수 -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의 평등한 접근 - 지속가능발전교육 확대 - 전문 및 직업기술인 양성 - 취약계층 교육접근성 보장 -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환경 제공 - 재정 및 교사 확보	- 공교육 신뢰 제고 - 고등교육 기회 확대 - 평생교육·직업교육훈련·지속가능발전 교육 강화 - 소외계층 기초교육 및 직업교육 학습권 보장 - 균등 교육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 교원 전문성 강화
	- 차별 및 인신매매, 성착취 철폐 - 돌봄 및 가사노동 가치 부여 - 여성 리더십 기회 보장 - 여성 기술접근 확대 - 여성인력 양성 - 성평등 정책·법 채택	- 성평등 의식 확산 - 여성폭력 근절·예방 - 평등한 일 권리, 기회 보장 -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 여성 대표성 제고
	- 주택서비스 접근성 보장 - 안전하고 적정가격 교통시스템 제공 - 도시 포용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 세계유산 보호·보존 - 재난피해 감소 - 도시의 환경영향 감소 (대기질, 폐기물) - 공공 녹지공간 접근 보장	- 생애단계·소득수준별 맞춤 주거지원 - 무주택자 주택공급 확대 - 노후·취약 주거지 개선 - 대중교통 분담률 제고 -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 - 도시자연 확충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

*자료출처: 환경부_2022년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 최종본

전략2. 혁신적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목표	**세부목표 주요내용**	**주요 정책**
	- 모두가 행복해지는 경제성장 - 좋은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소상공인 성장 촉진 - 동일노동·동일임금 - 취약그룹 노동자권리 보호 - 안전한 근로 환경	- 혁신적 포용성장 기반 마련 - 취약계층 대상 노동정책 강화 - 코로나19 위기 대비 안전망 확충 - 중소·벤처·소상공인 디지털화 촉진 - 청년 구직 지원 - 일·생활 균형 확보
	- 지속가능한 기업활동 - 기술·혁신 촉진 - 자원효율성 강화	- 중소·혁신기업의 성장을 돕는 혁신금융 - 혁신성장동력 육성 - 제조업 재도약 및 서비스업 고도화 - 정부 R&D 투자시스템 혁신 - 자원순환성 고려한 제품 설계
	- 하위 40%인구 가처분소득 증가 -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성 확대 - 공정한 기회 제공 - 재정·임금·사회보호정책 강화 - 인권중심적 이민정책	-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 장애인 고용서비스 및 직업재활지원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사각해소 -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 - 이민정착지원 및 인권보호 강화
	- 자원의 효율적 사용 - 식품손실 감소 - 화학물질 관리 강화 - 폐기물 발생 감소	- 자원순환성 고려한 제품 설계 -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 재활용 배출·수거·선별체계 혁신 - 생산단계 및 생활속 폐기물 감축 - 청정생산 및 환경경영 확산

*자료출처: 환경부_2022년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 최종본

전략3. 미래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		
목표	**세부목표 주요내용**	**주요 정책**
	- 안전한 식수와 하수도 서비스 - 수질 개선 - 수자원의 효율적 사용 - 물공급 안정 -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 건강한 물관리를 위한 지역공동체 참여	- 건강한 물의 안정적 이용 - 하수처리장 개선 및 기능 확대 - 상수 오염원 억제 - 물부족 대응역량 강화 - 물순환 정책강화 - 수생태계 보호 및 복원 - 물관리 시민 참여지원 확대
	- 에너지 서비스 접근 - 청정에너지 공급 증대 - 에너지 효율 향상 - 대기오염 최소화	- 친환경 에너지 사회 수용성 강화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대 - 신축건물 에너지 효율화 - 그린뉴딜 관련 에너지산업 육성
	- 기후변화 위험 감소 - 자연재해 회복 및 대응능력 강화 -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상승을 2℃ 아래로 유지	- 기후변화 정책 통합 모니터링 - 기후재난 대응역량 강화 및 제도정비 - 기후변화 중장기 영향 평가 능력 강화 - 기후변화 교육 강화 - 온실가스 감축이행 점검 평가체계 고도화
	- 오염물질로부터 해양환경 보전 - 생태환경 및 수산자원 서식처 관리 - 해양 산성화 영향 최소화 - 과도한 어업 지양 - 해양보호구역 면적 확대 - 연구역량 제고 및 안정적 어업행위 지원	- 육상 오염물질 차단 - 해양플라스틱 저감 - 해양생태계 서식지 및 해양생물 보호 - 불법어업 근절 - 해양보호구역 확대 - 해양신산업 육성 - 어업인 복지여건 개선
	- 생태계 다양화를 위한 보전활동 활성화 - 황폐화된 산림 및 토지복원 - 생물다양성 손실예방 - 멸종위기종 보호 - 야생생물과 인간 접촉점 관리 - 침입외례종 영향 감소 - 생태축 복원 및 생태네트워크 유지·관리	- 습지 보전 - 산림생물 다양성 확보 및 DMZ생태보전 - 산림복원 및 토지복원 - 멸종위기종 관리·복원 - 야생동물 이용 및 접촉 관리 - 침입외래종 관리체계 구축 - 도시생태축 복원

*자료출처: 환경부_2022년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 최종본

전략4. 지구촌 평화와 협력 강화		
목표	**세부목표 주요내용**	**주요 정책**
	- 법치증진 - 평등한 사법제도 마련 -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부정책과 제도 추진 -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 감소 - 아동 폭력 종식 - 불법 자금과 조직범죄 퇴치 -부정부패 및 뇌물수수 감소 - 의사결정에 시민참여 보장 - 정보접근 및 자유 보호 - 차별 지양 법·정책 수립 - 디지털 인권 보호	-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 마약·조직범죄 퇴치 - 공정행정 - 디지털 기반 행정업무 효율화 - 국민 정보접근성 보장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개도국 SDGs 지원 확대 - 다자무역체제 촉진 - 개도국 과학기술 혁신 지원 -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 국제사회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ODA 기본계획 수립 - 추진체계 개선을 통한 ODA 효율성 제고 - 개도국 투자 증대 촉진 - 다양한 협력기구 선정 및 다자협력협의체 운영

*자료출처: 환경부_2022년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 최종본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L-SDGs)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의 필요성

-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의제21이나 지방의제21의 정신과 마찬가지로 SDGs 목표 수립과 달성을 위한 지구적 파트너십의 중요한 주체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 2030 의제 45조에서도 각국은 SDGs를 실행할 때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계지방 정부연합(UCLG: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은 정해진 의제를 지방정부가 단순히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SDGs의 지방화(localizing SDGs)를 강조한다. 정책 결정, 변화의 촉진자, 지구적 목표와 지역사회 연계 고리로서의 역할을 지방정부가 해야한다.
- SDGs가 발표된 이후 전 세계 국가 및 지자체는 각자 상황에 맞는 SDGs를 개발하여 적용하기 위한 후속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2018년 미국의 뉴욕시를 시작으로 영국의 브리스톨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시 등이 ‘SDGs를 위한 지방 주도의 전환’을 표방하며, ‘자발적 국가 평가 (VNR : Voluntary National Review)’와는 별도로 ‘자발적 지방 평가 (VLR : Voluntary Local Review)’ 보고서를 내고 있다.

*자료출처: 환경부_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매뉴얼

21세기형 지역발전전략으로서 지방 SDGs

- SDGs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위기, 경제위기, 양극화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세대까지 지속가능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이념과 철학을 담고 있으며, 현재 세대가 지향해야 할 숙명적 과제라 할 수 있다.
- SDGs가 정치적·상징적 언어로서 총론적 수준의 선언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2030년을 목표로 하는 SDGs 설정은 물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이행계획과 세부적인 정책과제의 도출이 뒤따라야 하며, SDGs의 목표와 지표들이 모든 정책 속에 자리 잡도록 해야한다.
- SDGs는 환경, 경제, 사회 등 행정 각 부문 간 융합적·협업적 정책과제의 도출과 더불어 시민, 기업, 행정 등 주요 주체들 간의 협력적 실천이 이루어지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실현 가능하다.

지방 SDGs 작성의 원칙

- 원칙 1 : 지역특화형 SDGs 작성
  - UN SDGs 2030, K-SDGs 2030과 연계하여 17개로 구성된 목표체계를 따르되, 세부목표에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형" SDGs를 수립

〈예시〉 충남 당진시 지속가능발전목표

- 에너지 공급 체계와 관련한 송전탑 갈등을 겪은 데다 화력발전소가 신설되기도 한 당진시에서는 7번 목표를 '에너지 정의 실현'으로 설정

*자료출처: 환경부_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매뉴얼

■ 원칙 2 : 주요 중장기계획들과의 연계

- 도시계획, 종합발전계획, 분야별 계획 등 주요 중장기계획들과 연계하여 정책분야 전반을 포괄하는 계획으로 작성

〈예시〉 서울시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 서울시는 중·장기 행정계획의 제정 또는 개정 때 소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해 사전검토를 수행

세부평가 항목		평 가	의 견
경제분야	국내외의 관광객들이 관광, 여행, 비즈니스를 하는데 불편을 초래할 사항은 없는지 여부	우수 ■ 보통 □ 보완 □	**(검토의견)** -관광객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찾아 적기 개선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우수 -관광객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우수관광기업을 육성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예상
협치분야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 제시와 그것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	우수 □ 보통 □ 보완 ■	**(보완의견)** -최근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tion)과 같이 주거지역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 강화 및 상시적 소통 창구 마련 필요 -공청회 등의 개최로 지역주민과 관광취약계층 등 모두를 배려하는 관광(Tourism for All)실현 방안 강구

■ 원칙 3 : SDGs 목표들간의 연계

- 환경·사회·경제 분과로 나누는 '칸막이'형 작성을 배제하고, 통합적·융합적으로 접근하여 유엔의 목표간 연계성(Nexus) 전략에 따라 작성함

〈예시〉 종로구 마을 단위 목표 간 연계

- 종로구는 각 부서가 마을 단위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각 목표와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음을 분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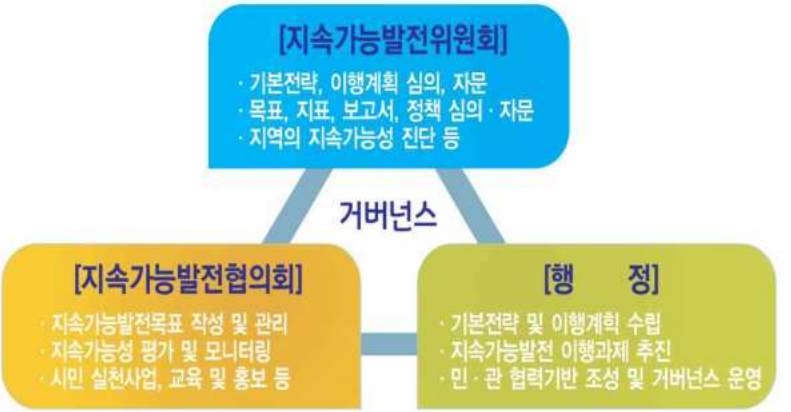
*자료출처: 환경부_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매뉴얼

■ 원칙 4 : 협력적 거버넌스의 참여형 방식에 의한 작성

- 지역의 다양한 주체(행정·시민·기업), 이해관계자 그룹(MGoS) 등이 함께 참여하여 SDGs를 작성하고 이행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방식으로 추진

〈예시〉 수원시 SDGs 민관협력 체계

- 수원시는 행정-지속가능발전위원회-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속가능발전 민관협력 체계 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음



*자료출처: 환경부_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매뉴얼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하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

Part

Ⅱ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개

주요연혁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배경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을 위한 실천 활동으로 국가 및 지방 정부에서 '의제21(Agenda 21)'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지방자치의 새로운 상징적 운동으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합의를 통해 실천하는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2000년 6월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가 창립했다.

이후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2000년 7월 28일에 **'전북특별자치도지방의제21추진협의회'**가 창립했다.

그리고 2015년 유엔개발정상회의(UNGA)에서 '세계의 변혁: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 보고서를 발표하고 같은 해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했다.

이에 2016년 정기총회에서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24년에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을 변경하면,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현황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운영위원회와 4개 상임위원회(SDGs정책위원회, 사

람위원회, 경제위원회, 환경위원회), 3개 실행위원회(전북시군협의회, 기후환경위원회, ESD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립근거가 마련된 지역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임실, 장수, 김제, 진안, 무주, 부안 10곳이며, 사업비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는 전주·군산·정읍·임실·장수·부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6곳이다.

*고창, 완주, 김제는 사업비를 받아 운영될 수 있게 준비 중임.

조직도

〈그림 36〉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직도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요 연혁

- 1997년 : 전라북도 차원에서 ‘전북환경21’ 작성공포
- 2000년 : 전라북도 환경기본조례 개정 ‘전북환경21실천협의회 설치 근거 명기’
  : ‘전라북도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
  : 7월 28일, ‘전라북도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창립
- 2001년 : 전북의제21 총괄보고서 ‘푸른약속 전북21’ 의제 보고서 발간
  : 제3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 개최
- 2002년 :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민관학협의회 구성
- 2005년 : 전북환경교육네트워크 구성
- 2007년 : 제1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개최
  : 전북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구성
  : 전북생명의숲 국민운동본부 독립(2004~2006)
- 2009년 : 전북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운영
  : 그린리더 양성 및 에코홈닥터를 통한 가정에너지 컨설팅
- 2011년 : 전라북도환경교육네트워크 창립
  : (사)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설립
- 2012년 :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 ‘VISION 2020’ 선포식 및 보고서 발간
  : 전라북도마을만들기협력센터 독립(2009~2011)
- 2016년 :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 변경
  : 2016 영·호남·제주 지속가능발전포럼 개최
  : 도민참여형 행복지표 개발을 위한 원탁회의 주관
- 2017년 : 제13회 한국환경교육한마당 주관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포럼
  :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 시범사업 컨설팅(2015~2017/10개소)
- 2018년 : 자원순환실천마을사업 컨설팅(2017~2918/12개소)
- 2019년 : 그린웨이환경축제 진행(2008~2019)

: 아동청소년 차별사례 공모전 진행

: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 컨설팅(2018~2019/20개소)

: 만경강 생물다양성 조사

- 2020년 :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및 지표 개발 연구

: 창립 20주년 기념식과 20주년 포토북 발간

: 만경강 신천습지 생물다양성 탐사대작전 주관

- 2021년 : 제23회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공동주관
- 2022년 :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수립(17개 목표, 81개 세부목표, 153개 지표)
- 2023년 :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시범지표 모니터링(6개 지표)

: 플라스틱 없는 전북만들기 진행(2019~2023 / 1회용 플라스틱 90만개 절감)

: 전라북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2012~현재/매년 4천여명 교육)

: 전북기후·환경네트워크 운영(2009~현재 / 연 3천여 개소 에너지컨설팅)

: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사업 진행(9개 공동체 참여)

: 전북RE100시민클럽 운영(2022~현재)

- 2024년 :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시범지표 모니터링(7개 지표)

: 전북 생물다양성 탐사대작전 주관(2015~현재)

: 와글와글 환경학교 진행(2017~현재)

: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사업 진행(카페, 장례식장, 축제, 다중이용시설 등 1회용 플라스틱 약 242만개 절감)

: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사업 진행(11개 공동체, 16개 출연·출자기관 탄소중립 실천 활동 참여)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동그라미점빵' 운영(2022~현재)

주요 수상내역

2011년 지속가능발전대상 대통령상

■ **마을단위 지속가능성 확보와 민관협력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마을만들기협력센터 구축”**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의제21 내용으로 채택된 마을만들기 분야의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마을만들기지원조례” 제정과 “전북특별자치도마을만들기 협력센터” 구축

2016년 지속가능발전대상 국무총리상

■ **에너지자립, 말이 씨가 되다 –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 “농촌·도시형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의제 실천을 위해 농촌의 에너지 문제를 주민교육과 에너지자립으로 해결하여 농촌마을 에너지자립도를 높이는 선도적 모델 제시

2017년 지속가능발전대상 환경부장관상

■ **민·관·기업의 공동기획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그린웨이환경축제”**

- 전북특별자치도와 기업, 환경단체가 함께 기획하고 준비해 환경이슈와 기후변화에 대해 인지시키고 환경보존을 위해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는 환경한마당

2020년 지속가능발전대상 국무총리상

■ **제로플라스틱전북 객리단길 시범사업**

- 전 세계적 문제인 1회용 플라스틱 범람에 따른 거버넌스적 해결방안으로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절감을 위해 공유컵(TURN블러)을 사용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축 모델을 구축하여 제로플라스틱 운동을 확산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인류가 중심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17가지 목표

Part

Ⅲ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 소개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

Jeonbuk stat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추진과정

2018년 12월 24일, 환경부는 경제, 사회, 환경 등 국정 전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K-SDGs'라 한다)를 수립했다. 이미 2015년 9월에 유엔(UN)은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전 분야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라 한다)를 채택했으며, 독일,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는 유엔의 SDGs를 자국화하여 각 국가별로 SDGs를 마련했다. 이같이 국제적 정세에 대응하여 수립한 한국형 SDGs인 K-SDGs는 대한민국이 가야할 2030년까지의 이정표로 설정한 것이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수립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L-SDGs) 수립이 활성화되었다. 2019년,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전북지속협'이라 한다)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에 맞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위해 이미 SDGs를 수립한 당진시와 경기도를 방문해 해당 지역의 SDGs 목표 및 세부목표, 지표, 평가 등 수립 전 과정에 대해 공부하였고,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J-SDGs'라 한다)를 수립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갔다.

J-SDGs 수립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과의 사전 논의 후 2020년도 전북지속협 본 사업비로 예산을 마련하였다. 당초 계획으로는 20년도 초부터 J-SDGs 수립을 진행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시작시기를 20년도 6월로 늦췄고, 마침내 20년 6월 11일, J-SDGs 수립을 위한 추진위원 통합워크숍을 시작으로 J-SDGs 수립이 본격화 되었다.

추진위원은 J-SDGs 수립의 큰 틀을 논의하는 기획단과 실질적 내용인 세부목표 및 지표를 논의하는 분야별(사람, 사회, 환경) 위원회로 구성하였다. 분야별 위원회가 다뤄야 할 SDGs 목표는 사람위원회가 G1, 2, 3, 4, 5번을, 경제위원회는 G8, 9, 10, 11, 12

번을, 환경위원회는 G6, 7, 13, 14, 15번을 논의했으며, G16, 17번은 공통의 목표로 설정하여 모든 위원회에서 내용을 다뤘다.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는 'J-SDGs 수립 및 지표 개발 연구' 용역을 통해 타 지방자치단체의 SDGs 사례 분석과 국내·외적 SDGs 동향 분석, J-SDGs 수립 및 지표 설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J-SDGs 이행 평가 및 환류 프레임워크 개발 등 J-SDGs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었다.

2021년도에 들어서면서 J-SDGs 수립을 위한 논의가 뜨겁게 달궈졌다. 분야별 위원회 회의 뿐아니라 SDGs 목표별 논의를 위한 소모임도 만들어 J-SDGs 수립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J-SDGs 수립을 위해 진행한 회의는 20년 6월부터 22년 5월까지 약 2년간 기획단 9회, 사람위원회 36회, 경제위원회 32회, 환경위원회 42회로 총 119회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대망의 2021년 12월 9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지속법'이라 한다)'이 제정되면서 그간 환경부 소속이었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이관되었다. 이로써 과거의 위상을 회복함과 동시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지원할 근거 법률이 생기게 되었고, 지속법에 근거하여 SDGs 홍보 및 교육, 숙의공론화장 운영 등 민관협력을 위한 파트너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자리매김할 명분이 생겼다.

지속법이 제정됨에 따라 J-SDGs 수립, 기본전략, 추진계획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되었고, 이에 맞춰 2022년 9월, 전북지속협에서 17개 목표, 81개 세부목표, 153개 지표로 정리된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를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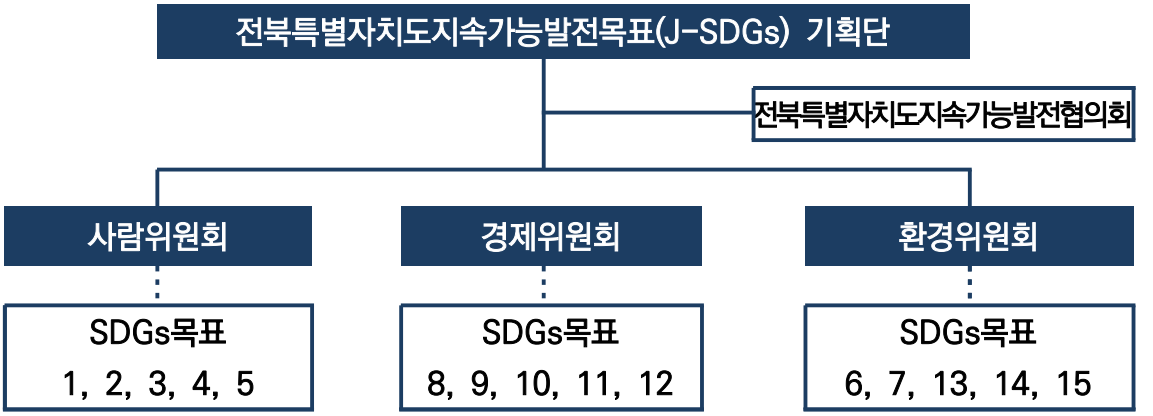
또한 지속가능발전 업무가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이관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기존 환경녹지국에서 기획조정실로 업무가 이관되어 환경에 국한된 사업 및 목표설정이 아닌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었다.

이에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수립된 J-SDGs를 평가·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시범지표를 선정해 모니터링하여 결과를 알아봤고, 이후 행정에 제안해 목표 달성을 위한 지표 모니터링을 함께하고자 한다.

조직구성

■ **J-SDGs 기획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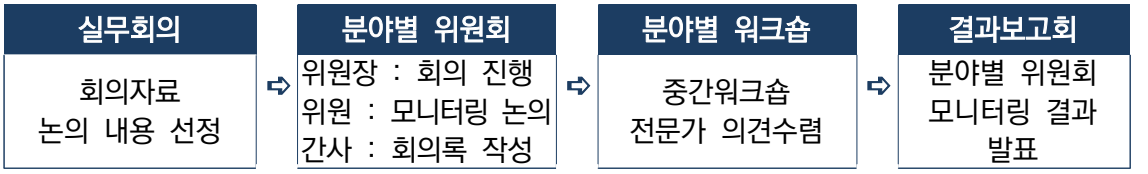
- 구성 : 전북지속협 사무처, 도내 전문가, 3개 위원장 등
- 비전 설정 기본계획 수립, 내용, 방법, 주체, 과정 방식 등 설정



〈표 9〉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기획단 조직구성

■ **분야별 위원회 구성**

-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J-SDGs 분야별 위원회 운영
- 사람, 경제, 환경위원회를 전북지속협 위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목표(J-SDGs)를 수립하기 위한 작업 진행
- 3개 분야 위원회별 회의를 통해 시범지표 선정 및 모니터링 진행



〈표 10〉 3개 위원회 논의 구조

■ **사람위원회**

① 빈곤층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②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③ 건강하고 행복한 삶　④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⑤ 성평등 보장

■ **경제위원회**

⑧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⑨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⑩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⑪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⑫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 **환경위원회**

⑥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⑦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⑬ 기후변화 대응
⑭ 해양생태계 보전　⑮ 육상생태계 보전

〈그림 39〉 위원회별 지속가능발전목표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수립 및 지표 개발 연구
- 전북대학교 지속가능발전센터,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및 지표 개발 연구' 용역
- 타 지방자치단체 SDGs 사례 및 국내·외적 SDGs 동향 분석
- J-SDGs 수립 및 지표 설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 J-SDGs 이행 평가 및 환류 프레임워크 개발

■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수립
- J-SDGs 기획단 및 분야별 위원회 운영
-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초안 작성

■ 의견수렴 및 협력기관 파트너쉽 구축
- 사람, 경제, 환경 그룹별 참여하는 기관(단체) 등을 J-SDGs 수립·이행을 위한 파트너 기관으로 등록, 협력체계 구축
- 도 주관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참여(의견제출 및 검토)
- 시민사회 및 전문가 그룹, 행정 주무부서 검토 및 협의

■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
SDGs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1.1	취약계층 빈곤퇴치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강화한다	① 소득수준 20% 이하의 가구 및 사람 수 ② 청년빈곤층의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수
	1.2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을 강화한다	① 지자체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 수 ② 연도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 수
	1.3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경제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① 노인취업률 ② 6개월 이상 자활근로 유지 비율
SDGs 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2.1	농업생산 및 농업인구, 농지보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조례를 제정한다	① 절대농지 면적 ② 친환경 농업 육성, 로컬푸드 등 관련 조례 수
	2.2	친환경 농축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① 친환경 농축산인력 양성 및 교육 운영 프로그램 수 ② 친환경 농축산물 출하량(톤)
	2.3	종자 보존체계를 구축하여 식량안보를 이룬다	① 종자산업 육성 수 및 거래량, 규모
	2.4	농식품·생명산업, 디지털 농업 기반을 구축한다	①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수
	2.5	농업의 후계인력과 주민 공동체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사회를 구축한다	① 도농 융합 상생 마을 수 ② 귀농·귀촌 인구수 ③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인 수 ④ 농촌 생활문화공동체 수 ⑤ 건강생활지원센터 수
SDGs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3.1	선도적인 전북형 공공의료 체계를 마련한다	① 도민 1,000명당 공공병상 수 ② 감염병치료 전담병상 확보율 ③ 중증환자 전담병상 수 ④ 감염병치료 전담의료인력 확보율
	3.2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정신건강 관리 공공의료 기관 수 ② 심리 상담 기관 수
	3.3	여가생활을 위한 인프라와 예산을 확충한다	① 시·군별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시설 수

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
	3.4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이동권을 보장한다	① 전체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인증시설 비율 *고령자·장애인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
	3.5	도내 치매 관리 강화를 위한 치매 지원체계를 제도화한다	①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환자 등록·관리율
	3.6	기부와 봉사 활동을 촉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① 인구 대비 실제 자원봉사자 수 ② 자원봉사 1명당 연평균 활동 시간
	3.7	도민의 참여로 미래유산 발굴을 확대하고 생활예술 향유를 위한 공공 지원을 확대한다	① 시·군별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설치 수
SDGs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4.1	취학 전 모든 아동이 양질의 보육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① 국공립 어린이집 수 및 이용률 ② 국공립 유치원 수 및 이용률
	4.2	학교, 마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육공동체를 구축한다	① 공공돌봄 시설의 수 ② 마을 교육공동체 수 ③ 청소년 단체활동 참여율 ④ 초·중·고등학교 학급 당 학생 수
	4.3	전북도민에게 평생학습(자기계발) 및 직업능력 계발 기회를 보장한다	①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참여자 수 ② 성인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수 ③ 직업교육 프로그램 및 참여자 수
	4.4	전북도민의 지식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기반을 구축한다	① 공공도서관 수 ② 지역 서점의 수
	4.5	전북도민의 정보화 활용능력 함양 기회를 제공한다	① 성인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교육 프로그램 수 *디지털 미디어의 올바른 이용을 촉진하는 사회 운동
	4.6	전북도민의 문화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① 지역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수 ② 지역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이용자 수
	4.7	전북도민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기반을 구축한다	① 지속가능발전교육(환경, 사회적경제, 세계시민교육 등)의 참여학교 및 교육 이수자 수 ②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수

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
SDGs 5 성평등 보장	5.1	성평등 포용 사회를 실현한다	① 지역 성평등 지수 ② 성인지 교육의 프로그램 수
	5.2	성평등 사회 정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수 ② 가정폭력 신고 건 수
	5.3	성숙한 젠더 의식을 갖도록 한다	① 성 소수자 및 차별금지 교육의 프로그램 수
	5.4	여성의 사회 진출을 장려하고 조직 내 공평한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한다	① 관리직 공무원(5급 이상)의 여성 비율 ② 지방의회의 여성 정치인 비율
	5.5	남녀가 가사와 육아를 공평하게 분담한다	① 육아 휴직자의 성비 ② 남녀 가사노동 참여 정도
SDGs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6.1	모두를 위한 안전한 식수를 공평하게 공급한다	① 수돗물 음용 비율
	6.2	물 공급 취약지역을 포함한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충분하고 공평한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하수도 보급률
	6.3	물순환 개선, 물 재이용 활성화, 수질 오염 감소,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 물질 방류 최소화를 통해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건강성을 재고한다	① 빗물 저장고 설치용량 ② 비점오염 저류시설 확보 수(수량)
	6.4	물 부족 걱정이 없도록 물 공급을 안정화하고, 누수 없는 수돗물 공급으로 수자원의 효율화를 추구한다	① 상수도 누수 신고 건수 ② 상수도 유수율
	6.5	수질오염 총량제를 통한 통합적 수질 관리를 이행한다	① 새만금호 수질 등급(TOC기준) *TOC = 총 유기탄소량
	6.6	수생태계(습지, 강, 대수층, 호수)를 보호하고 복원한다	① 하천의 환경생태 유량 보유율
	6.7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지역 공동체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한다	① 지자체 수질 보전 활동 예산
SDGs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7.1	에너지 서비스에 대해 안정적이고 적정한 접근을 보장한다	① 가정용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
	7.2	국가에너지원에서 청정에너지 발전을 증대한다	① 재생에너지 생산량 (새만금 생산량 제외)

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비	7.3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킨다	① 지자체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건수
	7.4	운송 분야의 에너지 소비로 인한 대기 오염을 최소화한다	① 친환경 자동차 보급 대 수 *전기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 중심
SDGs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8.1	전북자치도 핵심 경제사업 추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정책을 실현한다.	① 동부권 균형발전사업(농 · 축산 식품, 관광) 예산 규모 ② 비정규직비율(%)
	8.2	지역 소득을 높이고, 고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① 1인당 GRDP(지역 내 총생산) ② 고용률
	8.3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청년 실업문제에 적극 대응한다	① 청년창업 건수 및 폐업률(%) *폐업 건수 등 ② 지역 내 공공기관 청년 의무 고용율 ③ 도내 청년 고용시 인센티브 지원금액
	8.4	공공적 가치의 지역 사업체를 활성화 되도록 지원한다	① 공공적 가치의 지역 사업체 활성화 지원 규모 ② 공공 구매의 지역업체 비율
	8.5	우수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① 지역 내 분야별 우수 강소기업 수
SDGs 9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 시설 구축	9.1	사회적 경제를 적극 지원하고 육성한다	① 사회적 경제 기업 수 ② 사회적 경제 기업 매출액 ③ 사회적 기업 육성프로그램 수
	9.2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스마트농법 보급을 확대한다	① 시설재배 관련 기술교육 이수자 수 ② 스마트농법 재배 농가의 수
	9.3	친환경 첨단교통 시스템을 구축한다	① 공유 모빌리티 수 ② AI 및 자동관리 시스템 구축
SDGs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10.1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시설과 복지혜택을 확대한다	① 저상버스 도입률(%) ② 인구 대비 전문 의료 인력 비율 ③ 장애인 평생학습센터 보급률
	10.2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취업 환경을 조성한다	①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비 ② 장애인 취업률(%)

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
	10.3	전라북도민의 성별, 세대 간 불평등을 해소한다	① 가정위탁,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지원예산 ② 육아휴직 이용률 ③ 아동·노인 학대 신고 건수 ④ 기업 규모별 남녀 비율
	10.4	경력단절 인력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① 출산 여성 취업률 ② 생산연령인구 재취업률
SDGs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11.1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한다	①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11.2	인구절벽을 대비한 출생률 제고 대책을 추진한다	① 신생아 출생률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규모 ③ 신혼 보금자리 지원예산 ④ 다함께 돌봄센터 증가 수
	11.3	생태도시 녹색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① 생태 보행로(둘레길, 생태탐방로) 확보율 ② 도시녹지율 ③ 도심 일몰제 공원 매수율 ④ 자전거 전용도로 증가율
	11.4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체계를 구축한다	① 재난대비 훈련 건수 ② 취약지 점검 횟수 ③ 복구 장비 보유량 ④ 재난관리 전문인력 확보 수 ⑤ 경계경보 안내 시스템
	11.5	초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맞춤형 생활복지를 향상한다	① 노인전문 요양시설 수 ② 노인여가 복지시설 수 ③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수
SDGs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2.1	자원 재순환 및 친환경 제품 소비 촉진 생활문화를 정착한다	① 친환경 제품 생산 증가율 ② 공공기관 친환경 제품 의무구매율 ③ 폐기물 발생량 대비 재활용률(%) ④ 자원 재순환을 위한 보상 예산
	12.2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를 확대한다	① 인구 1만 명당 로컬푸드 참여 농민 수 ② 학교급식 로컬푸드 구매 비중 ③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 ④ 잔류농약 허용치 위반 건수 ⑤ 먹거리 관련 위원회 운영 평가

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
	12.3	소비자 및 생산자 권익을 위한 공정거래를 정착한다	① 불공정거래 위반 건수 ② 소비자 피해 발생 건수 ③ CCM(소비자중심경영마크) 인증 건수
SDGs 13 기후변화와 대응	13.1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 및 적응 능력을 강화한다	① 농·축·수산 자연재해(폭염, 폭우, 태풍, 폭설, 한파 등) 보험 가입 지자체 지원액
	13.2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계획을 국가 및 지방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① 친환경 차량 충전소 수(완속/급속) ② 일반 주유소 수
	13.3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 등에 관한 교육, 인식 제고, 인적·제도적 역량을 강화한다	① 기후변화 대응 교육 참여자 수 ② 전북 생산된 저탄소 라벨링 제품 수
	13.4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하여 2℃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	①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비율(부문별)
SDGs 14 해양 생태계 보전	14.1	육상과 해양의 오염물질로부터 해양환경을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① 수질평가 지수 값을 이용한 새만금 외 해역 해수 수질 등급 [환경부기준(TOC, COD 등)]
	14.2	바다의 생태환경과 수산자원의 서식처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① 해양 개발 시설 면적(인공어초, 재생에너지, 골재채취 등)
	14.3	과학 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한 해양 산성화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한다	① 연안 산성화 전북 모니터링 횟수(연간)
	14.4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과도한 어업을 지양한다	① (연간) 불법 어구·시설물 감시 및 철거 횟수
	14.5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을 확대한다	① 해양보호구역 면적(㎢) ② 갯벌 면적
	14.6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다	① 전북 수산 종자 방류량 ② 2차 수산업 생산량
	14.7	소규모 영세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행위를 지원한다	① 조건 불리 수산직불제 수급률(%)

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
SDGs 15 육상 생태계 보전	15.1	육상과 내륙 담수의 생태계 다양화를 위해 보전과 복원 활동을 활성화한다	① 자연보호구역 지정 비율
	15.2	산림파괴 중단, 황폐화된 산림복원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강화한다	① 생태경관보전지역 증가면적 (지정 건수) ② 테마임도(산림레포츠, 산림휴양을 위한 임도) 누적 개설 길이
	15.3	물, 홍수, 개발 등으로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사방(토사 등이 무너져 떠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 면적
	15.4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멸종위기종을 보호한다	① 전북에 서식하는 동식물 법정보호종 수
	15.5	동식물 보호종의 포획과 밀거래를 없애도록 노력한다	① 밀렵 단속 수
	15.6	침입외래종 유입을 예방하고 이들의 육지 및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① 생태계 교란 동·식물 제거 예산액
	15.7	개발사업 등 인간활동으로 단절된 생태축의 복원과 생태네트워크 유지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① 생태통로 개설 건수
SDGs 16 평화·정의 ·포용	16.1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로 인한 범죄 발생 건수를 대폭 줄인다	① 강력범죄 발생 건수 ② 아동학대 신고 건수
	16.2	평등하고 기본적인 인권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에 집중한다	① 인권지수 개선도
	16.3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을 실현하여 정책의 전 과정에 시민 참여를 강화한다	① 주민참여 예산액 및 사업 수
SDGs 17 지구촌 협력 강화	17.1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파트너십을 활성화한다	① 시·군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이행계획 수립
	17.2	지속가능한 목표실천을 위한 국제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한다	① 국내외 지방정부 등과 교류 수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전북특별자치도에 맞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약 2년에 거쳐
17개 목표, 81개 세부목표, 153개 지표를 만들었다

Part

Ⅳ

시범지표 모니터링 결과

J-SDGs 2-2-2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출하량(톤)
J-SDGs 3-1-1 도민 1,000명 당 공공병상 수
J-SDGs 5-1-1 지역 성평등 지수
J-SDGs 8-3-1 청년 창업 건수 및 폐업률
J-SDGs 7-1-1 가정용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
J-SDGs 15-4-1 전북특별자치도에 서식하는 동식물 법정보호종 수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시범지표 모니터링 보고서

사람위원회

2-2-2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출하량(톤)

3-1-1 도민 1,000명 당 공공병상 수

5-1-1 지역 성평등 지수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사람위원회 시범지표 모니터링

2-2-2.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출하량(톤)

총 평

1. 목표 배경 및 목적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2030의 17개 목표(Goals) 중 두 번째 목표인 '기아종식'은 식량안보와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 지속가능한 농업을 강화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2번째 목표인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도 취약계층의 식량접근성을 보장하고 농가 경영안전망을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 구축 및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였다.
- 농업·환경·먹거리의 균형발전으로 농정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내는데 친환경농업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K-SDGs 2번째 목표인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5개의 세부목표와 11개의 지표를 작성하였다.
- SDGs 2번 목표 이행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세부목표 '2-2 친환경 농축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의 지표인 '2-2-2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출하량(톤)'의 데이터를 취합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17개의 목표가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역 구성원 및 이해당사자들의 관심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UN-SDGs	K-SDGs	J-SDGs			
		세부목표		지표	
02 기아종식	0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2-2	친환경 농축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2-2-2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출하량(톤)

〈표 12〉 UN-SDGs 체계 속의 K-SDGs와 J-SDGs 지표

2. 세부목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요약

- 세부목표 ‘2-2 친환경 농축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를 이행하기 위한 지표로 ‘2-2-2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출하량(톤)’을 알아보았다.
- 2023년 기준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출하량(톤)은 359,804.01톤으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친환경인증 농산물 출하량은 감소하는데 비해 친환경인증 축산물의 출하량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 친환경인증 농산물 출하량이 감소하는 이유는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제도 강화, 판로 부족, 가격경쟁력 심화, 소비자의 관심 감소, 용도변경, 로컬푸드 확산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 또한 친환경인증 축산물 출하량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기업형 축산, 육식 인구의 증가, 가격하락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3. 지표 이행 모니터링 개선 방향

- 친환경인증 농산물 출하량은 계속 감소하는데 반해 친환경인증 축산물 출하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 이는 농산물 소비량보다 육류 소비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축산농가의 대기업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 있어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의 확산을 위해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출하량(톤) 뿐만아니라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면적 및 출하량을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 또한 세부목표 ‘2-2 친환경 농축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를 알아보기 위해 청년농 지원사업 참여 수나 후계농업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수 등 필요한 지표를 수정·보완하여 전북도와 농식품인재개발원,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력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table>
<tr><th>목표</th><th colspan="2">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th></tr>
<tr><td>세부목표</td><td colspan="2">2-2. 친환경 농축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td></tr>
<tr><td>지표명</td><td colspan="2">2-2-2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출하량(톤)</td></tr>
<tr><td>필요성 및 의의</td><td colspan="2">- 농축산업·환경·먹거리 균형발전으로의 농정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내는 데 친환경 농축산업의 역할이 중요해짐
-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축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농축산업 환경 개선 및 보전이 필요함에 따라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출하량(톤)이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축산업의 확산을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td></tr>
<tr><td>지표</td><td>정의</td><td>▶ 친환경농축산물
-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말함
▶ 친환경 농산물의 범위
- 국가가 인증하고 있는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2종류임
• 유기농산물 : 유기농산물은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전환기간 : 최초 수확 전 3년)
•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농산물은 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 사용
▶ 친환경 축산물의 범위
- 가축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축사 조건과 축종별로 정해진 방목 조건을 준수하고 유기사료를 급여하면서 동물용 의약품에 의존하지 않고 면역기능을 증진하는 등 유기 사육 방법에 따라 생산한 축산물로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축산물 2종류임
• 유기축산물 : 환경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여 생산된 축산물
• 무항생제축산물 : 항생제·합성항균제·호르몬제가 첨가되지 않은 일반 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된 축산물</td></tr>
</table>

	▶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제도 - 정부가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하여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임을 인증해주는 제도	
산출 논리	1. 친환경 인증 농축산물 출하량(톤)을 입력	
자료원 또는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 국가통계포털	산정 방법: 친환경 인증 농축산물 출하량(톤)
작성 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통계 수집	

현황

(단위 : 톤)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	46,502.85	35,111	33,029	34,268	29,949	34,173.72	35,485.90	34,036.44	27,988.75	23,962
친환경 축산물 출하량	71,702.11	107,735	145,283	165,914.90	140,823	165,948.46	245,826.87	239,771.23	292,471.68	335,842.01
친환경 농축산물 출하량	118,204.96	142,846.00	178,312.00	200,182.90	170,772.00	200,122.18	281,312.77	273,807.67	320,460.43	359,804.01

〈표 16〉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출하량(톤)

○ 2023년 기준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출하량(톤)은 359,804.01톤

-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출하량(톤)은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을 합한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출하량과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을 합한 친환경인증 축산물의 출하량을 합한 양으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의 데이터를 확인함
-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해서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출하량(톤)은 감소하고 있지만, 친환경인증 축산물의 출하량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친환경인증 농산물 출하량이 감소하는 이유로는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제도 강화, 판로 부족, 가격경쟁력 심화, 소비자의 관심 감소, 용도변경, 로컬푸드 확산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친환경인증 축산물 출하량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기업형 축산, 육식 인구의 증가, 가격하락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준치	2023년 359,804.01톤	목표치	2030년까지 400,000톤	
	자료 경로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 인증정보 → 인증통계 2.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 유기·무항생제축산물인증현황(시도/시/군/구)		지표 관리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농산유통과 - 전북지속협 사람위원회 농업농촌분과

〈표 13〉 '2-2-2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출하량(톤)'에 대한 지표 모니터링 요약

1. 지표 개요

(1) 지표의 의미

가. 친환경 농축산업의 확산을 위한 지표

- 농축산업·환경·먹거리 균형발전으로의 농정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내는 데 친환경 농축산업의 역할이 중요해짐
-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축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농축산업 환경 개선 및 보전이 필요함에 따라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출하량(톤)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축산업의 확산을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

(2) 지표의 정의

가. 친환경농축산물

-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말함

나. 친환경 농산물의 범위

- 국가가 인증하고 있는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2종류임

다. 친환경 축산물의 범위

- 가축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축사 조건과 축종별로 정해진 방목 조건을 준수하고 유기사료를 급여하면서 동물용 의약품에 의존하지 않고 면역기능을 증진하는 등 유기 사육 방법에 따라 생산한 축산물로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축산물 2종류임

라.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제도

- 정부가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하여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임을 인증해주는 제도

※ 본 지표의 '친환경 농축산물'의 범위
• 친환경 농산물
- 유기농산물 : 유기농산물은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전환기간 : 최초 수확 전 3년)
-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농산물은 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 사용
• 친환경 축산물
- 유기축산물 : 환경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여 생산된 축산물
- 무항생제축산물 : 항생제·합성항균제·호르몬제가 첨가되지 않은 일반 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된 축산물

〈표 4〉 친환경 농축산물의 범위

(3) 자료 수집 방법

가. 자료 수집 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농산물, 축산물 입력

(4) 지표산출 방법

가.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출하량(톤)

-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출하량(톤)은 다음의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함

※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출하량(톤) 산식
• 친환경인증 농산물 출하량 + 친환경인증 축산물 출하량 =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출하량
- 친환경인증 농산물 출하량 = 유기농산물 출하량+ 무농약 농산물 출하량 (2015년 이전, 저농약 농산물 포함)
- 친환경인증 축산물 출하량 = 유기축산물 출하량 + 무항생제축산물 출하량

〈표 18〉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출하량(톤) 산식

2. 지표 분석 결과

(1)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출하량(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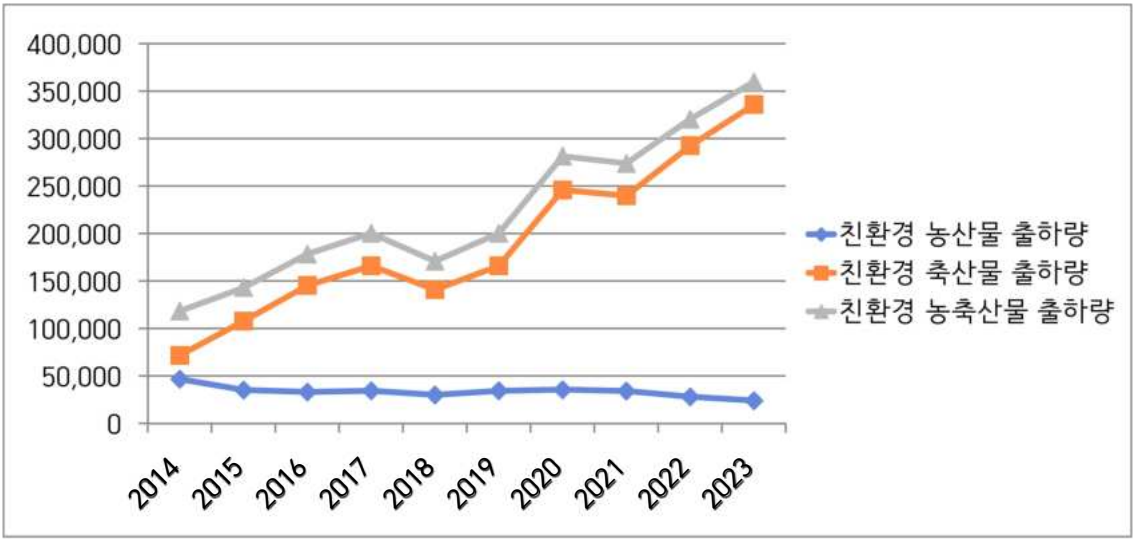
가. 2023년 기준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출하량(톤)은 359,804.01톤

-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출하량(톤)은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을 합한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출하량과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을 합한 친환경인증 축산물의 출하량을 합한 양으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의 데이터를 확인함
-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해서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출하량(톤)은 감소하고 있지만, 친환경인증 축산물의 출하량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친환경인증 농산물 출하량이 감소하는 이유로는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제도 강화, 판로 부족, 가격경쟁력 심화, 소비자의 관심 감소, 용도변경, 로컬푸드 확산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친환경인증 축산물 출하량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기업형 축산, 육식 인구의 증가, 가격하락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단위 : 톤)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	46,502.85	35,111	33,029	34,268	29,949	34,173.72	35,485.9	34,036.44	27,988.75	23,962
친환경 축산물 출하량	71,702.11	107,735	145,283	165,914.9	140,823	165,948.46	245,826.87	239,771.23	292,471.68	335,842.01
친환경 농축산물 출하량	118,204.96	142,846	178,312	200,182.9	170,772	200,122.18	281,312.77	273,807.67	320,460.43	359,804.01

〈표 9〉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출하량(톤)



〈그림 42〉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출하량(톤)

(2) 2030년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출하량(톤) 개선 목표

○ 기준치

-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출하량(톤)인 2023년을 기준으로 함.
- **(기준)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출하량(톤) : 359,804.01톤**

○ 목표치

- 2023년 친환경인증 농산물 출하량(톤)은 23,962톤으로 2022년 대비 4,026.75톤이 감소함.
- 2023년 친환경인증 축산물 출하량(톤)은 335,842.01톤으로 2022년 대비 43,370.33톤이 증가함.
- 친환경인증 농산물과 축산물 출하량의 차이를 줄이고 균형있는 농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인증 농산물 출하량을 증가시키고, 축산물 출하량은 유지 내지 감소시켜야 함.
- **(목표) 2030년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출하량(톤) : 400,000톤**

◆ 용어 정의

친환경 농산물

-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말함

3-1-1. 도민 1,000명당 공공병상 수

총 평

1. 목표 배경 및 목적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2030의 17개 목표(Goals) 중 세 번째 목표인 '건강과 웰빙'은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정되었다.
-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3번째 목표인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도 모든 연령의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며, 교통사고 등 인명사고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고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노력을 하기위해 목표를 설정하였다.
- 전북 도민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선도적인 전북형 공공의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K-SDGs 3번째 목표인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7개의 세부목표와 12개의 지표를 작성하였다.
- SDGs 3번 목표 이행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세부목표 '3-1 선도적인 전북형 공공의료 체계를 마련한다'의 지표인 '3-1-1 도민 1,000명당 공공병상 수'의 데이터를 취합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17개의 목표가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역 구성원 및 이해당사자들의 관심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UN-SDGs	K-SDGs	J-SDGs			
		세부목표		지표	
03 건강과 웰빙	0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3-1	선도적인 전북형 공공의료 체계를 마련한다	3-1-1	도민 1,000명 당 공공병상 수

〈표 20〉 UN-SDGs 체계 속의 K-SDGs와 J-SDGs 지표

2. 세부목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요약

- 세부목표 ‘3-1 선도적인 전북형 공공의료 체계를 마련한다’를 이행하기 위한 지표로 ‘3-1-1 도민 1,000명당 공공병상 수’를 알아보았다.
- 2023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의료기관 공공병상 수는 3,273개로 전북도민 총 인구 1,754,757명 중 도민 1,000명 당 공공병상 수는 1.87개로 나타났다.
- 시도별 공공의료기관 공공병상 수는 2016년에 의료 관련 감염·예방·관리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소폭 상승하였다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소폭 감소하였다.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감염·예방·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소폭 상승하였다가 2023년에는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 또한 전북과 인구 수가 비슷한 전라남도는 공공병상 수가 2023년 4,724개로 더 많아 도민 1,000명당 공공병상 수는 2.62개였고, 전북보다 인구 수가 적은 강원특별자치도는 3,172개로 조금 적었지만 도민 1,000명당 공공병상 수는 2.08개로 전북보다 높은 수를 나타내었다.

3. 지표 이행 모니터링 개선 방향

- 전북특별자치도 인구 수가 9년세 10만명이 넘게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170만명이 넘는 인구가 있고, 전라남도와 강원특별자치도 등 타 광역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도민 1,000명당 공공병상 수가 낮게 나타나 감염·예방·관리 대책을 개선하고자 한다.

<table>
<tr><td>목표</td><td colspan="4">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td></tr>
<tr><td>세부목표</td><td colspan="4">3-1. 선도적인 전북형 공공의료 체계를 마련한다</td></tr>
<tr><td>지표명</td><td colspan="4">3-1-1 도민 1,000명당 공공병상 수</td></tr>
<tr><td>필요성 및 의의</td><td colspan="4">-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저소득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및 급격한 국민의료비 증가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료원의 확충 필요성이 높아짐
- 전북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의 인프라를 강화해야함
- 이를 위하여 공공병상의 수를 조사하여 의료공공서비스의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td></tr>
<tr><td rowspan="5">지표</td><td>정의</td><td colspan="3">▶ 공공의료기관의 정의
-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함
▶ 공공의료기관의 범위
-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공공보건기관(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을 제외한 공공의료기관</td></tr>
<tr><td>산출 논리</td><td colspan="3">1. 국가통계포털에서 시도별 공공의료기관 병상 현황과 전북특별자치도 총 인구 수를 파악
2.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1,000명당 공공병상 수 산출</td></tr>
<tr><td>자료원 또는 출처</td><td>• 국가통계포털
• 국립중앙의료원</td><td>산정 방법</td><td>공공병상 ÷ 전북특별자치도민 총 인구수 × 1,000명</td></tr>
<tr><td>작성 방법</td><td colspan="3">국가통계포털의 시도별 공공의료기관 병상 현황을 통해 통계 수집</td></tr>
<tr><td>현황</td><td colspan="3">(단위 : 개수, 명)
<table><tr><th>구분</th><th>2015</th><th>2016</th><th>2017</th><th>2018</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r><tr><td>공공병상 수(개)</td><td>3,365</td><td>3,508</td><td>3,445</td><td>3,466</td><td>3,458</td><td>3,554</td><td>3,515</td><td>3,503</td><td>3,273</td></tr><tr><td>전북 총 인구 수(명)</td><td>1,869,711</td><td>1,864,791</td><td>1,854,607</td><td>1,836,832</td><td>1,818,917</td><td>1,804,104</td><td>1,786,855</td><td>1,769,607</td><td>1,754,757</td></tr><tr><td>도민 1,000명당 공공병상 수(개)</td><td>1.80</td><td>1.88</td><td>1.86</td><td>1.89</td><td>1.90</td><td>1.97</td><td>1.97</td><td>1.98</td><td>1.87</td></tr></table>
〈표 22〉 도민 1,000명당 공공병상 수</td></tr>
</table>

<table>
<tr><td></td><td></td><td colspan="4">○ 2023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의료기관 공공병상 수는 3,273개로 전북도민 총 인구 1,754,757명 중 도민 1,000명 당 공공병상 수는 1.87개로 나타남
- 시도별 공공의료기관 공공병상 수는 2016년에 의료 관련 감염·예방·관리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소폭 상승하였다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소폭 감소하였음
- 특이사항으로는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감염·예방·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소폭 상승하였다가 2023년에는 최저치를 기록함
- 또한 전북과 인구 수가 비슷한 전라남도는 공공병상 수가 2023년 4,724개로 더 많아 도민 1,000명당 공공병상 수는 2.62개였고, 전북보다 인구 수가 적은 강원특별자치도는 3,172개로 조금 적었지만 도민 1,000명당 공공병상 수는 2.08개로 전북보다 높은 수를 나타냄</td></tr>
<tr><td></td><td>기준치</td><td>2023년 1.87개</td><td>목표치</td><td colspan="2">2030년까지 2.62개</td></tr>
<tr><td></td><td>자료 경로</td><td>1.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 시도별 공공의료기관 병상 현황, 주민등록인구</td><td>지표 관리 부서</td><td colspan="2">-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지속협 사람위원회 사회복지분과</td></tr>
</table>

〈표 21〉 '3-1-1 도민 1,000명 당 공공병상 수'에 대한 지표 모니터링 요약

1. 지표 개요

(1) 지표의 의미

가. 선도적인 전북형 공공의료 체계 마련

-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저소득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및 급격한 국민의료비 증가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료원의 확충 필요성이 높아짐
- 전북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의 인프라를 강화해야함
- 이를 위하여 공공병상의 수를 조사하여 의료공공서비스의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지표의 정의

가. 공공의료기관의 정의

-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함

나. 공공의료기관의 범위

-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공공보건기관(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을 제외한 공공의료기관

(3) 자료 수집 방법

가. 자료 수집 방법

- 국가통계포털에서 시도별 공공의료기관 병상 현황과 주민등록인구 입력

(4) 지표산출 방법

가. 도민 1,000명당 공공병상 수

- 국가통계포털에서 시도별 공공의료기관 병상 현황과 전북특별자치도 인구 수를 파악
-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1,000명 당 공공병상 수 산출

※도민 1,000명당 공공병상 수 산출방식
공공병상 ÷ 전북특별자치도민 총 인구수 × 1,000명

〈표 11〉 도민 1,000명당 공공병상 수 산식

2. 지표 분석 결과

(1) 도민 1,000명당 공공병상 수

가. 2023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의료기관 공공병상 수는 3,273개로 전북도민 총 인구 1,754,757명 중 도민 1,000명 당 공공병상 수는 1.87개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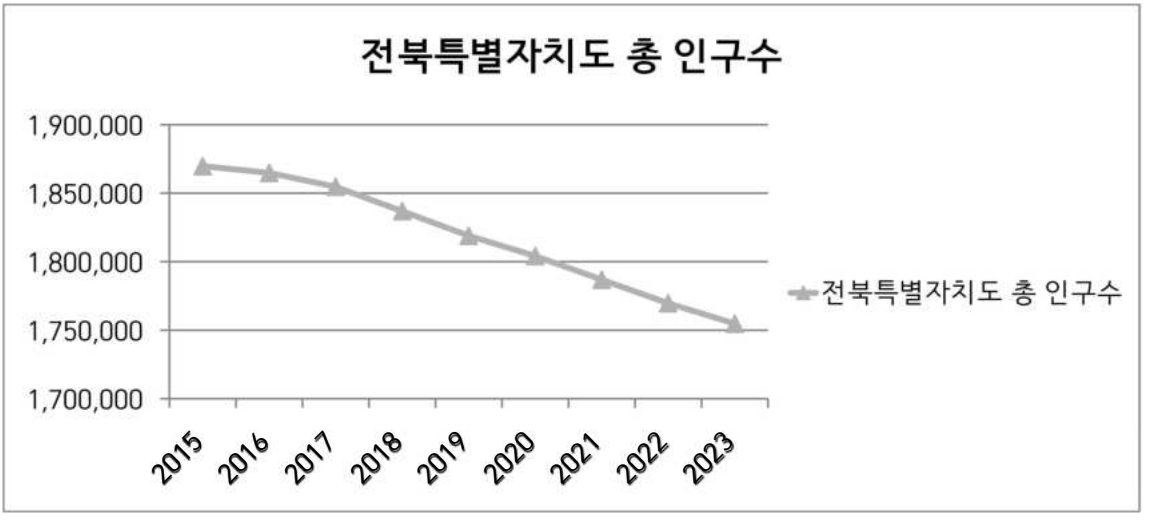
- 시도별 공공의료기관 공공병상 수는 2016년에 의료 관련 감염·예방·관리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소폭 상승하였다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소폭 감소하였음
- 특이사항으로는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감염·예방·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소폭 상승하였다가 2023년에는 최저치를 기록함
- 또한 전북과 인구 수가 비슷한 전라남도는 공공병상 수가 2023년 4,724개로 더 많아 도민 1,000명당 공공병상 수는 2.62개였고, 전북보다 인구 수가 적은 강원특별자치도는 3,172개로 조금 적었지만 도민 1,000명당 공공병상 수는 2.08개로 전북보다 높은 수를 나타냄

(단위 : 개수,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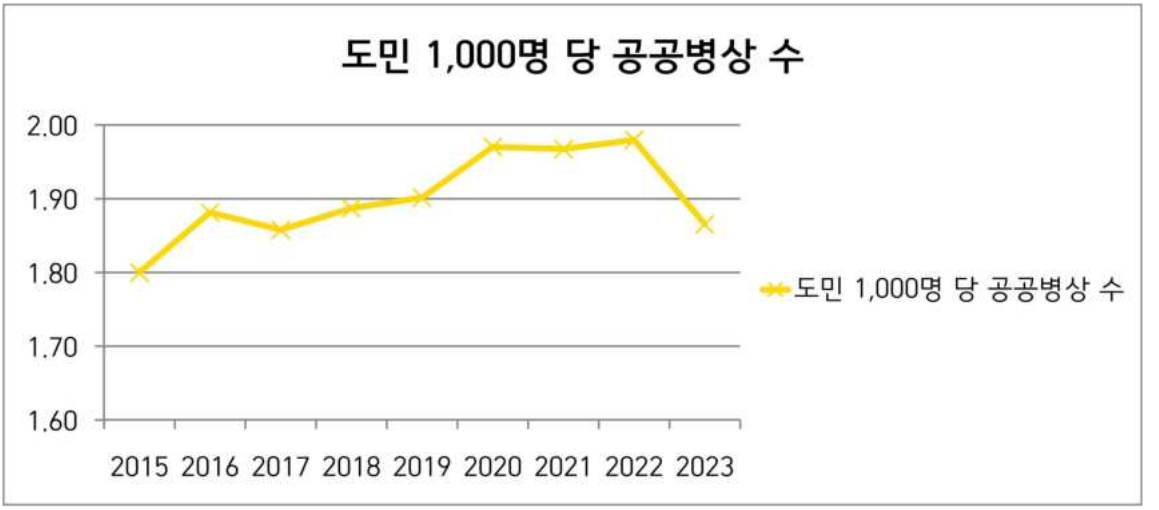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공공병상 수(개)	3,365	3,508	3,445	3,466	3,458	3,554	3,515	3,503	3,273
전북 총 인구 수(명)	1,869,711	1,864,791	1,854,607	1,836,832	1,818,917	1,804,104	1,786,855	1,769,607	1,754,757
도민 1,000명당 공공병상 수(개)	1.80	1.88	1.86	1.89	1.90	1.97	1.97	1.98	1.87

〈표 24〉 도민 1,000명 당 공공병상 수

〈그림 43〉 시도별 공공의료기관 공공병상 수



〈그림 44〉 전북특별자치도 총 인구 수



〈그림 45〉 도민 1,000명당 공공병상 수

(2) 2030년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1,000명당 공공병상 수 개선 목표

○ **기준치**

-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민 1,000명당 공공병상 수인 2023년을 기준으로 함
- **(기준) 2023년 도민 1,000명당 공공병상 수 : 1.87개**

○ **목표치**

- 2023년 전라남도 도민 1,000명당 공공병상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을 목표함
- **(목표) 도민 1,000명당 공공병상 수 : 2.62개**

5-1-1. 지역 성평등 지수

총 평

1. 목표 배경 및 목적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2030의 17개 목표(Goals) 중 다섯 번째 목표인 '성평등 보장'은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을 위해 설정되었다.
-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5번째 목표인 '성평등 보장'도 모든 차별 및 인신매매, 성적착취 등을 철폐하고 돌봄 및 가사노동에 가치를 부여하며 여성의 리더십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였다.
-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비교·분석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성평등 포용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의 성평등 지수를 알아보고 성평등 지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K-SDGs 5번째 목표인 '성평등 보장'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5개의 세부목표와 9개의 지표를 작성하였다.
- SDGs 5번 목표 이행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세부목표 '5-1 성평등 포용 사회를 실현한다'의 지표인 '5-1-1 지역 성평등 지수'의 데이터를 취합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17개의 목표가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역 구성원 및 이해당사자들의 관심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UN-SDGs	K-SDGs	J-SDGs			
		세부목표		지표	
05 성평등 보장	05 성평등 보장	5-1	성평등 포용사회를 실현한다	5-1-1	지역 성평등 지수

〈표 16〉 UN-SDGs 체계 속의 K-SDGs와 J-SDGs 지표

2. 세부목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요약

- 세부목표 ‘5-1 성평등 포용 사회를 실현한다’를 이행하기 위한 지표로 ‘5-1-1 지역 성평등 지수’을 알아보았다.
- 지역 성평등 지수가 2024년부터 개편되어, 개편 지역 성평등 지수로 17개 광역시도를 측정하여 2023년과 다른 결과 값을 갖게 되면서 2023년 지표 모니터링 결과에서는 2021년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하위권이었지만, 2024년 지표 모니터링 결과에서는 2021년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중하위권으로 상승하였다.
- 2016년에는 성평등 상위지역이었던 전북특별자치도가 2021년에는 하위권으로 떨어진 이유는 8개 분야 중 상위권에 속한 분야는 경제활동 분야가 유일하며, 하위권에 속하는 분야는 교육·직업훈련과 복지분야였다.
- 특히, 하위권에 속한 지표는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평균교육연수, 기초생활수급자, 스테레스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가족관계만족도, 육아휴직자이다.
- 전북특별자치도의 전년 대비 종합 등급 변화는 없지만, 복지, 보건, 문화·정보 3개분야는 순위가 상승한 데 반해, 경제활동, 의사결정, 안전, 가족 4개 분야는 순위가 하락했다.

3. 지표 이행 모니터링 개선 방향

- 지표별로는 2022년 기준 성평등 점수가 30점 미만인 지표가 없었다. 이에 전년대비 점수가 하락한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기초생활 수급자, 스테레스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가족관계만족도, 여가시간 등의 하락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 또한, 2022년 기준 성평등 개선 수준을 보면 2017년도와 비교하여 전북특별자치도는 0.9점(전국 평균 3.9점 개선)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개선을 보여 개선 점수를 상향시켜야 한다.
-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한 지표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성평등 개선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table>
<tr><th>목표</th><th colspan="4">5. 성평등 보장</th></tr>
<tr><td>세부목표</td><td colspan="4">5-1. 성평등 포용 사회를 실현한다</td></tr>
<tr><td>지표명</td><td colspan="4">5-1-1 지역 성평등 지수</td></tr>
<tr><td>필요성 및 의의</td><td colspan="4">-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비교·분석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성평등 포용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의 성평등 지수를 알아보고 성평등 지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
- 지역의 성평등 수준과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 양성평등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하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
- 지역별·영역별·분야별 성평등 수준 비교를 통해 성평등 수준이 취약한 영역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하여 지역 성평등 촉진
- 양성평등 정책의 모니터링, 지역 정책의 실효성 점검 및 정책 우선순위 설정 등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며, 양성평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국민의 인식 제고</td></tr>
<tr><td rowspan="3">지표</td><td>정의</td><td colspan="3">▶성평등 지수
-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의미합니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1항). 성평등지수는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는가를 판단·평가하며, 이를 토대로 성 평등을 개선 시키고자 하는 정책 도구입니다

▶ 지역 성평등 지수
- 시도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2011년 개발된지수로,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성평등 지표를 통해 계산하는 지수화 된 값입니다</td></tr>
<tr><td>산출 논리</td><td colspan="3">- 지역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3항에 의해 국가성평등지수를 기초로 분야와 지표가 구성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표가 구성됨</td></tr>
<tr><td>자료원 또는 출처</td><td>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시스템</td><td>산정 방법</td><td>1단계 : 지표의 표준화와 성비로 전환
2단계 : 지표별 성비를 대상 인구로 조정
3단계 : 분야별 지수 값 산정
4단계 : 지역 성평등지수 산정</td></tr>
</table>

	작성 방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시스템을 통해 통계 수집
	현황	**1.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성평등 지수 수준**(통계생산 연도기준)

등급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성평등 상위지역	대구	대구	광주	대전	대전	광주
	대전	부산	대전	부산	부산	대전
	전북	서울	부산	서울	서울	서울
	제주	제주	세종	세종	세종	세종
	-	-	제주	제주	제주	제주
성평등 중상위 지역	강원	경기	경기	광주	경기	경기
	광주	대전	대구	대구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서울	울산	대구	부산
	서울	충북	충북	인천	충북	인천
성평등 중하위 지역	경기	강원	강원	강원	강원	강원
	울산	광주	울산	경기	울산	**전북**
	인천	인천	인천	**전북**	인천	충남
	충북	**전북**	**전북**	충북	**전북**	충북
성평등 하위지역	경남	경남	경남	경남	경남	경남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전남	전남	전남	전남	전남	울산
	충남	충남	충남	충남	충남	전남

〈표 27〉 지역별 지역 성평등 지수 수준

- 2017년 : 3위 / 성평등 상위 지역
- 2018년 : 12위 / 성평등 중하위 지역
- 2019년 : 13위 / 성평등 중하위 지역
- 2020년 : 12위 / 성평등 중하위 지역
- 2021년 : 13위 / 성평등 중하위 지역
- 2022년 : 11위 / 성평등 중하위 지역

2.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종합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7	상위권	64.7	12	91.2	1	72.2	13
2018	중하위권	66.6	12	89.2	1	70.5	16
2019	중하위권	68.1	12	87.9	4	71.4	17
2020	중하위권	68.6	12	87.1	8	73.7	14
2021	중하위권	69.8	11	84.0	17	74.9	11
2022	중하위권	70.4	10	83.6	17	77.7	8
2021년 대비	동일	0.6	1	-0.4	0	2.8	3
2017년 대비	2단계 하락	5.7	2	-7.6	-16	5.5	5

〈표 28〉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2023년 지역성평등보고서 기준

○ 전북특별자치도 종합등급은 2022년 중하위권으로 2021년과 동일

- 지역 성평등 지수가 2024년부터 개편되어, 개편 지역 성평등 지수로 17개 광역시도를 측정하여 2023년과 다른 결과 값을 갖게 되면서 2023년 지표 모니터링 결과에서는 2021년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하위권이었지만, 2024년 지표 모니터링 결과에서는 2021년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중하위권으로 상승하였다.
- 2016년에는 성평등 상위지역이었던 전북특별자치도가 2021년에는 하위권으로 떨어진 이유는 8개 분야 중 상위권에 속한 분야는 경제활동 분야가 유일하며, 하위권에 속하는 분야는 교육·직업훈련과 복지분야였다.
- 특히, 하위권에 속한 지표는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평균교육연수, 기초생활수급자, 스테레스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가족관계만족도, 육아휴직자이다.
- 전북특별자치도의 전년 대비 종합 등급 변화는 없지만, 복지, 보건, 문화·정보 3개분야는 순위가 상승한 데 반해, 경제활동, 의사결정, 안전, 가족 4개 분야는 순위가 하락했다.
- 지표별로는 2022년 기준 성평등 점수가 30점 미만인 지표가 없었다. 이에 전년대비 점수가 하락한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기초생활 수급자, 스테레스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가족관계만족도, 여가시간 등의 하락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적 개선 노력이 요구됨 - 또한, 2022년 기준 성평등 개선 수준을 보면 2017년도와 비교하여 전북특별자치도는 0.9점(전국 평균 3.9점 개선) 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개선을 보임 -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한 지표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성평등 개선 속도가 빨라질 것임			
	기준치	2022년 종합점수 77.23점	목표치	2030년까지 종합점수 78.45점	
	자료 경로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시스템(gsis.kwdi.re.kr) → 주요통계 → 성평등지수 → 지역 성평등지수		지표 관리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 전북지속협 사람위원회 교육성평등분과

〈표 26〉 '5-1-1 지역 성평등 지수'에 대한 지표 모니터링 요약

1. 지표 개요

(1) 지표의 의미

가. 지역 성평등 지수 향상을 위한 지표

-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비교·분석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성평등 포용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의 성평등 지수를 알아보고 성평등 지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
- 지역의 성평등 수준과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 양성평등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하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
- 지역별·영역별·분야별 성평등 수준 비교를 통해 성평등 수준이 취약한 영역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하여 지역 성평등 촉진
- 양성평등 정책의 모니터링, 지역 정책의 실효성 점검 및 정책 우선순위 설정 등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며, 양성평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국민의 인식 제고

(2) 지표의 정의

가. 성평등 지수

-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의미합니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1항). 성평등지수는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는가를 판단·평가하며, 이를 토대로 성평등을 개선 시키고자 하는 정책 도구임.

나. 지역 성평등 지수

- 시도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2011년 개발된 지수로, 국가 성평등 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성평등 지표를 통해 계산하는 지수화 된 값임.

※ 본 지표의 '지역 성평등 지수'의 범위
- 성평등한 사회참여 :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 여성의 인권·복지 : 복지, 보건, 안전
- 성평등 의식·문화 : 가족, 문화·정보

〈표 29〉 지역 성평등 지수

(3) 자료 수집 방법

가. 자료 수집 방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시스템에서 지역 성평등 지수보고서로 확인

(4) 지표산출 방법

가. 지역 성평등 지수

- 지역 성평등 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3항에 의해 국가성평등지수를 기초로 분야와 지표가 구성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표가 구성됨

※ 지역 성평등 지수 산식
1단계 : 지표의 표준화와 성비로 전환
2단계 : 지표별 성비를 대상 인구로 조정
3단계 : 분야별 지수 값 산정
4단계 : 지역 성평등지수 산정

〈표 30〉 지역 성평등 지수 산식

2. 지표 분석 결과

(1) 지역 성평등 지수

가. 지역 성평등 지수의 분야별 지표

정책영역	분야	지표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의사결정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직 비율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교육·직업 훈련	평균 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여성의 인권·복지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보건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안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성평등 의식·문화	가족	가사노동시간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육아휴직자
	문화·정보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표 31〉 지역 성평등 지수의 분야별 지표

나. 지역별 지역 성평등 지수 수준(통계생산 연도기준)

등급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성평등 상위지역	대구	대구	광주	대전	대전	광주
	대전	부산	대전	부산	부산	대전
	전북	서울	부산	서울	서울	서울
	제주	제주	세종	세종	세종	세종
	-	-	제주	제주	제주	제주
성평등 중상위 지역	강원	경기	경기	광주	경기	경기
	광주	대전	대구	대구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서울	울산	대구	부산
	서울	충북	충북	인천	충북	인천
성평등 중하위 지역	경기	강원	강원	강원	강원	강원
	울산	광주	울산	경기	울산	**전북**
	인천	인천	인천	**전북**	인천	충남
	충북	**전북**	**전북**	충북	**전북**	충북
성평등 하위지역	경남	경남	경남	경남	경남	경남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전남	전남	전남	전남	전남	울산
	충남	충남	충남	충남	충남	전남

〈표 32〉 지역별 지역 성평등 지수 수준

- 2017년 : 3위 / 성평등 상위 지역
- 2018년 : 12위 / 성평등 중하위 지역
- 2019년 : 13위 / 성평등 중하위 지역
- 2020년 : 12위 / 성평등 중하위 지역
- 2021년 : 13위 / 성평등 중하위 지역
- 2022년 : 11위 / 성평등 중하위 지역

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수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종합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7	상위권	64.7	12	91.2	1	72.2	13
2018	중하위권	66.6	12	89.2	1	70.5	16
2019	중하위권	68.1	12	87.9	4	71.4	17
2020	중하위권	68.6	12	87.1	8	73.7	14
2021	중하위권	69.8	11	84.0	17	74.9	11
2022	중하위권	70.4	10	83.6	17	77.7	8
2021년 대비	동일	0.6	1	-0.4	0	2.8	3
2017년 대비	2단계 하락	5.7	2	-7.6	-16	5.5	5

〈표 33〉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수위

라. 전북특별자치도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등급		2020년 중하위권 → 2021년 중하위권 → 2022년 중하위권
	분야	상위	경제활동
		하위	교육·직업훈련, 복지
	지표	상위	경제활동참가율, 관리자 비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공적연금가입자, 건강검진 수검률,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가사노동시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인터넷 이용률
		하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평균 교육연수, 기초생활수급자, 스트레스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가족관계만족도, 육아휴직자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 전북특별자치도는 등급변화가 없음 - 복지, 보건, 문화·정보 분야는 순위가 상승했으나, 경제활동 의사결정, 안전, 가족 분야는 순위가 하락함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 2022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 없음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관리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스트레스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가족관계만족도, 여가 시간

〈표 34〉 전북특별자치도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 전북특별자치도 종합등급은 2022년 중하위권으로 2021년과 동일

- 지역 성평등 지수가 2024년부터 개편되어, 개편 지역 성평등 지수로 17개 광역시도를 측정하여 2023년과 다른 결과 값을 갖게 되면서 2023년 지표 모니터링 결과에서는 2021년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하위권이었지만, 2024년 지표 모니터링 결과에서는 2021년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중하위권으로 상승함.
- 2016년에는 성평등 상위지역이었던 전북특별자치도가 2021년에는 하위권으로 떨어진 이유는 8개 분야 중 상위권에 속한 분야는 경제활동 분야가 유일하며, 하위권에 속하는 분야는 교육·직업훈련과 복지분야임.
- 특히, 하위권에 속한 지표는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평균교육연수, 기초생활수급자, 스테레스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가족관계만족도, 육아휴직자임.
- 전북특별자치도의 전년 대비 종합 등급 변화는 없지만, 복지, 보건, 문화·정보 3개분야는 순위가 상승한 데 반해, 경제활동, 의사결정, 안전, 가족 4개 분야는 순위가 하락함.
- 지표별로는 2022년 기준 성평등 점수가 30점 미만인 지표가 없었다. 이에 전년대비 점수가 하락한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기초생활 수급자, 스테레스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가족관계만족도, 여가시간 등의 하락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 노력이 요구됨.
- 또한, 2022년 기준 성평등 개선 수준을 보면 2017년도와 비교하여 전북특별자치도는 0.9점(전국 평균 3.9점 개선) 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개선을 보임.
-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한 지표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성평등 개선 속도가 빨라질 것임.

(2) 2030년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성평등 지수 개선 목표

○ **기준치**

-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성평등 지수인 2022년을 기준으로 함
- **(기준) 2022년 지역별 성평등 종합점수 : 77.23점(중하위권)**

○ **목표치**

- 2022년 중상위권 지역의 성평등 종합점수는 77.86~79.03점이었음
- 전북특별자치도가 중하위권에서 한 단계 상승한 중상위권으로 가기 위해 중상위권 지역의 평균 성평등 종합점수인 78.45점을 목표로 함
- **(목표) 지역 성평등 종합점수 : 78.45점(중상위권)**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시범지표 모니터링 보고서

경제위원회

8-1-2 비정규직비율(%)

8-3-1 청년 창업 건수 및 폐업률(%)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경제위원회 시범지표 모니터링

8-1-2. 비정규직비율(%) (+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조지표 활용)

총평

1. 목표 배경 및 목적

-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임. 국제 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나라 중 하나임.
-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도 비정규직 규모가 2위(2022년 기준), 3위(2023년 기준), 3위(2024년 기준) 수준을 보이고 있음. 매년 제주도, 강원도 등과 하위권 다툼을 하고 있음.
- 결국 질 낮은 일자리가 많다 보니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인구는 줄어들고(지역소멸), 고령화는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 과거 기업 유치 사례를 살펴봐도 일자리의 양에만 집중한 나머지 일자리의 질의 중요성을 놓친 경험들이 있음.
- 비정규직 일자리의 비중을 낮추고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함. 이를 위해 비정규직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전국 평균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표관리가 요구됨.

UN-SDGs	J-SDGs		
	세부목표	지표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8-1 전북특별자치도 핵심 경제사업 추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정책을 실현한다.	8-1-2	비정규직비율(%)

〈표 35〉 UN-SDGs 체계 속의 J-SDGs 지표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비율을 모니터링하는 것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율을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에 의하면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오히려 늘어난 상황임. 공공부문에서 조차도 상시 업무로 비정규직 인원을 많이 고용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임.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부문(본청,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대상 비정규직 규모의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축소 방안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음.

2. 세부목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요약

• 2024년 기준 전국 비정규직 비중은 38.2%, 전북은 42.6%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비정규직 비중을 보임.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비율을 모니터링하는 것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율을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3. 지표 이행 모니터링 개선 방향

• 전국 단위 비정규직 비중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되기 때문에 별도로 통계 모니터링을 위한 개선 방향은 없음.

목표	8.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세부 목표	8-1. 전북특별자치도 핵심 경제사업 추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정책을 실현한다.	
지표명	8-1-2 비정규직비율(%)	
필요성 및 의 의	-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도 비정규직 규모가 2위(2022년 기준), 3위(2023년 기준), 3위(2024년 기준), 수준을 보이고 있음. 매년 제주도, 강원도 등과 하위권 다툼을 하고 있음. 결국 질 낮은 일자리가 많다 보니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인구는 줄어들고(지역소멸), 고령화는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 비정규직 일자리의 비중을 낮추고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함. 이를 위해 비정규직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전국 평균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표관리가 요구됨.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비율을 모니터링하는 것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율을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지 표	정의	-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통상 임시직근로자(temporary worker)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임시직근로자에는 유기계약근로자(worker with fixed-term contract),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호출근로자(on-call worker) 등을 포함 -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지속됨에 따라 '02.7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에서 고용 형태에 따른 분류 기준에 합의 ※비정규직은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및 비전형근로자로 정의 - 한시적근로자(고용의 지속성)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기간제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 - 시간제근로자(근로 시간) : 근로 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 - 비전형근로자(근로 제공 방식) : 파견 · 용역근로자 · 특수고용 종사자 · 가정내 근로자(재택, 가내)·일일(호출) 근로자
	산출 논리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매년 8월)' 결과를 활용 - 전북특별자치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율에 대한 자체 조사 데이터 활용

	자료원 또는 출처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매년 8월)	산정 방법	$\frac{\text{비정규직 근로자(천명)}}{\text{임금근로자(천명)}} \times 100(\%)$	
	작성 방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매년 8월)' 결과를 활용			
	현황	2024년 기준 전국에서 3번째로 비정규직 비중이 높음.			
	기준치	전북 42.6%, 전국 평균 38.2%	목표치	10년 내 전국 평균(4.4%), 매년 0.4% 감소를 목표	
	자료 경로	- 자료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통계승인번호101004)결과」(매년 8월) - 최근 갱신일 : 2024-08-14(입력예정일 : 2024-11-30) - 공표 주기(1년)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지표 관리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일자리민생경제과 노사협력팀 - 전북지속협 경제위원회	

〈표 36〉 '8-1-2 비정규직비율(%)'에 대한 지표 모니터링 요약

1. 지표 개요

(1) 지표의 의미

-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통상 임시직근로자(temporary worker)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임시직근로자에는 유기계약근로자(worker with fixed-term contract),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호출근로자(on-call worker) 등을 포함
-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지속됨에 따라 '02.7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에서 고용 형태에 따른 분류 기준에 합의

(2) 지표의 정의

- 비정규직은 고용 형태를 기준으로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및 비전형근로자로 정의

※ 한시적근로자(고용의 지속성)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기간제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

※ 시간제근로자(근로 시간) : 근로 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

※ 비전형근로자(근로 제공 방식) : 파견·용역근로자·특수고용 종사자·가정내근로자(재택, 가내)·일일(호출) 근로자

(3) 자료 수집 방법

가. 통계청 데이터 및 자체 조사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매년 8월)' 결과를 활용
- 전북특별자치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율에 대한 자체 조사 데이터 활용

나. 제공 데이터 개요

- 지역구분 : 비정규직 비중은 전북특별자치도. 보조지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지표는 전북특별자치도(본청, 사업소, 출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비중.
- 제공시기 : 연간
- 비정규직구분 : 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2. 재택/가내 근로자, 3. 파견근로자, 4. 용역근로자, 5. 일일근로자, 6. 단시간 근로자, 7. 기간제 근로자, 8.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 근로자, 9. 무기계약직 등으로 구분 가능
- 성별구분 : 남성/여성
- 연령구분 : 연령 구분은 20대/30대/40대/50대/60대/70대 이상
- 비정규직연수 : 보조지표의 경우, "비정규직 평균 근속년수__년"으로 조사 가능

(4) 지표산출 방법

가. 고용 형태 평가

-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 또는 매년 공개되는 통

계청의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비율(%) 통계자료로 조사함.

- 비정규직비율(%)은 다음의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함.

※ 비정규직비율 산식 = $\frac{\text{비정규직 근로자(천명)}}{\text{임금근로자(천명)}} \times 100(\%)$

〈표 37〉 비정규직비율 산식

(단위 : 천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근로자 수	임금근로자	20,559	20,446	20,992	21,724	21,954	22,143
	정규직	13,078	13,020	12,927	13,568	13,832	13,685
	비정규직	7,481	7,426	8,066	8,156	8,122	8,459
	- 한시적근로자	4,785	4,608	5,171	5,348	5,259	5,628
	* 기간제	3,799	3,933	4,537	4,689	4,809	4,999
	- 시간제근로	3,156	3,252	3,512	3,687	3,873	4,256
	- 비전형근로	2,045	2,073	2,278	2,131	1,957	1,903
비율(%)	임금근로자	100	100	100	100	100	100
	정규직	64	64	62	63	63	62
	비정규직	36	36	38	38	37	38
	- 한시적근로자	23	23	25	25	24	25
	* 기간제	19	19	22	22	22	23
	- 시간제근로	15	16	17	17	18	19
	- 비전형근로	10	10	11	10	9	9

〈표 38〉 전국 비정규직 규모 (2024년 8월 기준)

(단위 : 천명)

지역	2023년			2024년			증감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전국	21,954	13,832	8,122	22,143	13,685	8,459	189	-147	337
서울	4,309	2,804	1,505	4,367	2,694	1,673	58	-110	169
부산	1,316	756	560	1,351	779	572	35	23	12
대구	979	593	386	932	579	353	-47	-14	-34
인천	1,366	868	497	1,413	863	551	48	-6	53
광주	603	372	231	602	370	232	-1	-2	1
대전	648	413	236	626	379	247	-23	-34	11
울산	473	309	164	474	303	170	1	-6	7
세종	173	120	54	173	126	48	0	6	-6
경기	6,181	4,109	2,073	6,230	4,055	2,175	49	-53	102
강원	611	303	309	628	330	298	17	28	-11
충북	669	416	254	684	410	274	15	-6	21
충남	901	564	338	915	579	336	13	15	-2
전북	**667**	**370**	**296**	**670**	**385**	**285**	**3**	**15**	**-11**
전남	631	339	292	624	336	288	-8	-3	-4
경북	906	563	343	932	557	376	27	-6	32
경남	1,244	771	472	1,252	776	476	8	5	4
제주	277	164	113	272	166	106	-5	2	-7

〈표 39〉 시도별 비정규직 규모 (2024년 8월 기준)

*임금근로자 = 경제활동인구-실업자-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비정규직근로자 = 한시적근로자(기간제근로자 포함) ∪ 시간제근로자 ∪ 비전형근로자

**한시적근로자 : '고용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나누어짐.

**시간제근로자 :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근로 시간이 짧은 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비전형근로자 : '근로제공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가정내 근로자(재택, 가내), 일일(호출) 근로자로 분류됨.

(5) 조사 기준월 : 2024년 8월

•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조지표 비정규직 형태(안)

※ 고용형태 설명 안내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1.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에 있는 자로서,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만큼 소득(수수료, 수당 등)을 얻고 노무제공의 방법이나 노무제공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배달기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운전기사 등)
	2. 재택/가내 근로자	근로제공의 방법이나 근로시간 등은 전적으로 본인이 결정하는 경우로 근로의 장소가 사용자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업무성취도에 따라 고정급을 지급받는 재택근로자(114전화안내 등)와 대개 가정주부 등이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물품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댓가를 지급받는 가내근무자(의류·모피 제품에 단추달기 등)로 구분
	3.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으나 사용사업주의 사업체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자로, 임금이나 신분상의 고용관계는 파견사업주의 관리를 받지만, 업무상 지휘·명령은 사용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자
	4. 용역근로자	용역업체가 고용하고 다른 사업주의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자로, 임금, 신분상의 고용관계 및 업무상 지휘·명령 등 모두를 용역업체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청소용역, 경비용역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	5. 일일근로자	고용·근무형태와 관계없이 근무지속성, 규칙성이 없이 일자리가 생겼을 경우 단기간 근무하는 자. 아는 사람이나, 업체, 협회, 취업 알선기관 등의 호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행사도우미, 건설일용근로자 등)
	6.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상 통상근로자(사업체내 가장 일반적 형태의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보통은 1주일에 40시간 또는 44시간 전후)보다 1시간이라

		도 짧은 소정근로시간(예를 들면 1주일에 35시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포함) ※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단시간이면서 기간제인 경우는 단시간으로 분류, 1주일에 3~4일 근무하는 근로자도 단시간 근로자에 표함, 초단시간 근로자도 포함]
	7. 기간제근로자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구두 또는 묵시적 약속이나 계약도 포함)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계약기간의 장·단, 계약의 반복갱신 여부, 명칭(계약직, 촉탁직, 임시직, 계절근로자, 계약사원 등) 등과 관계없음
	8.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근로자	일정기간의 근로계약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회사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조건으로 근무하게 하는 근로자
정규	10.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시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근로가 예정된 근로자

***주 : 인력 현황에서 공공근로는 제외**

2. 지표 분석 결과

(1) 2024년 기준 전국 비정규직 비중은 38.2%, 전북은 42.6%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비정규직 비중을 보임.

(단위 : %)

행정 구역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국	36.4	36.3	38.4	37.5	37.0	38.2
서울	36.1	35.0	38.5	37.0	34.9	38.3
부산	36.0	38.0	41.1	42.2	42.6	42.4
대구	33.8	36.1	38.3	38.1	39.5	37.8
인천	36.9	34.7	37.1	38.7	36.4	39.0
광주	37.0	40.8	40.0	37.7	38.3	38.6
대전	41.7	39.7	40.8	38.9	36.4	39.5
울산	32.3	34.3	34.9	34.9	34.6	35.9

세종	25.4	28.1	26.7	31.4	30.9	27.5
경기	35.6	35.0	37.1	35.0	33.5	34.9
강원	43.3	45.8	47.5	46.9	50.5	47.4
충북	36.9	34.5	38.6	40.1	37.9	40.1
충남	37.3	37.6	35.7	36.6	37.4	36.7
전북	**45.0(1위)**	**44.1(2위)**	**44.7(2위)**	**44.0(2위)**	**44.4(3위)**	**42.6(3위)**
전남	39.1	39.4	41.3	40.9	46.3	46.2
경북	34.9	34.4	35.2	37.6	37.9	40.3
경남	32.4	35.3	38.6	34.9	38.0	38.0
제주	44.6	43.8	41.0	43.0	40.8	39.1

〈표 42〉 지역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2024년 8월 기준)

〈그림 38〉 지역별 비정규직근로자 비율 (2024년 8월 기준)

(2) 지표 결과에 대한 의견

- 전북 비정규직 비중을 매년 시기별 추이를 분석할 수 있고 타 시도와 비교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음

(3) 2030년까지 비정규직비율(%) 개선 목표

- 2024년 기준 전북의 42.6%의 비정규직 비중을 향후 10년 내 전국 평균 38.2% 수준까지 4.4% 축소하는 목표를 설정, 매년 0.4% 비정규직 감소 목표치를 설정함.

[참고] 2012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분석 결과

전북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활용의 현황과 실태 및 그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전북지역의 비정규직 활용비율 20.3%는 전국 16개 지자체 가운데 제주 21.2% 다음으로 비정규직의 활용비율이 높은 지역에 속한다.
② 전북지역 본청 및 그 산하 사업소 등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활용 외에 전체 시·군 단위 지자체와 특히 교육 부문의 비정규직 활용의 실태는 그 양적, 질적인 차원에서 더 비중이 클 것으로 추정되고 중앙단위 행정기관의 비정규직 활용 규모가 10%내외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이 비율은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된다.
③ 전북지역 비정규직은 본청보다는 주로 산하기관인 테크노파크(54%), 경제통상진흥원(51%), 여성교육문화(50%),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46%), 전북발전연구원(44%) 등 주로 전문 분야나 프로젝트성 사업기관과 연구단체에서 그 활용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부분이 각각 44~54%의 높은 비정규직 활용 비중을 보이고 있다.
④ 전북지역 역시 민간위탁사업(청소나 경비 등)이나 외주 등 간접고용의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이들 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근로자의 비중이나 임금·근로조건 등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⑤ 전북지역 기간제근로(10.8%)의 사용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 전북지역 무기계약직 비중(7.1%)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제주(18.3%), 대구(9.7%), 부산(7.9%)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⑦ 반면, 파견근로(2.5%)나 용역(2.4%) 등 간접고용의 비중은 일곱 번째로 전국 지자체 중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⑧ 전북지역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 규모는 2007~2011년 5년간 누적 합계가 192명으로 제주, 경

남, 충남에 이어 네 번째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 속하였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비정규법이 도입되어 시행되기 시작한 2007년에 76%(145명)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이후 2012년까지 나머지가 25%만이 이루어졌음이 주목된다. 즉, 이러한 현상은 전환율이 높은 다른 지자체의 경우와 비교하여도 상대적으로 이후 전환율이 미미하다는 측면에서 새 법을 의식한 전환 조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⑨ 전북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전국적인 분포에 비추어 사무보조원(전국평균 36.8%), 시설관리원(19.1%), 돌봄 등 사회서비스(7.25%)와 시험(연구)원(4.1%) 등의 비중에 유사하게 사무보조 및 시설관리 부문에서의 활용 비중이 높았다.

⑩ 마지막으로 전북지역 비정규직 고용 실태는 2007년 비정규법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크게 감소하지 않고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비정규법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비정규법의 무차별적인 비정규직 남용에는 일정한 억지 효과는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실질적인 비정규직 활용에 대한 공공부문 사용자의 인식과 의식이 사실상 근본적으로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전북지역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임금 및 근로조건은 전국 타지역 공공부문에 비하여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면서도 특별히 다음과 같은 특색을 보이고 있다.

① 전북지역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월 평균임금이 전국 평균(1,982,084원)에 못 미치는 87.6%(1,735,440원)에 그쳐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에 있다.

② 특히, 전북지역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경우 978,500원으로 이것은 전국 기간제 근로자 월평균 임금인 1,166,579원의 83.9%로 더욱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전국 지자체 공공부문 정규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24.7%에 그치고 있음은 물론 무기계약근로자의 월 평균임금(1,735,440원)의 56.3%에 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전국 지자체가운데 전북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추어 전북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가 그 비중은 물론 임금 수준에 있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주목되었다.

③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2007~2011년까지의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 증가액의 추이에서 일정정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전북지역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경우 월 평균임금 증가액이 51.1%로 전국 지자체가운데 경남의 인상률(66%)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8.8%에 그치고 있어 정규직(100%) → 무기계약직(81.8%) 그리고 → 기간제근로자(57.3%)의 임금 수준의 계층화가 구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 이 경우 통계상 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전체임금평균이며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의 경우 해당업무간의 임금수준의 비교가 아닌 총괄적인 임금수준의 비교라는 점에서 직접적 비교에는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④ 전북지역 공공부문 종사자 임금수준의 비교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임금구성에 있어서 특히 기본급을 제외한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에 있어 큰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12년 3월 현재 정규직과의 비교는 물론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전북지역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연간 상여금이 5,014,820원으로 조사된 데 비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통일적으로 연 1,000,000원만이 지급되고 있어 상여금 지급률이 20%에 불과하여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간의 임금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주요 요소로 분석되고 있다.

⑤ 전북지역 공공부문 파견근로자의 임금수준(1,785,000원, 정규직의 52.4%)과 용역근로자의 임금수준(1,773,000원, 정규직의 52%)은 비정규직 월 평균임금인 1,880,000원 미만으로 비정규직 가운데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비하여 전문계약직의 경우 2,009,000원(정규직의 58.9%)으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 전북지역의 비정규직 가운데 파견과 용역근로자는 전체 2.5%내외로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⑥ 근로시간과 관련 정규직은 1주 45.7시간 그리고 무기계약직은 46.3시간으로 정규직 평균 45.7시간인데 비하여 비정규직은 고용형태별로 보아 파견근로자 42시간, 용역근로자 41.3시간, 기간제 근로자 40.6시간, 전문계약직 40시간 일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평균 41시간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공공부문에서의 근로시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사실 즉, 비슷한 근로시간을 일하면서도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는 57%에서 100%까지 차이가 있다는 것이 종사상 지위에 의한 차별이 구조화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⑦ 성별로 보아 공공부문에서 여성이 정규직이 638명으로 27.3%에 불과하고 반면 무기계약직(58.4%), 기간제 근로(64.5%)와 용역부문(55.7%)에서 여성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았고 남성의 경우 정규직이 1,695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72.7%), 파견(72.7%), 전문계약직(64.3%)부문에서 남성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많고 여성비정규직은 단순 업무 그리고 남성비정규직은 전문직업무 등에 많이 분포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⑧ 공공부문 업종별 분포도를 비교해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테크노파크(54%), 경제통상진흥원(51%), 여성교육문화(50%),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46%), 전북발전연구원(44%) 등 주로 전문분야나 프로젝트성 사업기관과 연구단체에서 비정규직의 활용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목을 띠고 있는 데 이것은 공공부문 비정규활용의 기본방향을 시사 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즉, 단순 업무나 한시적인 프로젝트성 업무나 사회서비스부문, 전문연구직 등에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고 그 가운데 여성 비정규직이 이들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전북지역 공공부문에서는 전국 타 지역 지자체에서와 유사하게 사무보조원, 시설관리, 시험(연구)원 부문 등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고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그 역할이나 비중이 강조되고 있으며 여성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돌봄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비정규직의 활용비중이 높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경우 노동조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조사대상 기관의 25%만이 노동조합이 있었으며 나머지 75%는 노동조합이 없어 비정규직의 보호나 이해의 대변에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셋째, 설문을 통해 확인 한 전북지역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활용되는 주된 이유'는 이번 조사에서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①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활용되는 가장 이유로는 역시 타 지역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업무의 특성'(34%)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② 그러나, 그 다음으로 비정규직이 활용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원증원의 어려움'(28%)을 들고 있었다. 이 부분은 민간부문과는 달리 공공부문 인력관리의 특성이 들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전북지역 공공부문에서는 이것은 늘어나는 업무에 비하여 인력의 증원이 불가능한 구조에서 관련 기관들이 이를 우회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③ 반면에, 역시 '예산상의 제약'(17%)이나 '인건비절감'(7%)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부문이 인력이나 예산상의 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요인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니라는 점은 오히려 주목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즉 민간부문에서는 이러한 인건비 절감이나 뒤에 나오는 고용조정의 용이성이 비정규직 활용의 가장 큰 이유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대책은 정책의 다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④ 그 다음으로, '고용조정이 용이'하다(3%)는 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고용조정문제는 공공부문에서는 비정규직 사용의 주요 이유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조사대상 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재직 연수를 보며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2.6년)과 전북신용보증재단(2년)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기관에서 비정규직의 근로연수가 2년 미만에 머무르고 있어 전북지역 공공부문에서는 비정규관련법상 합법적인 사용기간인 2년 내에 이들 비정규직으로 활용하다가 일부에 대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계약기간의 종료나 계약해지와 함께 대체인력을 충원하여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실상 입법자가 의도한 부분이 일시적 업무로 단기적인 인력수요인 경우에는 이처럼 2년 미만인 인력의 활용이 허용될 수 있지만 이것이 상시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인 경우에 무기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계약체결 종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것은 입법자의 의도와 다른 것으로 그 자리에 또 다시 대체인력만이 충원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하겠다.

이호근·정태석·채준호(2012), "공공부문 비정규근로의 고용실태와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전북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를 중심으로", 전라북도

8-3-1. 청년 창업 건수 및 폐업률(%)

총 평

1. 목표 배경 및 목적

- 전북의 미래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세대의 유출을 막고 전북 정주화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청년의 성공적 창업이 하나의 요인으로 대두될 수 있음.
- 전라북도 청년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의 경제 성장 및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 전라북도 청년 창업 환경이 청년 친화적인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전라북도 청년 창업을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 확보가 내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자 함.
- 장기적으로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

UN-SDGs	J-SDGs		
	세부목표	지표	
0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8-3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청년 실업문제에 적극 대응한다.	8-3-1	청년 창업 건수 및 폐업률(%)

〈표 44〉 UN-SDGs 체계 속의 J-SDGs 지표

2. 세부목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요약

- 청년 창업 건수 : 분석 시점 기준 신규 창업 뿐만 아니라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 창업자를 모두 포함하여 총량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였으며, 인접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청년 창업 건수가 높지만, 증가율은 낮아 신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창업 아이템 발굴의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함.

- 청년 창업률(보조지표) : 타 지역과 비교하기 위해 인구 대비 청년 창업 비율을 계산하였으며, 청년 창업률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에서 높은 수치를 보여 신규 창업 환경은 상대적으로 좋아지고 있음. 다만,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산발적인 창업 지원보다 계획적인 창업 지구 개발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청년 폐업률 : 전체 창업 건수 대비 해당 년도에 폐업한 비율로 2023년은 고금리에 따른 부채 상환 압박 등 자금난을 겪는 창업 청년들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폐업률 증가로 이어짐.
- 존속 연수별 폐업률(보조지표) : 존속 연수별 폐업률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창업 5년 이내에 50% 이상이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 지원 비중을 줄이고 경영 컨설팅 및 자금 지원 쪽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지표 이행 모니터링 개선 방향

- 시범지표 및 보조지표의 경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표가 아니고 통계청 데이터센터에서 승인 과정을 거쳐 외부로 반출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통계 관리하는 전담 조직으로 전북연구원 산하 전북경제동향분석센터를 활용하여 지표를 시범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2023년에 작성했던 시범지표 모니터링 보고서에서의 통계 수치와 올해 작성한 보고서의 통계 수치가 상이한데, 이는 작년에 해당 통계자료를 처음 가공하다 보니 일부 업종이 빠진 청년 창업 건수만이 반영되어 실제보다 적은 통 계결과를 제시함.
- 이에 2024년부터는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창업 통계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지표. 관리를 할 예정임.
- 또한 타 지역과의 비교 분석과 관련해서 2023년에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전라남도와 충청북도만을 비교 대상 지역으로 분석하였으나, 2024년부터 인접 지역인 충청남도와 특별자치도로서 성격이 비슷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비교 대상 지역에 포함하여 비교 분석하기로 함.

<table>
<tr><td>목표</td><td colspan="4">8.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td></tr>
<tr><td>세부목표</td><td colspan="4">8-3.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청년 실업문제에 적극 대응한다</td></tr>
<tr><td>지표명</td><td colspan="4">8-3-1 청년 창업건수 및 폐업률</td></tr>
<tr><td>필요성 및 의의</td><td colspan="4">- 전북의 미래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세대의 유출을 막고 전북 정주화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청년의 성공적 창업이 하나의 요인으로 대두될 수 있음</td></tr>
<tr><td rowspan="5">지표</td><td>정의</td><td colspan="3">- 창업 또는 폐업 대표자 기준으로 만 19세~39세의 창업과 폐업 현황을 분석함
- 전국과 전북지역의 인구 대비 창업 참여율을 비교 평가하여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여부를 평가
- 전국과 전북지역의 존속 연수별 폐업률을 비교 평가하여 창업 활동의 지속성을 평가</td></tr>
<tr><td>산출 논리</td><td colspan="3">- 통계청에서 청년 창업 관련 통계 지표를 시도 단위로 발표하고 있지 않으나, 통계청 데이터센터에서 추출이 가능한 자료임.
- 통계청 데이터센터에서 추출을 하기 위해서는 통계 관련 전문 조직을 두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td></tr>
<tr><td>자료원 또는 출처</td><td>기업통계등록부(SBR)</td><td>산정 방법</td><td>〈청년 창업률〉
$\frac{\text{청년창업건수}}{\text{청년인구}} \times 100(\%)$
〈청년 폐업률〉
$\frac{\text{폐업건수}}{\text{가동사업체수} + \text{폐업건수}} \times 100(\%)$</td></tr>
<tr><td>작성 방법</td><td colspan="3">통계청의 창업 데이터,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통계 및 기타 통계를 결합</td></tr>
<tr><td>현황</td><td colspan="3">〈청년 창업 건수〉
<table>
<tr><th>구분</th><th>전북자치도</th><th>충남</th><th>충북</th><th>전남</th><th>강원</th></tr>
<tr><td>2022년</td><td>53,672</td><td>70,523</td><td>50,275</td><td>51,687</td><td>45,872</td></tr>
<tr><td>2023년</td><td>55,231</td><td>72,695</td><td>52,245</td><td>52,627</td><td>47,324</td></tr>
<tr><td>증가율</td><td>2.9%</td><td>3.1%</td><td>3.9%</td><td>1.8%</td><td>3.2%</td></tr>
</table></td></tr>
</table>

- 2023년 전북자치도 청년창업건수는 55,231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
- 인구 규모가 비슷한 강원은 연평균 3.2%, 충북은 3.9%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청년 창업률〉

구분	전북자치도	충남	충북	전남	강원	전국
2022년	**14.1%**	14.4%	13.3%	14.2%	13.8%	14.5%
2023년	**15.0%**	15.2%	14.1%	14.9%	14.5%	15.3%
변화	**0.9%p**	0.8%p	0.8%p	0.7%p	0.7%p	0.8%p

- 가장 최근 산출치는 15.0%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아직까지 낮은 수치

〈청년 폐업률〉

구분	전북자치도	충남	충북	전남	강원	전국
2022년	**11.8%**	12.1%	12.6%	11.1%	11.7%	12.3%
2023년	**13.6%**	13.8%	14.4%	13.1%	13.4%	14.1%
변화	**1.8%p**	1.7%p	1.8%p	2.0%p	1.7%p	1.8%p

- 전북에서 창업하는 청년들의 폐업률은 전국 평균 청년 폐업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3년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자금 압박이 높아지면서 폐업률이 전년보다 높아짐

〈존속 연수별 폐업률〉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 ~1년	1년 ~2년	2년 ~5년	5년 ~10년	10년 ~15년	15년 이상
전북 평균	15.0%	12.6%	12.4%	9.1%	5.6%	3.9%	2.9%
전북 청년	18.7%	17.1%	16.5%	12.8%	7.6%	5.0%	1.5%

- 전북에서 창업하는 청년들의 존속 연수별 폐업률은 전반적으로 전북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속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짐

기준치	〈청년 창업 건수〉 55,231건(2023년 기준) 〈청년 창업률〉 15.0%(2023년 기준)	목표치	〈청년 창업 건수〉 2030년까지 68,000건 달성 〈청년 창업률〉 전국 평균 상회

		〈청년 폐업률〉 13.6%(2023년 기준) 〈존속 연수별 폐업률〉 2년 이내 폐업률 44%		〈청년 폐업률〉 전국 평균 하회 〈존속 연수별 폐업률〉 2년 이내 폐업률 40% 이내	
	자료 경로	통계데이터센터(통계청) 이용 신청→ 센터 승인→ 방문 후 자료 추출→ 추출 자료 사전 검토→ 반출 데이터 심의(화, 목)→ 심의 이후 데이터 반출 허가(센터 홈페이지)		지표 관리 부서	- 전라북도 주무과(청년정책과, 창업지원과) - 전북지속협 경제위원회

〈표 45〉 '8-3-1 청년 창업 건수 및 폐업률(%)'에 대한 지표 모니터링 요약

1. 지표 개요

(1) 지표의 의미

가.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향상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 청년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지만, 청년만의 진취성이나 아이디어 활용성 등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의 경제성장 및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들이 다른 세대 및 다른 지역 청년들에 비해 얼마나 창업에 적극적인지, 창업 환경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전라북도 입장에서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내재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창업을 통해 추가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 또한 단순히 창업 건수만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창업 이후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폐업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창업 건수뿐만 아니라 폐업 관련 지표도 같이 모니터링하여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지표의 정의

가. 청년 창업 건수

- 창업 건수는 해당 연도 신규 창업뿐만 아니라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년 창업자도 포함하는 지표로 신규 창업 건수만을 고려할 경우, 시계열적인 변화가 불규칙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와 비슷한 통계 지표로 경제활동인구나 고용자 수와 같이 총량적인 지표를 사용하고 있어서 창업 관련 지표도 신규 창업을 포함한 총량적인 지표로 사용함.

나. 청년 창업률(보조지표)

- 타 지역과 비교할 경우, 인구 규모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 대비 청년 창업 비율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함. 이와 비슷한 통계 지표로 경제활동참여율이나 고용률이 있으며, 타 지역과 비교 시 해당 지표를 사용함.
- 전북특별자치도의 창업 생태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청년 창업 건수를 사용하되, 타 지역과의 비교 시에는 보조지표인 청년창업률을 사용함.

다. 청년 폐업률

- 폐업률은 전체 창업 건수 대비 해당연도에 폐업한 비율을 의미하며, 폐업률이 낮을수록 창업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건전한 지역경제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라. 존속 연수별 폐업률(보조지표)

- 일반적으로 창업 후 1~3년차가 창업 Death Valley 라고 불리는데, 이 시기를 잘 지나야 창업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 이에 이 시기에 창업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느냐를 평가할 수 있도록 존속 연수별 폐업률을 보조지표로 사용하여 특정 시점의 폐업률이 높을 경우 정책에 대한 검토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3) 자료 수집 방법

가. 기업통계등록부(SBR) 제공 데이터 취득 방법

- 데이터 이용 방법 : 통계데이터센터(통계청) 이용 신청→ 센터 승인→ 방문 후 자료 추출→ 추출 자료 사전 검토→ 반출 데이터 심의(화, 목) → 심의 이후 데이터 반출 허가(센터 홈페이지)
- 유의사항 : 사업체 수 기준 데이터 작성이 필요/사업체 3개 미만 항목에 대해서는 마스킹 처리 후 제공

나. 기업통계등록부(SBR) 제공 데이터 개요

- 지역구분 : 개별 사업체 주소(POI) ➜ 읍면동/시군구/시도 추출
- 제공시기 : 연간/분기/월간
- 제공기준 : 대표자 기준/사업자등록 기준
- 사업자 구분 : 개인, 법인, 회사 이외 법인, 비법인단체, 국가지방단체, 공공기관
- 성별구분 : 남성, 여성, 미상
- 연령구분 : 사업체 대표자 나이(20대, 30대, 청년 구분 가능)
- 존속연수 : 개업 일자, 폐업 일자
- 폐업사유 : 사업부진, 행정처분, 계절사업, 양도·양수, 해산·합병 등 개별 폐업사유 기재
- 산업분류 : 산업분류코드 - 세세분류
- 기업규모 : 상출기업, 기타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기업규모 판정 제외 사업자
- 기업정보 : 매출액, 종사자,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등
- 성별, 연령별, 업태별, 존속 연수 등 데이터 항목 간 교차 분석 가능

(4) 지표산출 방법

가. 청년 창업률(보조지표)

- 비정규직 비율(%)은 다음의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함.

※ 청년 창업률 산식 = 청년 창업 건수 / 청년 인구

〈표 3〉 청년 창업률 산식

나. 청년 폐업률(보조지표)

- 청년 폐업률은 다음의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함.

※ 청년 폐업률 산식 = 청년 폐업 건수 / (가동사업체수 + 폐업 건수)

〈표 4〉 청년 폐업률 산식

2. 지표 분석 결과

(1) 청년 창업 건수 및 청년 창업률

- 전북자치도의 2023년 청년 창업 건수는 55,231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함.
- 인접 유사한 규모의 지역인 4개 지역(충남, 충북, 전남, 강원)과 비교하였을 때, 충북, 전남, 강원보다는 많은 수치이며, 충남에 비해서는 작음.

지역	2022년			2023년			증가율(%)		
	20대	30대	청년	20대	30대	청년	20대	30대	청년
전북자치도	**14,442**	**39,230**	**53,672**	**14,988**	**40,243**	**55,231**	**3.8%**	**2.6%**	**2.9%**
충남	17,887	52,636	70,523	18,577	54,118	72,695	3.9%	2.8%	3.1%
충북	13,331	36,944	50,275	13,764	38,481	52,245	3.2%	4.2%	3.9%
전남	13,607	38,080	51,687	14,022	38,605	52,627	3.0%	1.4%	1.8%
강원	11,614	34,258	45,872	11,900	35,424	47,324	2.5%	3.4%	3.2%

〈표 5〉 청년 창업 건수

- 하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충남, 충북, 강원에 비해 낮은 수치로 증가율 측면에서 30대 청년 대상으로 창업 진흥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신규 창업을 유도해야 함.
- 보조지표인 청년 창업률 측면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2023년 청년 창업률은 15.0%로 전년 대비 0.9%p 증가하여 청년들이 창업을 시도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인근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전북특별자치도 보다 청년 창업률이 높은 지역은 충남으로 이는 20대의 창업률이 높기 때문임.
- 전국 평균인 15.3%에 비해 낮은 수치이지만 상대적으로 기술 창업이 용이한 대도시 지역들의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광역도 단위에서 청년들의 창업 시도는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음.

지역	2022년			2023년			변화(%p)		
	20대	30대	청년	20대	30대	청년	20대	30대	청년
전북자치도	**7.2%**	**22.0%**	**14.1%**	**7.7%**	**22.7%**	**15.0%**	**0.5%p**	**0.7%p**	**0.9%p**
충남	7.6%	20.6%	14.4%	8.2%	21.5%	15.2%	0.6%p	0.9%p	0.8%p
충북	7.0%	19.6%	13.3%	7.5%	20.6%	14.1%	0.5%p	1.0%p	0.8%p
전남	7.2%	21.8%	14.2%	7.7%	22.7%	14.9%	0.5%p	0.9%p	0.7%p
강원	6.7%	21.3%	13.8%	7.1%	22.3%	14.5%	0.4%p	1.0%p	0.7%p
전국	7.1%	21.8%	14.5%	7.5%	22.8%	15.3%	0.4%p	1.0%p	0.8%p

〈표 6〉 청년 창업률

(2) 청년 폐업률 및 존속 연수별 폐업률

- 전북특별자치도의 2023년 청년 폐업률은 13.6%로 전년 대비 1.8%p 증가한 수치이며, 2023년은 고금리에 따른 대출 상환 압박, 지역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폐업률이 더 높아짐.
- 전국 청년 폐업률 14.1%보다 낮은 수치이지만, 전체 폐업률인 7.4%와 비교하였을 때 청년들의 창업 실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규 창업 지원 뿐만 아니라 자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경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및 자금 지원이 요구됨.

지역	2022년				2023년			
	전체	20대	30대	청년	전체	20대	30대	청년
전북자치도	**6.7%**	**15.8%**	**10.1%**	**11.8%**	**7.4%**	**17.7%**	**11.9%**	**13.6%**
충남	7.0%	16.0%	10.6%	12.1%	7.7%	17.3%	12.4%	13.8%
충북	7.1%	16.8%	10.9%	12.6%	7.9%	19.5%	12.4%	14.4%
전남	6.2%	14.6%	9.6%	11.1%	7.0%	17.6%	11.3%	13.1%
강원	6.8%	15.9%	10.1%	11.7%	7.4%	18.5%	11.7%	13.4%
전국	7.4%	16.8%	10.8%	12.3%	8.1%	18.8%	12.6%	14.1%

〈표 7〉 청년 폐업률

- 존속연수별로 청년폐업률을 보면, 1년 이내 폐업 확률 32%, 2년 이내 폐업 확률 44%, 5년 이내 폐업 확률 51%로 2022년에 비해 폐업 리스크가 높아짐.
- 창업 5년을 넘어가면 폐업률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창업 아이템의 상업화 단계를 넘어서 자금 확보가 어려운 시점에 대출 이차 보전 등 자금 지원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지역	2022년				2023년			
	전체	20대	30대	청년	전체	20대	30대	청년
전체	6.7%	15.8%	10.1%	11.8%	7.4%	17.7%	11.9%	13.6%
6개월 미만	13.5%	19.9%	13.1%	15.7%	**15.0%**	22.7%	16.0%	**18.7%**
6개월~1년	11.8%	18.6%	13.4%	13.1%	12.6%	20.5%	15.1%	17.1%
1~2년	10.9%	17.4%	12.7%	14.3%	12.4%	18.7%	15.3%	16.5%
2~5년	7.9%	12.4%	10.1%	10.7%	9.1%	15.0%	12.0%	12.8%
5~10년	5.1%	8.3%	6.5%	6.7%	5.6%	8.1%	7.5%	7.6%
10~15년	3.5%	-	-	4.2%	3.9%	-	-	5.0%
15년 이상	2.7%	-	-	2.3%	2.9%	-	-	1.5%

〈표 8〉 존속 연수별 폐업률

(3) 지표 결과에 대한 의견

- 전북 청년 창업과 관련하여 시기별 추이를 분석할 수 있고 타 시도와 비교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음.
  - 지금까지 창업 관련 통계에서 청년 만을 분리하여 지표를 분석하지 못해서 청년 창업 현황에 대해 자세하게 알지 못하였으나, 이번 지표 개발을 통해 청년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청년 창업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전북 청년 창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라북도 일자리정책에서 창업이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정책 효과가 클 수 있다는 시사점 도출이 가능함.
  - 과거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이었던 국내 경제 구조에서 기업 유치를 통해 대규모 일

자리 창출이 가능했으나, 점점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기업 유치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창업 활성화 및 지원이 지역 경제 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됨.

- 사회초년생인 청년 입장에서 여러 조건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에 청년 페업률이 높다는 점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전국 평균 청년 폐업률보다는 낮다는 점은 고무적임.
  - 다만, 2023년은 전국적으로 거시경제 악화 등으로 자영업 등 창업 환경이 좋지 않아 전반적으로 폐업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거시경제 변화에 대응하여 창업 초기 단계의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구성해야 할 것임.

(4) 2030년까지 청년 창업 건수 및 폐업률 개선 목표

○ **기준치**

- (청년 창업 건수) 55,231건 (2023년 기준)
- (청년 창업률) 15.0% (2023년 기준)
- (청년 폐업률) 13.6% (2023년 기준)
- (존속 연수별 폐업률) 2년 이내 폐업률 44%

○ **목표치**

- (청년 창업 건수) 2030년까지 68,000건 (연평균 3% 증가)
- (청년 창업률) 2030년까지 23.0% (연평균 1.0%p 증가)
- (청년 폐업률) 전국 평균 하회
- (존속 연수별 폐업률) 2년 이내 폐업률 40%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시범지표 모니터링 보고서

환경위원회

7-1-1 가정용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

15-4-1 전북특별자치도에 서식하는 동식물 법정보호종 수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환경위원회 시범지표 모니터링

7-1-1. 가정용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

총 평

1. 목표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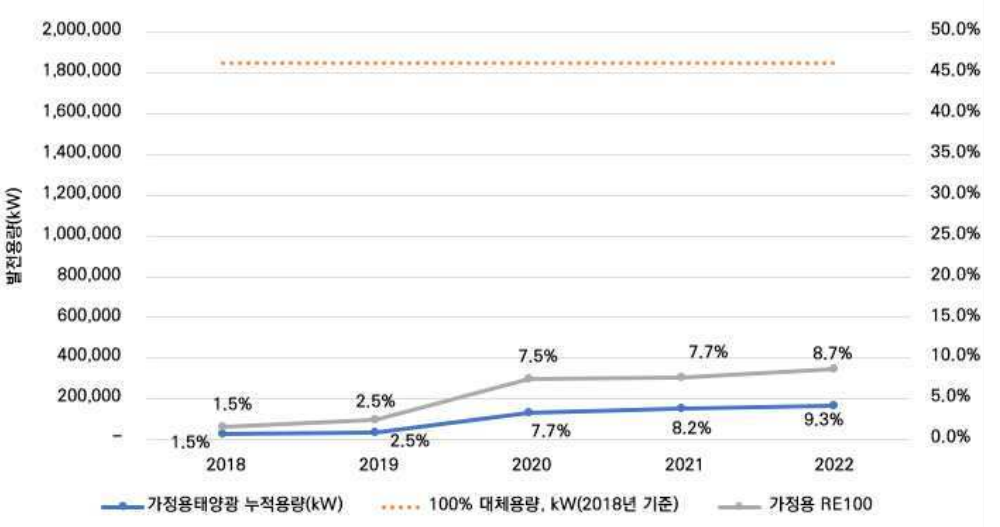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2030의 17개 목표(Goals) 중 일곱 번째 목표인 '에너지'는 적정한 가격에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에 관점을 두고 있음.
-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7번째 목표인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도 에너지 서비스에 대해 안정적이고 적정한 접근을 보장하고 국가 에너지원에서 청정에너지 공급을 증대하며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운송분야의 에너지소비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음.
- 태양광 발전을 통해 개별 가정의 에너지 자립 정도를 파악하여, 시민들의 기후위기 대응 역할이 가능한 K-SDGs 7번째 목표인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를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4개의 세부목표와 4개의 지표를 작성하였음.
- SDGs 7번 목표 이행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세부목표 '7-1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안정적이고 적정한 접근을 보장한다.'의 지표인 '7-1-1 가정용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의 데이터를 취합하고, 현재 성과를 공유하려고 함. 이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17개의 목표가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역 구성원 및 이해당사자들의 관심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UN-SDGs	K-SDGs	J-SDGs			
		세부목표		지표	
07 에너지	0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7-1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안정적이고 적정한 접근을 보장한다.	7-1-1	가정용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

〈표 56〉 UN-SDGs 체계 속의 K-SDGs와 J-SDGs 지표

2. 세부목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요약

- 세부목표 '7-1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안정적이고 적정한 접근을 보장한다'를 이행하기 위한 지표로 '7-1-1 가정용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을 알아보았음.
- 2022년 전북특별자치도 가정용 태양광 누적보급용량은 171,170kW이며, 가정용 전력사용량(2,598GWh) 대비 에너지 자립을 위한 가정용 태양광 발전 시설 대체 보급용량비율(가정용 RE100)은 8.7% 수준으로 나타났음.
- 2018년 기준년도 목표량 대비 2022년 누적발전용량 비율은 9.3%로 산정되었다.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설은 2020년에 집중적인 보급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그림 49〉 대체 태양광 누적 발전용량(2018년 대비)/가정용 RE100

3. 지표 이행 모니터링 개선 방향

- 매년 목표달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주로 전력사용량의 지속적 증가이며, 가정에서 쓰는 다양한 에너지원들이 기후위기상황으로 진입하면서 에너지원이 전력으로 집중되는 전력화 현상, 가전제품수의 사용증가 등이 원인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에너지 사용감축을 위한 효율화 프로그램 등 가정 내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필요에 대한 사회적 확대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신규 단독주택 건축 시 태양광 설치 의무화하는 지자체 조례 – 법리 검토 필요하고 지자체 에너지자립마을사업 확대를 포함하여 건물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 융·복합사업 등 정부 보조금 사업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권장함.

목표	7.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세부목표	7-1 에너지 서비스에 대해 안정적이고 적정한 접근을 보장한다.		
지표명	7-1-1 가정용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		
필요성 및 의의	- 태양광 발전을 통해 개별 가구의 에너지 자립 정도를 파악하여, 재생에너지 확보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의 시민 역할을 확대		
지표	정의	- 가정용 태양광 발전용량 대상은 주로 한전과의 계약을 통해 발전한 전기를 자기소비 후 상계거래(잉여량 이월사용)하거나 잉여전력을 판매가 가능한 건물에 설치가능한 주택용+자가용 PPA 태양광를 말함. - 주로 지자체에서 에너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주택용 태양광 지원과 건물에 직접 설치하여 판매하는 사업참여를 통해 알 수 있는 에너지 자립 척도로 활용 가능	
	산출 논리 및 난점	- 지역에너지 통계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를 활용하여, 전력소비량 대비 지역내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및 발전량환산(발전시간 3.6시간/일로 규정)을 통해 소비량 대비 대체발전용량을 산정하여 평가함. - 자료상 보급용량은 신설, 증감설, 해지 등이 반영된 용량이므로 신규 설치용량과 다를 수 있음.	
	자료원 또는 출처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지역에너지통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산정 방법	누적발전용량(kW)-통계자료 확보 대체비율(%)=발전용량/2018년 기준 대체발전용량(소비량 100% 대체 전환 용량)
	작성 방법	연도별 에너지공단 자료를 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 원별 발전량, 발전용량, 지역별로 분석, 전북특별자치도 내 가정용 전력소비량, 태양광 발전량 및 발전용량 현황을 검토하여 전년 대비 증감여부를 평가함.	
	현황	- 2022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태양광 발전량은 5,534GWh, 2018년 대비 3.5배 증가 - 전북특별자치도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2,598GWh로, 2018년 대비	

		6.8% 증가 - 도내 태양광 발전용량은 3,692MW로, 2018년 대비 약 3배 증가 - 이중 가정용 태양광 누적 발전용량은 171,170kW이며 2018년 대비 6배 증가함. - 2017년까지 서서히 증가하다가 2020년 급격한 증가 후 안정적인 증가경향을 보임.			
	기준치	171,170kw (2022년 태양광 누적용량) 9.3% 달성	목표치	1,850MW (2050년까지 2018년 가정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 용량)	
	자료 경로	https://www.knrec.or.kr/ 신재생에너지센터-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세부에너지원별 현황		지표 관리 부서	전북도청, 에너지수소산업과

〈표 57〉 '7-1-1 가정용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에 대한 지표 모니터링 요약

1. 지표 개요

(1) 지표의 의미

- 다양한 재생에너지 중에서 주민(도민)들이 직접 설치하여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개별 가구의 에너지 자립 정도를 파악
- 많은 지자체에서 주민참여형 주택용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주도 에너지 자립과 함께 에너지 복지의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
- 가정에서 재생에너지 확보를 통해 시민에 의한 화석연료 대체 및 기후변화 완화의 실천 척도로서 가능

(2) 지표의 정의

- 일반적으로 발전전력은 크게 전력 시장을 통한 직접거래 방식(자가용 10kW 초과, 사업용 1kW 이상), 한전과의 전력수급계약 체결을 통한 거래(일명 PPA) 방식(자가용 10kW초과~1,000kW이하, 사업용 1,000kW이하), 한전과 상계거래 계약 체결(상계거래, 일반용 태양광)한 거래방식으로 구분됨.
- 지표에서 명시한 가정용 태양광의 경우 주로 일반용 태양광 설비이며, 가정(지붕, 마당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자가소비 후 판매하거나 상계거래(잉여발전량을 이월에 사용)하는 것을 말함.
- 지표목표 : 2018년 기준(탄소중립 기준년도) 가정용 전력사용량을 대체할 만한 태양광발전용량 1,850MW를 2050년까지 100% 대체할 발전용량 및 대체율

※ 여기서 대체율은 일반적으로 산업체 중심의 RE100개념(전력소비량을 100%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대체)이 가정부문으로 확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3) 자료 수집 방법

가. 자료 원천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_세부에너지원별 현황」에서 자료확인

나. 자료수집방법

- 해당 자료는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발간한 통계자료(홈페이지 : https://www.knrec.or.kr/)로, 연도별로 지역별, 세부에너지원별, 기초지자체별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4) 지표산출 방법

가. 가정용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

- 신재생에너지원(27가지, 신에너지+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용량별 누적 보급용량(kW) 발전시설자료를 사용함.
- 대체율(%) : 2018년 가정용 전력사용량 대체 발전용량 대비 연도별 가정용 태양광 누적보급용량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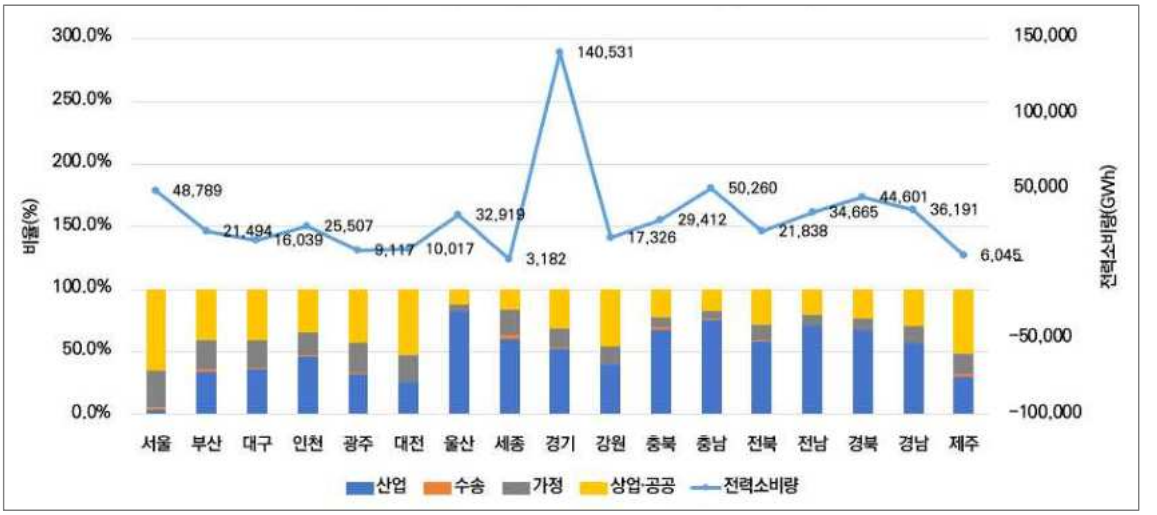
※ 가정용 태양광 누적보급용량= 이전년도 누적보급용량+당해연도 신규보급용량 ※ 대체율(%)=연도별 가정용 태양광 누적용량(kW)/1,850MW('18년 가정용 전력 소비 대체 발전용량값)×100

〈표 58〉 태양광 보급용량 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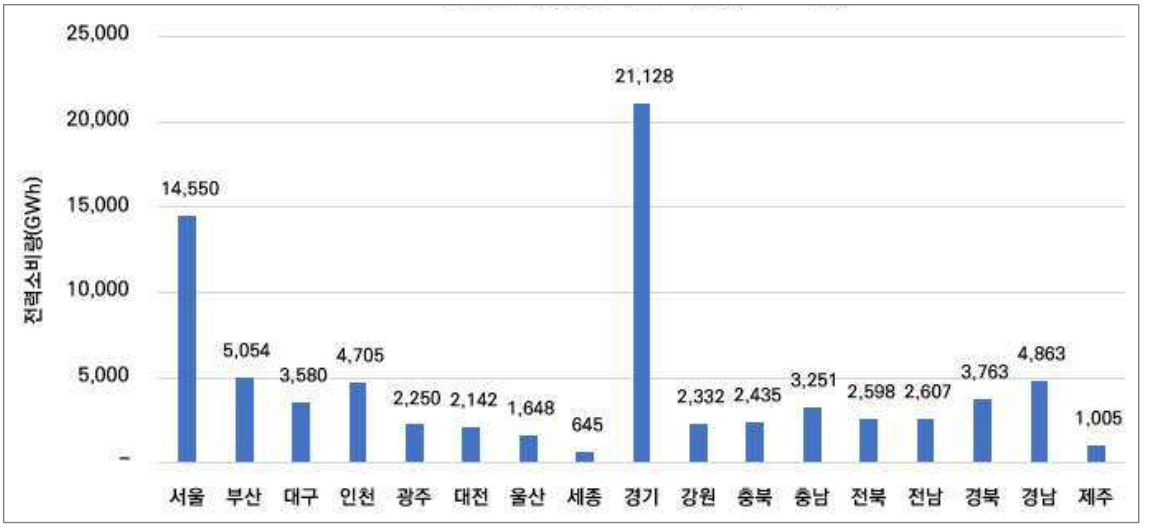
2. 지표 분석 결과

(1) 지역별 가정용 전력 소비

- 2022년 기준 국내 전력소비량은 총 547,933GWh이며, 경기〉충남〉서울〉 경남〉전남 순으로 많이 사용함. 전북 소비량은 21,838GWh로 전국 소비의 4%정도 차지하고 있음.
- 부문별 소비를 보면, 산업〉 상업 및 공공〉 가정〉 수송 순으로 사용률을 보이며, 전북의 경우 산업 56%, 상업 및 공공 28%, 가정 12% 순으로 나타남.
- 전북의 가정용 전력소비량은 2,598GWh이며, 전국 평균치의 절반 정도 수준임.



〈그림 37〉 지역별 전력소비량 및 부문별 소비량(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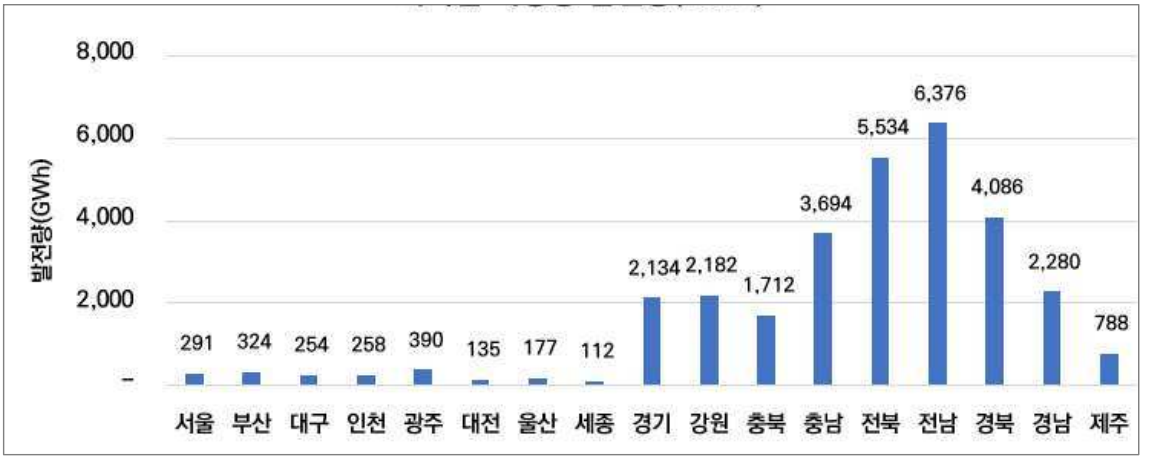


〈그림 38〉 지역별 가정용 전력소비량(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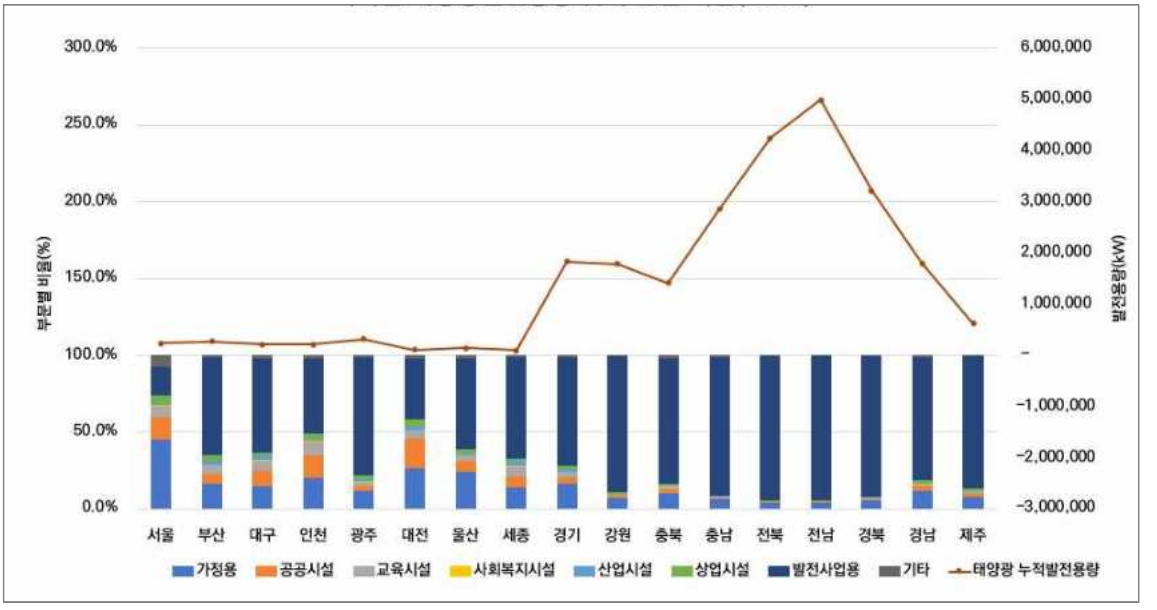
(2) 지역별 태양광 발전

- 2022년 기준 국내 태양광 발전량은 30,726GWh이며, 전남〉전북〉경북〉충남〉경북 순으로 높게 나타남. 전북 발전량은 5,534GWh이며, 전국 2위 수준의 태양광 발전량을 보임.
- 전국 태양광 누적 발전보급용량은 약 24,370MW정도이며, 발전사업용 시설 86%

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정용〉공공시설〉상업시설〉산업시설〉사회복지시설〉교육시설로 낮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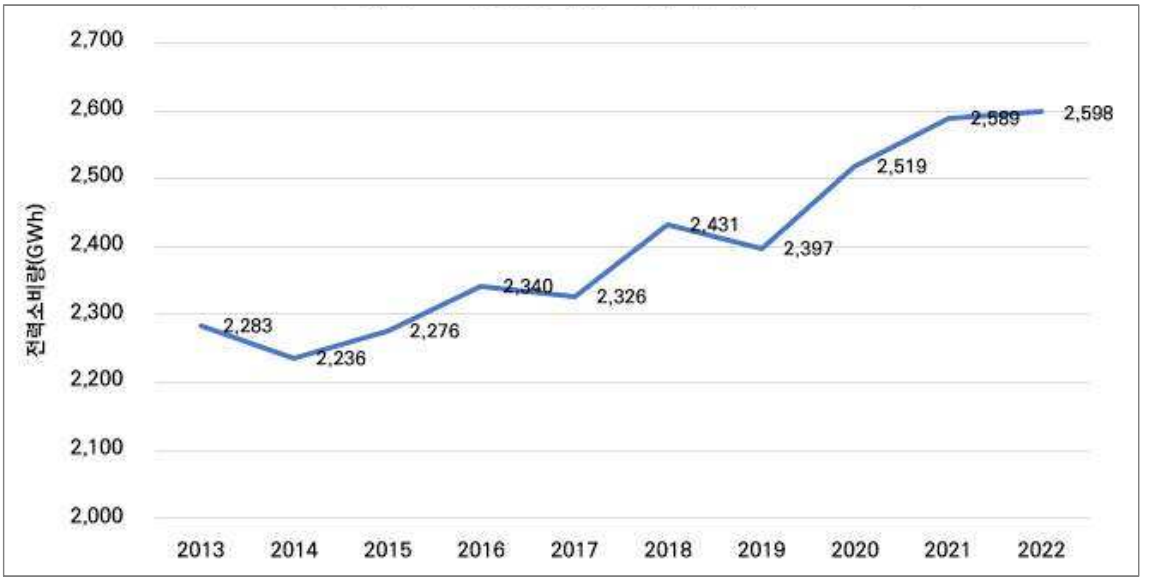
〈그림 39〉 지역별 태양광 발전량(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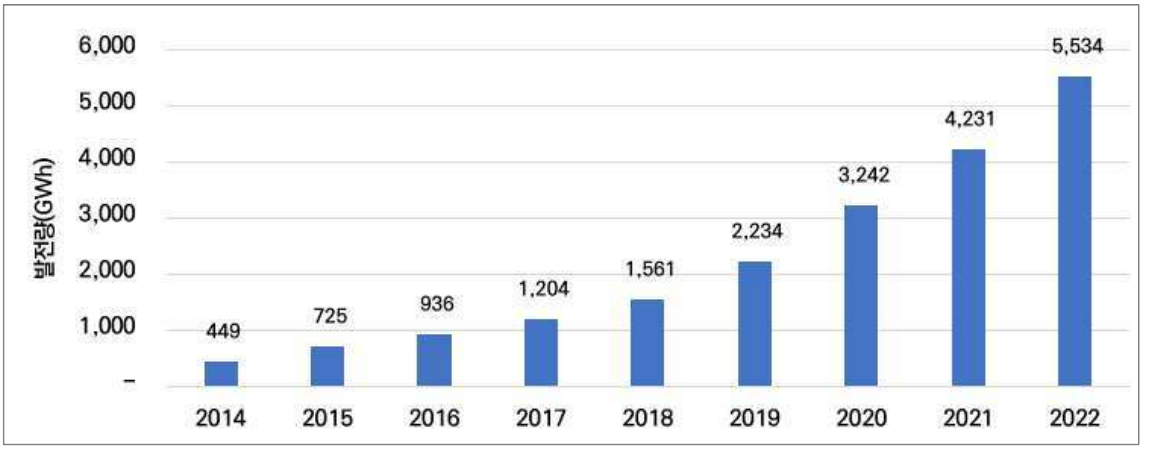
〈그림 40〉 지역별 태양광발전용량 및 부문별 비율(2022년)

(3) 전북특별자치도 전력소비량, 태양광 발전용량 및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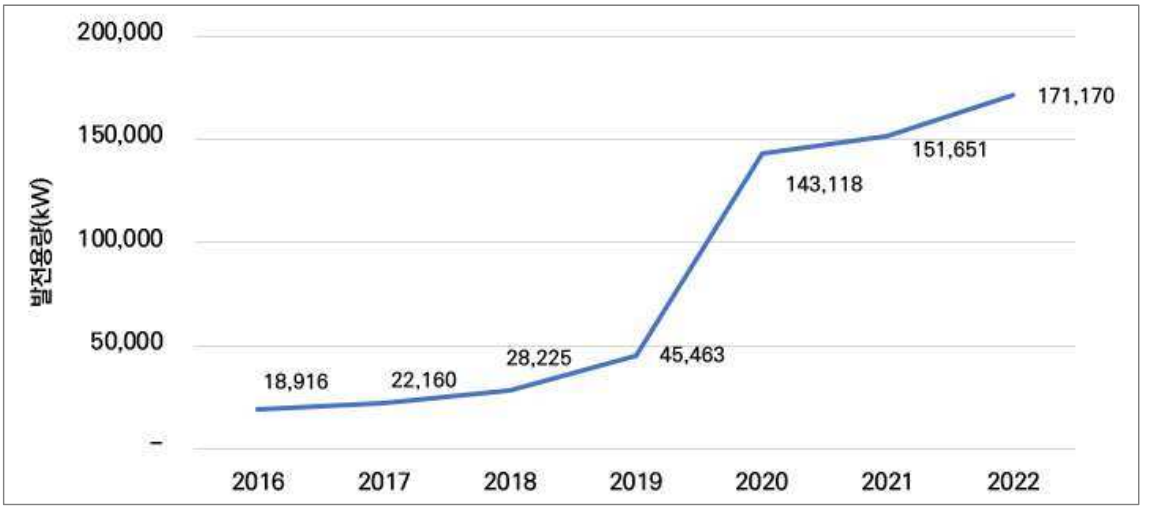
- 전북특별자치도 가정용 전력소비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2019년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다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태양광 발전량도 전력 소비와 함께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4년 대비 대략 12배 이상 늘어난 상황임.
- 태양광 발전용량의 경우 2019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20년 급증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형태를 보임.



〈그림 41〉 전북특별자치도 가정용 전력소비량 추이(2013~2022년)



〈그림 42〉 전북특별자치도 태양광 발전량 추이(2014~2022년)



〈그림 43〉 전북특별자치도 가정용 태양광 발전 누적용량 추이(2016~2022년)

(4) 2050년까지 전북특별자치도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 목표

○ **기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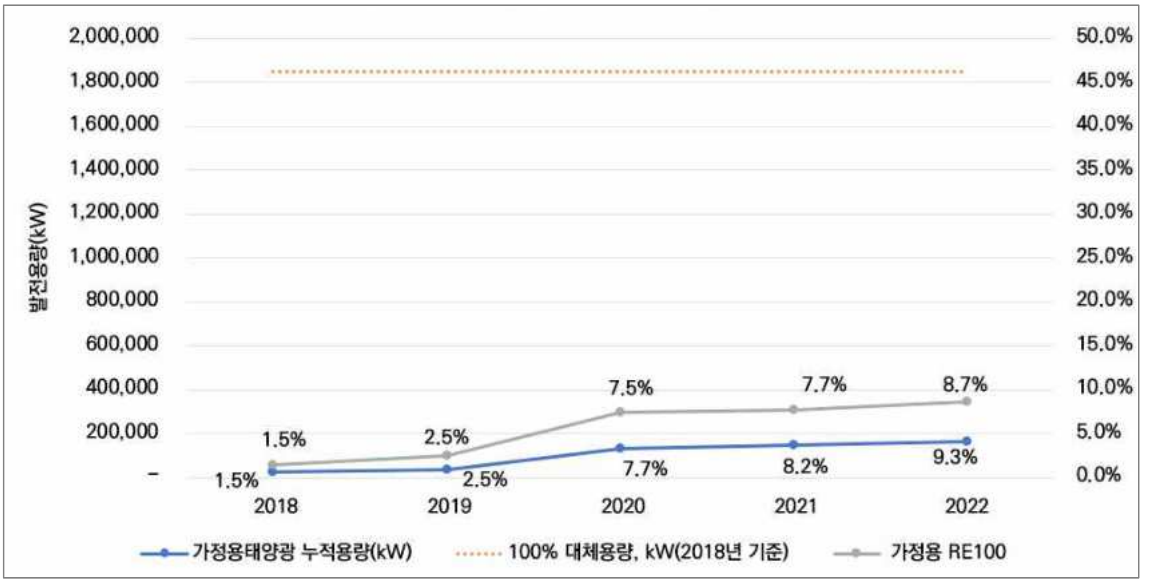
-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가정용 태양광 누적보급용량 2018년을 기준으로 함
- **(기준)** 2018년 전북특별자치도 태양광 누적보급용량 : 28,225kW

○ **목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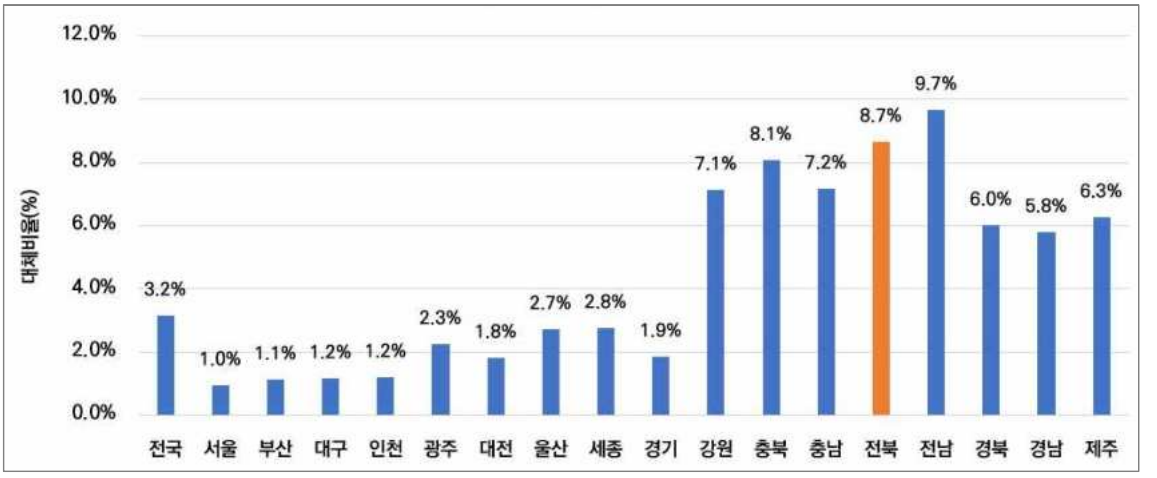
- 2050년까지 2018년 가정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 용량을 목표로 함
- **(목표)** 약 1,850MW

(5) 2022년도 전력소비량 대비 태양광 발전 대체 비율

- 2022년도 태양광 누적 발전용량은 171,170kW이며, 이는 2018년 목표치 대비 약 9.3%에 달하며, 전년보다 약 12.9% 증가하였음.
- 또한 전력소비량 대비 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을 통한 대체율은 8.7%이며, 전년보다 1% 정도 향상되었음.



〈그림 44〉 대체 태양광 누적 발전용량(2018년 대비)/가정용 RE100



〈그림 45〉 지역 가정용 전력 사용량 대비 대체 발전비율(2022)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환경위원회 시범지표 모니터링

15-4-1. 전북특별자치도에 서식하는 동식물 법정보호종 수

총 평

1. 목표 배경 및 목적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2030의 17개 목표(Goals) 중 열다섯 번째 목표인 '육상생태계보전'은 육상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호·복원·증진, 숲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의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에 관점을 두고 있다
-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15번째 목표인 '육상생태계 보전'도 육상과 내륙담수의 생태계 다양화를 위해 보전과 복원 활동을 활성화하며 산림파괴 중단, 황폐화 된 삼림복원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강화하며 가뭄·홍수·개발 등으로 황폐화 된 토리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동식물 보호종의 포획과 불법거래를 없애도록 노력하며 침입외래종의 유입을 예방하고 이들이 육지 및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개발사업 등 인간활동으로 단절된 생태축의 복원과 생태 네트워크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 전북특별자치도 생물환경 자원의 미래가치를 인식하고 현황 파악하며 전북특별자치도 멸종위기생물종의 보호, 보전, 증식, 관리하는 목적으로 K-SDGs 15번째 목표인 '육상생태계 보전'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7개의 세부목표와 10개의 지표를 작성하였다
- SDGs 15번 목표 이행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세부목표 '15-4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

방하기 위해 법정보호종을 보호한다.'의 지표인 '15-4-1 전북특별자치도에 서식하는 동식물 법정보호종 수'의 데이터를 취합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17개의 목표가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역 구성원 및 이해당사자들의 관심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UN-SDGs	K-SDGs	J-SDGs			
		세부목표		지표	
15 육상생태계 보전	15 육상생태계 보전	15-4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법정보호종을 보호한다	15-4-1	전북특별자치도에 서식하는 동식물 법정보호종 수

〈표 59〉 UN-SDGs 체계 속의 K-SDGs와 J-SDGs 지표

2. 세부목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요약

- 세부목표 '15-4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법정보호종을 보호한다'를 이행하기 위한 지표로 '15-4-1 전북특별자치도에 서식하는 동식물 법정보호종 수'을 알아보았다
- 전북지역의 관리나 보전에 대상인 법정보호종에 대한 조사가 미약하고 참고할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며, 본 지표를 통하여 전북의 생물다양성에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지표 이행 모니터링 개선 방향

- 환경부는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재지정하고 있으며, 282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지정(22.12.9. 기준),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동식물은 471종이 지정되어 있다. (22.9.2. 기준)
- 도내 산야, 하천 및 새만금에서 멸종위기종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 녹색연합,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등) 혹은 학계의 자료가 잘 반영되도록 연계를 통해서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able>
<tr><th>목표</th><th colspan="4">15. 육상생태계 보전</th></tr>
<tr><td>세부목표</td><td colspan="4">15-4.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법정보호종을 보호한다.</td></tr>
<tr><td>지표명</td><td colspan="4">15-4-1 전북특별자치도에 서식하는 동식물 법정보호종 수</td></tr>
<tr><td>필요성 및 의의</td><td colspan="4">전북특별자치도 생물환경 자원의 미래가치를 인식하고 현황 파악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멸종위기 생물 종의 보호, 보전, 증식, 관리한다</td></tr>
<tr><td rowspan="5">지표</td><td>정의</td><td colspan="3">- 환경부에서 야생 동·식물의 멸종 방지를 위해 정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및 보호” 종
- 문화재청에서 학술적, 자연사적, 지리학적으로 중요하거나 그것이 지닌 희귀성, 고유성, 심미성으로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중 동물 및 식물 종</td></tr>
<tr><td>산출 논리 및 난점</td><td colspan="3">산출 : 환경부 및 문화재청의 법정보호종 수로 함
난점 : 환경부나 문화재청의 법정보호종 수는 조사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조사 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td></tr>
<tr><td>자료원 또는 출처</td><td>전북특별자치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 2020. 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td><td>산정 방법</td><td>- 환경부 및 문화재청이 법률로 보호하도록 정한 야생동·식물종 중 도내 서식종
- 도내 생물자연 조사 및 보고서 혹은 활동가들의 기록 종</td></tr>
<tr><td>작성 방법</td><td colspan="3">전북특별자치도 내 서식, 자생하고 있는 법정보호종의 시군별 종수 및 분포</td></tr>
<tr><td>현황</td><td colspan="3">-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 : 282종(2022.12.9. 기준)
Ⅰ급 : 포유류(14종), 조류(16종), 어류(11종), 양서파충류(2종), 곤충류(8종), 무척주동물(4종), 육상식물(13종)
Ⅱ급 : 포유류(6종), 조류(53종), 어류(18종), 양서파충류(6종), 곤충류(21종), 무척주동물(28종), 육상식물(79종)
- 전북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수(2017~2021) : 85종
△포유류 7종 △조류 31종 △양서파충류 6종 △어류 8종
△곤충 8종 △무척추동물 5종 △식물 21종 △고등균류 1종</td></tr>
</table>

		-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16종 II급 71종 - 부안군이 40종 고창군 35종, 군산시 및 정읍시 각각 28종			
	기준치	2020년 기준 85종	목표치	2030년까지 87종	
	자료 경로	국립생태원 요청 환경부 및 문화재청 등 전북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지표 관리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생태자원과 전북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표 60〉 '15-4-1 전북특별자치도에 서식하는 동식물 법정보호종 수'에 대한 지표 모니터링 요약

1. 지표 개요

(1) 지표의 의미

가. 전북 내 법정보호종 현황 파악을 위한 지표

- 지수상에 서식할 것으로 추정되는 약 1,300만 종의 생물종은 매일 70종씩 사라진다고 함.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이 중에서 양서류가 가장 멸종된 위험이 높다고 함
- ‘70년 이후 지구상 척추동물의 약 60% 감소, 향후 가속화 전망
-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종풍부도(MSA)는 9% 감소 전망
- 생물종 감소에 따라 유전자 다양성도 더불어 감소 예측,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 고유 생물종 멸종, 서식환경 변화 등으로 야생생물 보호관련 여건이 악화되어 있음
- 한반도의 온대성 기후가 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육지와 해성에서 동물의 서식지 이동, 습지 축소 등 생태환경 변화로 생물 다양성 감소 전망됨
- 환경부는 “야생동물 보호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1차(생물다양성 보전), 2차(생물다양성 보전, 생물자원 활용), 3차(야생생물 서식지, 보호관리 선진화)와 현재“제4차 야생동물 보호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복원, 서식지 보전, 보호·관리 기반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음
- 국립생물자원관 (22.12 기준) 국가생물종 목록상 자생생물은 58,050종 △척추동물 2,074종, △무척추동물30,867종, △식물5,683종, △균류및지의류6, 116종, △조류 6,493종, △원생동물2,508종, △원핵생물4,309종

(2) 지표의 정의

-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을 보존,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이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하고 있음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

정 및 보호 멸종위기 야생생물 282종,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35,870종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보호대상 해양보호생물 88종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중 동물 및 식물 천연기념물 471종

(산림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5호에 따른 희귀식물과 특산식물 특별산림보호대상종 53종

※ 환경부

- 환경부의 전신인 환경청은 1989년부터 자연생태계 유지와 야생동·식물의 멸종 방지를 위해 특정 야생동·식물 92종을 지정하여 고시하였고, 이석이 멸종위기 개념이 도입된 최초의 법정보호종이라 할 수 있음
- 이후 명칭과 종 수가 여러차례 변경되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변경되었고, 2012년 이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멸종 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재지정하고 있음
- 2022년 12월 9일 개정기준으로 환경부에서 282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정 관리하고 있음

〈그림 59〉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계자료집 2023, 지정역사

〈그림 60〉 연도별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동물 지정 종수의 변화

분류군	1989년	1993년	1996년	1998년		2005년		2012년		2017년		2022년	
				I급	II급	I급	II급	I급	II급	I급	II급	I급	II급
포유류	-	-	-	10	7	12	10	11	9	12	8	14	6
조류	-	-	-	13	46	13	48	12	49	14	49	16	53
양서·파충류	12	22	22	1	4	1	5	2	5	2	6	2	6
어류	-	-	24	5	7	6	12	9	16	11	16	11	18
곤충류	21	31	31	5	14	5	15	4	18	6	20	8	21
무척추동물	-	-	-	3	21	5	24	4	27	4	28	4	28
육상식물	59	126	126	6	52	8	56	9	68	11	77	13	79
해조류	-	-	-	-	-	0	1	0	2	0	2	0	2
고등균류	-	-	-	-	-	-	-	0	1	0	1	0	1
소계	92	179	203	43	151	50	171	51	195	60	207	68	214
합계				194		221		246		267		282	

〈그림 61〉 연도별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동물 지정 종수의 변화(분류군별)

(3) 자료 수집 방법

가. 자료 수집 방법

- 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 국립생태원 전북권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최종보고서 참고

(4) 지표산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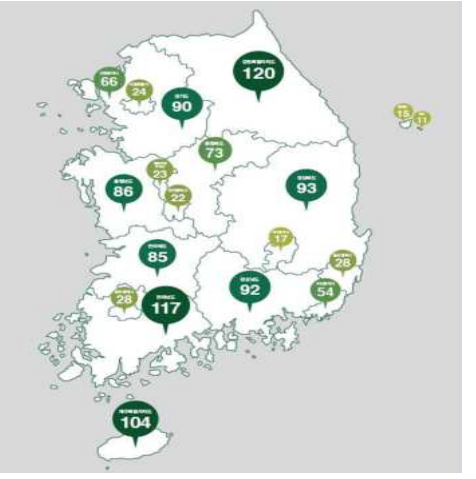
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서식하는 동식물 법정보호종 수

- 현재 전북에 서식하는 법정보호종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후 발견되는 종은 매우 희귀할 것으로 사료됨.
- 만경강에 서식하는 황새 등 법정보호종에 추가될 가능성은 높으나 타 멸종들의 해제될 가능성이 있어 공식을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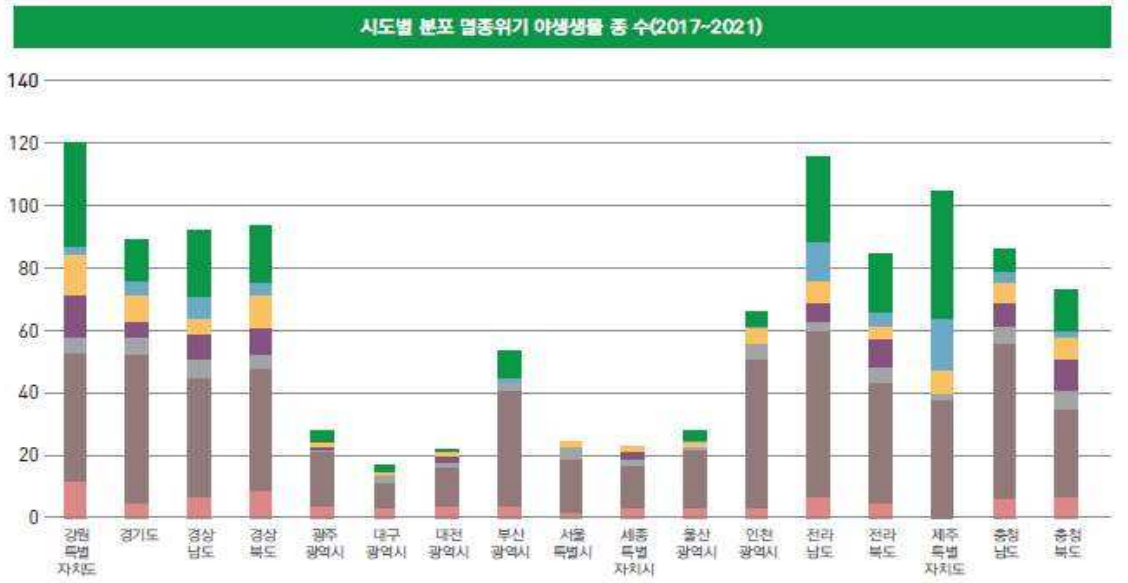
2. 지표 분석 결과

(1) 전국 시도별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수 (2017~2021)

-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에서 발간한 멸종위기야생생물 통계자료집에 의거
- 가장 많은 종수는 강원도(120종), 전라남도(117종), 제주도(104종) 순 전북특별자치도는 85종임



〈그림 61〉 전국 시도별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수(2017~2021)



	강원 특별 자치도	경기도	경상 남도	경상 북도	광주 광역시	대구 광역시	대전 광역시	부산 광역시	서울 특별시	세종 특별 자치시	울산 광역시	인천 광역시	전라 남도	전라 북도	제주 특별 자치도	충청 남도	충청 북도
포유류	12	5	7	9	4	3	4	4	2	3	3	3	7	5		6	7
조류	41	47	38	39	17	8	12	37	17	14	19	48	53	39	38	50	28
양서·파충류	5	6	6	4	1	3	2	3	4	2	1	5	3	5	2	6	6
어류	14	5	8	9	1		2			2			6	8		7	10
곤충류	13	9	5	11	1	1	1		1	2	1	5	7	5	7	6	7
무척추동물	2	4	7	3				1			1	1	12	4	17	4	2
육상식물	32	13	21	18	4	2	1	9			3	4	28	19	39	7	13
해조류	1														1		
고등균류	1	1											1				
총합계	**120**	**90**	**92**	**93**	**28**	**17**	**22**	**54**	**24**	**23**	**28**	**66**	**117**	**85**	**104**	**86**	**73**

〈그림 63〉 시도별 분포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 수(2017~2021)

(2) 전북지역 여건

- 전북권의 면적 8,069km^{2}으로 남한 면적 대비 약8%를 차지함
- 지역 여건은 전북지방환경청 관할로 전북특별자치도는 6개시, 8개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립공원공단의 국립공원은 4개(변산반도, 내장산, 지리산, 덕유산)가 포함됨

- 100m 이하 평지가 전체 면적의 51%, 100~500m 산지 약 33%, 500m 이상이 16%로 평야지대가 많음
- 전북권의 도서는 102개(유인도 25개, 무인도 77개), 해안선은 577.1km

□ 야생동•식물 현황
- 2002년부터 2019년까지 8개 분류군 87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전북권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
-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2006~2008, 2010~2013) 50종 1,483지점
-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분포조사(2014~2019) 49종 66지점
-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2002~2004, 2009, 2013) 29종 160지점
- △포유류7종, △조류31종, △양서파충류6종, △어류8종, △곤충8종, △무척추동물5종, △식물21종, △고등균류1종
-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16종, II급은 71종 확인
- 지자체별 부안군이 40종으로 가장 많고, 고창군 35종, 군산시와 정읍시가 각각 28종 확인됨
- 포유류 총 7종(담비, 무산쇠족제비, 물범, 반달가슴곰, 삵, 수달, 하늘다람쥐)
- 조류는 총 31종(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긴꼬리딱새, 긴점박이올빼미, 까막딱다구리, 노랑부리백로, 노랑부리저어새, 독수리, 매, 물수리, 벌매, 붉은배새매, 붉은어깨도요, 새매, 새호리기, 솔개, 수리부엉이, 알락개구리매, 알락꼬리마도요, 양비둘기, 올빼미, 잿빛개구리매, 저어새, 조롱이, 참매, 참수리, 큰고니, 큰기러기, 큰말똥가리, 팔색조, 흰목, 물떼새)
- 어류 총 8종(감돌고기, 다묵장어, 돌상어, 모래주사, 부안종개, 임실납자루, 큰줄납자루, 퉁사리)
- 양서 파충류 총 6종(구렁이, 금개구리, 남생이, 맹꽁이, 수원청개구리, 표범장지뱀)
- 무척추동물 총 5종(귀이빨대칭이, 대추귀고둥, 두드럭조개, 염주알다슬기, 흰발농게)
- 곤충 총 8종(꼬마잠자리, 닻무늬길앞잡이, 대모 잠자리, 물방개, 물장군, 비단벌레, 수염풍뎅이, 참호박뒤영벌)

- 식물 총 21종(가시연, 가시오갈피나무, 각시수련, 광릉요강꽃, 구름병아리난초, 날개하늘나리, 노랑붓꽃, 대흥란, 독미나리, 매화마름, 물고사리, 백양더부살이, 백운란, 복주머니란, 석곡, 세뿔투구꽃, 솔붓꽃, 순채, 으름난초, 전주물꼬리풀, 진노랑상사화)
- 균류 1종 (화경버섯)

□ 전북 내 지표 현황

-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8개 분류군 87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전북권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
- 포유류 7종, 조류 31종, 양서•파충류 6종, 어류 8종, 곤충 8종, 무척추동물 5종, 식물 21종, 고등균류 1종 등으로 확인

*전국자연환경조사(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분포조사(국립생물자원관), 국립공원 자연자원모니터링(국립공원) 자료

구 분	종 수			지점 수		
	합계	Ⅰ급	Ⅱ급	합계	Ⅰ급	Ⅱ급
전체	87	16	71	2,307	640	1,667
고창군	35	4	31	177	12	165
군산시	28	6	22	146	28	118
김제시	23	4	19	98	19	79
남원시	24	5	19	265	82	183
무주군	15	4	11	121	49	72
부안군	40	6	34	313	42	271
순창군	20	5	15	149	69	80
완주군	18	3	15	159	57	102
익산시	15	3	12	53	10	43
임실군	18	4	14	273	96	177
장수군	19	3	16	140	38	102
전주시	16	4	12	41	16	25
정읍시	28	5	23	162	44	118
진안군	25	5	20	210	78	132

〈표 62〉 전북권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자체별 종 수와 분포 지점 수

구분	종 수	종 목록	
		Ⅰ급	Ⅱ급
고창군	34	노랑부리백로, 매, 비단벌레, 수달	가시연,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구렁이, 노랑부리저어새, 다묵장어, 닻무늬갈앞잡이, 대추귀고동, 매화마름, 맹꽁이, 물방개, 물수리, 백양더부살이, 벌매, 붉은배새매, 붉은어깨도요, 삵, 새매, 새호리기, 석곡, 수리부엉이, 알락꼬리마도요, 염주알다슬기, 진노랑상사화, 참매, 큰고니, 큰기러기, 큰말똥가리, 흰목물떼새, 흰발농게
군산시	28	귀이빨대창이, 노랑부리백로, 매, 수달, 수원청개구리, 저어새	가시연, 각시수련,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노랑부리저어새, 대모잠자리, 독미나리, 맹꽁이, 물고기, 물범, 붉은배새매, 붉은어깨도요, 삵, 매새, 새호리기, 수리부엉이, 알락개구리매, 알락꼬리마도요, 큰고니, 큰기러기, 큰말똥가리, 표범장지뱀
김제시	21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가시연, 검은머리물떼새, 구렁이, 금개구리, 노랑부리저어새, 담비, 대모잠자리, 맹꽁이, 물고사리, 붉은배새매, 삵, 새매, 새호리기, 수리부엉이, 순채, 조롱이, 큰고니, 큰기러기, 흰목물떼새
남원시	24	감돌고기, 노랑부리백로, 모래주사, 수달, 임실납자루	꼬마잠자리, 가시연, 다묵장어, 담비, 돌상어, 무산쇠족제비, 복주머니란, 붉은배새매, 삵, 새매, 새호리기, 세뿔투구꽃, 솔붓꽃, 수리부엉이, 올빼미, 참매, 큰말똥가리, 하늘다람쥐, 흰목물떼새
무주군	15	감돌고기, 광릉요강꽃, 반달가슴곰, 수달	가시오갈피나무, 구렁이, 날개하늘나리, 담비, 돌상어, 복주머니란, 붉은배새매, 삵, 양비둘기, 조롱이, 흰목물떼새
부안군	40	귀이빨대칭이, 노랑부리백로, 매, 비단버레, 수달, 저어새	가시연,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구렁이, 금개구리, 까막딱다구리, 남생이, 노랑부리저어새, 노랑붓꽃, 대추귀고둥, 매화마름, 맹꽁이, 물고사리, 물방개, 물수리, 물장군, 부안종개, 붉은배새매, 붉은어깨도요, 삵, 새매, 새호리기, 석곡, 솔개, 수리부엉이, 알락꼬리마도요, 잿빛개구리매, 조롱이, 참매, 큰고니, 큰기러기, 화경버섯, 흰목물떼새, 흰발농게

순창군	20	두드럭조개, 매, 모래주사, 수달, 임실납자루	구렁이, 다묵장어, 담비, 대흥란, 백운란, 붉은배새매, 삵, 새매, 새호리기, 수리부엉이, 잿빛개구리매, 조롱이, 진노랑상사화, 큰줄납자루, 흰목물떼새
완주군	18	감돌고기, 수달, 퉁사리	가시연, 구렁이, 긴꼬리딱새, 긴점박이올빼미, 까막딱다구리, 다묵장어, 담비, 붉은배새매, 삵, 새매, 새호리기, 조롱이, 참매, 큰고니, 흰목물떼세
익산시	15	수달, 수염풍뎅이, 수원청개구리	가시연, 금개구리, 맹꽁이, 물고사리, 붉은배새매, 삵, 새매, 새호리기, 수리부엉이, 잿빛개구리매, 큰기러기, 큰말똥가리
임실군	18	모래주사, 수달, 임실납자루, 참수리	가시연, 다묵장어, 담비, 물방개, 붉은배새매, 삵, 새매, 새호리기, 솔붓꽃, 조롱이, 참매, 큰말똥가리, 큰줄납자루, 흰목물떼새
장수군	19	감돌고기, 매, 수달	구름병아리난초, 남생이, 다묵장어, 담비, 복주머니란, 붉은배새매, 삵, 새매, 새호리기, 세뿔투구꽃, 솔붓꽃, 올뱌미, 조롱이, 참매, 하늘다람쥐, 흰목물떼새
전주시	16	감돌고기, 수달, 수원청개구리, 퉁사리	가시연, 구렁이, 금개구리, 남생이, 노랑부리저어새, 붉은배새매, 삵, 새매, 새호리기, 잿빛개구리매, 전주물꼬리풀, 흴목물떼새
정읍시	28	귀이빨대칭이, 매, 수달, 입실납자루, 참수리	가시연, 노랑부리저어새, 노랑붓꽃, 다묵장어, 담비, 대흥한, 독수리, 맹꽁이, 물고사리, 백앙더부살이, 붉은배새매, 삵, 새매, 새호리기, 염주알다슬기, 조롱이, 진노랑상사화, 참호박뒤영벌, 큰기러기, 큰말똥가리, 큰줄납자루, 팔색조, 흰목물떼새
진안군	24	감돌고기, 모래주사, 수달, 임실납자루, 퉁사리	긴꼬리딱새, 긴점박이올빼미, 꼬마잠자리, 다묵장어, 담비, 돌상어, 물수리, 벌매, 붉은배새매, 삵, 새매, 새호리기, 솔붓꽃, 수리부엉이, 알락개구리매, 으름난초, 조롱이, 참매, 큰말똥가리, 흰목물떼새

〈표 63〉 전북권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자체별 종 목록

(2) 2030년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법정보호종 목표

○ **기준치**

-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 : 282종(2022.12.9. 기준)

  Ⅰ급 : 포유류(14종), 조류(16종), 어류(11종), 양서파충류(2종)곤충류(8종), 무척주동물(4종), 육상식물(13종)

  Ⅱ급 : 포유류(6종), 조류(53종), 어류(18종), 양서파충류(6종), 곤충류(21종), 무척주동물(28종), 육상식물(79종)

- 전북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수(2017~2021) : 85종

  △포유류 7종 △조류 31종 △양서파충류 6종 △어류 8종 △곤충 8종 △무척추동물 5종 △식물 21종 △고등균류 1종

-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16종 Ⅱ급 71종

- 부안군이 40종 고창군 35종, 군산시 및 정읍시 각각 28종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시도별 분포 현황으로 가장 많은 지역 순은 강원도(120종), 전라남도(117종), 제주도(104종), 경상북도(93종), 경상남도(92종), 경기도(90종), 충청남도(86종), 전북특별자치도(85종)으로 나타남

- 전북지역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267종(Ⅰ급 60종, Ⅱ급 207종)을 지정·관리

  : 포유류는 총 7종(담비, 무산쇠족제비, 물범, 반달가슴곰, 삵, 수달, 하늘다람쥐)

  : 조류는 총 31종(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긴꼬리딱새, 긴점박이올빼미, 까막딱다구리, 노랑부리백로, 노랑부리저어새, 독수리, 매, 물수리, 벌매, 붉은배새매, 붉은어깨도요, 새매, 새호리기, 솔개, 수리부엉이, 알락개구리매, 알락꼬마도요, 양비들기, 올빼미, 잿빛개구리매, 저어새, 조롱이, 참매, 큰고니, 큰기러기, 큰말똥가리, 팔색조, 흰목물떼새)

  : 어류는 총 8종(감돌고기, 다묵장어, 돌상어, 무래주사, 부안종개, 임실납자루, 큰줄납자루, 퉁사리)

  : 양서•파충류는 총 6종(구렁이, 금개구리, 남생이, 맹꽁이, 수원청개구리, 표범장기뱀)

  : 무척추동물은 총 5종(귀이빨대칭이, 대추귀고동, 두드럭조개, 염주알다슬기, 흰발농게)

  : 곤충류는 총 8종(꼬마잠자리, 닻무늬길앞잡이, 대모잠자리, 물방개, 물장군, 비단벌레,

수염풍뎅이, 참호박뒤영벌)

: 야생식물은 총 21종(광릉요강꽃, 암매, 가시연, 각시수련, 날개하늘리, 노랑붓꽃, 대흥란, 독미나리, 매화마름, 물고사리, 백양더부살이, 백운란, 복주머니란, 석곡, 세뿔투구꽃, 솔붓꽃, 순채, 으름난초, 전주물꼬리풀, 제주고사리삼, 지네발란, 진로랑상사화)

○ **목표치**

- 환경부의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진행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 수에 대한 가감이 진행되고 있음.
-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변화로 인한 야생생물의 보전 및 관리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멸종위기의 생물들은 늘어나는 추세임.
-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생태계 환경에서 존재하는 보호종의 보호 및 보전이 중요하고, 또 다른 보호종을 발견해 가는 것도 중요함.
-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법정보호종 85종을 잘 보전하고 환경부, 지자체 및 민간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동·식물계에 각각 1종씩 혹은 그 이상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함.
- **(목표) 전북특별자치도에 서식하는 동·식물 법정보호종 수 : 87종**

◆ 용어 정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I급) 혹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 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II급)

천연기념물

- 학술적, 자연사적, 지리학적으로 중요하거나 그것이 지닌 희귀성, 고유성, 심미성으로 국가가 지정한 국가지정 문화재

법정보호종

-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생물등을 보존 및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 문화재청,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이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 보호하는 생물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수립 총괄 워크숍
일시 2022년 9월 27일(화) 15:00
장소 국립무형유산원 3층 국제회의장
주최/주관

함께한 사람들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5 성평등 보장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9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3 기후변화와 대응
14 해양생태계 보전
15 육상생태계 보전
16 평화·정의·포용
17 지구촌 협력 강화

Part

V

함께한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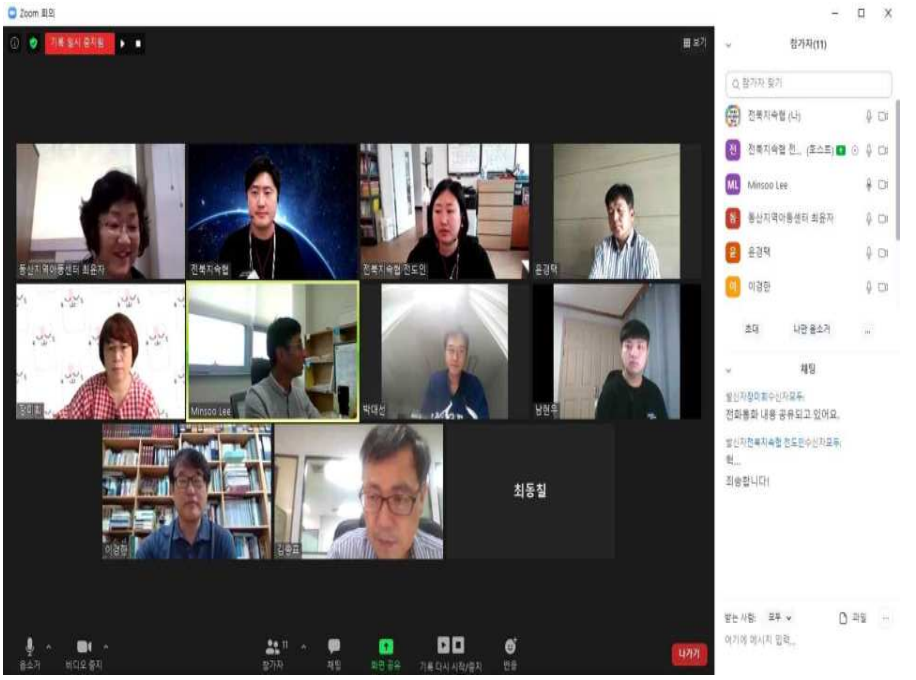
2020

• J-SDGs 총괄워크숍

• J-SDGs 기획단

• J-SDGs 수립 및 지표 개발 연구 용역

• 사람위원회



• 경제위원회

- 2020 환경부 민간자원순환촉진사업 -
라스틱 ZERO를 위한 기업문화 만들기

• 환경위원회

2021

• J-SDGs 기획단

• 사람위원회

사랑위원회 현영삼
김종표
최현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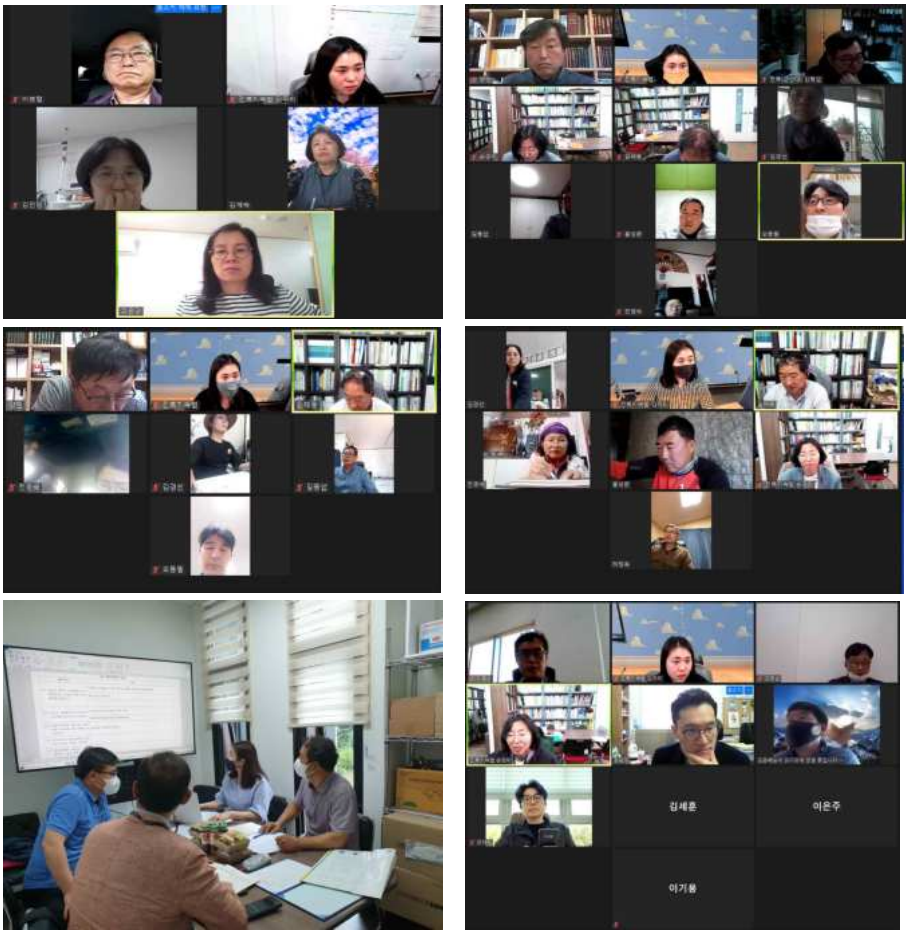
전북지속협 김주리
최상재

- 경제위원회

전북지속협 김하나
전북지속협 김주리
김홍만
이고은

홍성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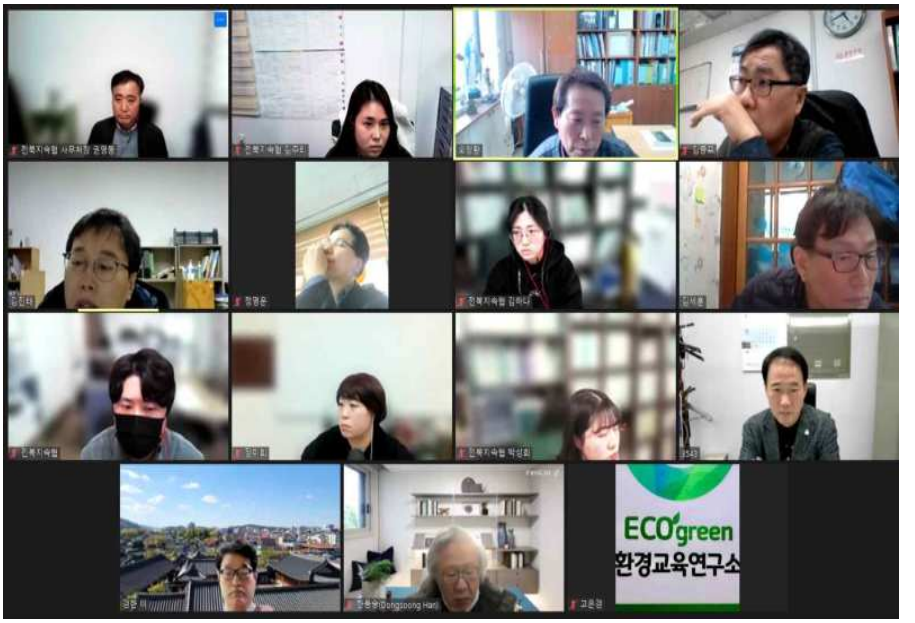
• 환경위원회



• J-SDGs 위원장단 회의

2022

• J-SDGs 기획단 및 위원장단



• J-SDGs 추진위원 통합워크숍

• 사람위원회

• 경제위원회 정기회의

• 환경위원회 정기회의

• J-SDGs 총괄워크숍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목표
(J-SDGs) 추진과정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사람위원회 지속가능발전목표
사람위원회
SDGs 1
SDGs 2
SDGs 3
SDGs 4
SDGs 5
총괄 워크숍
전북대학교 지속가능발전센터

전라북도
사회위원회
SDGs 8, 9, 10, 11, 12
총괄 워크숍
진북대학교 지속가능발전센터

SDGs 6, 7, 13, 14, 15
환경위원회
총괄 워크숍
진북대학교 지속가능발전센터

일시 2022년 9월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9 산업의 성장과 혁신 촉진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수립 총괄 워크숍
일시 2022년 9월 27일(화) 15:00
장소 국립무형유산원 3층 국제회의장
주최/주관

2023

• J-SDGs 정책위원회

• 사람위원회

21세기 국제관계 : 냉전에서 신냉전으로

• 경제위원회

• 환경위원회

2024

• 정책위원회

• 사람위원회

• 경제위원회

김 시 백
김 진 태
조 지 훈

• 환경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1. 대표단

	이 름	직 책		소 속
1	엄성복	시민	상임대표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2	최병관	행정	공동대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3	김용현	기업	공동대표	㈜정석케미칼

2. 고문단

	이 름	직 책	소 속
1	최인규	전임대표	(사)전북노동복지센터
2	김보금	전임대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3	김택천	전임대표	지방분권전북회의 상임대표
4	유혜숙	전임대표	부모교육연구소 '고슴도치사관학교' 소장
5	김홍식	전임대표	전북도시가스(주)

3. 운영위원회

	이름	직책	소속
1	김진태	운영위원장 경제위원회 위원장	탄소중립전북행동 상임대표
2	이경한	운영위 부위원장 사람위원회 위원장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3	이종훈	운영위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4	염영선	운영위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5	김명지	운영위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6	김상진	환경위원회 위원장	전주대학교 교수
7	강소영	전북시군협의회 위원장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8	이재은	ESD위원회 위원장	전북환경교육센터 사무국장
9	백인출	기후환경위원회 위원장	정읍시그린리더협의회 회장
10	김의숙	운영위원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11	박명용	운영위원	한국건설자원협회 전북지회 사무국장
12	장남정	운영위원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장
13	현영삼	운영위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4	황명숙	운영위원	전북여성단체협의회 사무국장
15	유원호	운영위원	전주대학교 학생
16	김윤권	전북지속협 사무처장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4. 감사

	이 름	직 책	소 속
1	이명연	사업감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	박전숙	회계감사	세무사박전숙사무소

5. J-SDGs 정책위원회

	이 름	직 책	소 속
1	이경한	정책단장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2	김진태	경제위원회 위원장	탄소중립전북행동 상임대표
3	김상진	환경위원회 위원장	전주대학교 교수
4	오창환	전문가	전북대학교 교수
5	한동숭	전문가	전주대학교 교수
6	주영식	전문가	아람

6. J-SDGs 총괄위원회

□ 사람위원회

	이 름	직 책	소 속
1	이경한	위 원 장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2	현영삼	위 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3	김의숙	위 원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
4	박대선	위 원	청년식탁 사잇길
5	백영규	위 원	전북광역자활센터장
6	백인출	위 원	전북그린리더협의회장
7	안예원	위 원	전주대학교 학생
8	유원호	위 원	전주대학교 학생
9	이동훈	위 원	(사)아름다운배움
10	정호영	위 원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관장
11	최윤자	위 원	전주동산지역아동센터 센터장
12	최현숙	위 원	전북특별자치도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 본부장
13	홍성운	위 원	김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준)
14	오광진	위 원	-
15	문요한	위 원	협동조합 이장 이사

16	송창훈	위 원	순창군농업기술센터
17	이경철	위 원	한국농수산대학
18	조성근	위 원	전북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
19	최명희	위 원	전주대학교 문화산업연구소 연구교수
20	최성재	위 원	농촌디자인(주) 대표
21	홍성문	위 원	고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준) 대표
22	김종표	위 원	전북일보 논설위원
23	김일수	위 원	고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준) 운영위원장
24	김춘학	위 원	다이룸종합교육지원센터 센터장
25	남현우	위 원	전주대학교 학생
26	박종관	위 원	문화나들이콘텐츠연구소 대표
27	박찬희	위 원	정읍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28	장미희	위 원	교육컨텐츠연구소 이룸
29	전진	위 원	우석대학교 학생

□ 경제위원회

	이 름	직 책	소 속
1	김진태	위원장	탄소중립전북행동 상임대표
2	국주영은	위 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3	김보금	위 원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
4	김시백	위 원	전북연구원 부장(연구위원)
5	권순표	위 원	(유)사각사각 대표
6	정명운	위 원	푸른도시협의회 대표
7	박명용	위 원	한국건설자원협회 전북지회 사무국장
8	백승만	위 원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장
9	유대근	위 원	우석대학교 명예교수
10	이수영	위 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팀장
11	전안균	위 원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12	조지훈	위 원	전주대학교 객원교수
13	주영식	위 원	도서출판 아람 대표
14	채준호	위 원	전북대학교 전임교수

□ 환경위원회

	이 름	직 책	소 속
1	김상진	위원장	전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2	김세훈	위 원	MNS지속가능연구소 대표이사
3	임채웅	위 원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4	고영삼	위 원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부장
5	고은경	위 원	ECOgreen환경교육연구소
6	권태흔	위 원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 신재생에너지팀 부장
7	김상진	위 원	전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8	김인순	위 원	공간문화로 대표
9	김종주	위 원	(사)전북수산산업연합회장
10	김택천	위 원	지방분권전북회의 상임대표
11	노경만	위 원	(주)로만건설 대표이사
12	박영기	위 원	전북대학교 교학부총장(토목공학과 교수)
13	오창환	위 원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14	이기언	위 원	국회 정무보좌관 / 토지정의기본소득연구소
15	이기용	위 원	㈜신광에너지
16	이대승	위 원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 신재생에너지팀
17	이명주	위 원	전주시역세권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18	이병렬	위 원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19	이상혁	위 원	군산대학교 초대용량풍력발전시스템혁신연구센터
20	장남정	위 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센터장
21	장진호	위 원	전북환경운동연합 팀장
22	최영규	위 원	전북탄소중립순환경제협회 사무총장
23	최정은	위 원	전북대학교 빅데이터비즈니스연구소
24	한동숭	위 원	전주대학교 교수
25	권용훈	위 원	해강생태연구소 소장
26	김종만	위 원	전북특별자치도자연환경연수원 원장
27	김형섭	위 원	군산대학교 해양바이오특성화대학 교수
28	문지현	위 원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29	박성례	위 원	지역연구소플랜플러스 순창공유플랫폼 누구나
30	박정희	위 원	푸른꿈고등학교 교장
31	양 헌	위 원	생물다양성연구소
32	오동필	위 원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33	오문태	위 원	전북특별자치도강살리기추진단
34	오흥근	위 원	전북특별자치도강살리기추진단
35	유주리	위 원	산림복지교육센터 we-숲
36	박미연	위 원	전북생명의숲 사무국장
37	은 숙	위 원	전북특별자치도자연환경연수원 사무국장
38	하정옥	위 원	애벌레공작소 대표

7. 실행위원회

1) 전북 시·군 협의회

	이 름	직 책	소 속
1	강소영	위원장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2	이호준	위 원	임실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3	정남수	위 원	군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4	김경선	위 원	장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5	이근홍	위 원	정읍지속가능발전협의회
6	강순희	위 원	부안지속가능발전협의회
7	홍성운	위 원	김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준)
8	방선영	위 원	완주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준)
9	홍성문	위 원	고창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준)

2) 기후환경위원회

	이 름	직 책	소 속
1	백인출	위원장	정읍시그린리더협의회
2	박성례	부위원장	지역연구소플랜플러스 순창공유플랫폼누구나
3	김준희	위 원	전주기후환경네트워크
4	라 영	위 원	전북특별자치도탄소중립지원센터
5	윤경배	위 원	임실기후환경네트워크
6	이고은	위 원	고창기후환경네트워크
7	이민경	위 원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8	이은숙	위 원	익산환경운동연합
9	이현세	위 원	전주시에너지센터
10	이현주	위 원	장수 컨설턴트

3) ESD위원회

	이 름	직 책	소 속
1	이재은	위원장	전북환경교육센터
2	강소영	위 원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3	김민정	위 원	전북특별자치도기후변화교육센터
4	모아름드리	위 원	프리데코
5	최우순	위 원	전주시에너지센터
6	최진호	위 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

8. 전북지속협 위원

	이 름	직 책	소 속
1	강재원	위 원	㈜사람과환경
2	고영조	위 원	새만금도민회의
3	김상래	위 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	김상욱	위 원	원광대학교 산림조경학과
5	김석균	위 원	흙건축연구소
6	김정흠	위 원	임실군의회 의원
7	박난희	위 원	김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8	박희자	위 원	전미아동센터 센터장
9	서문산성	위 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10	양미라	위 원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
11	안성균	위 원	김제 지평선고등학교 교장
12	이병도	위 원	전북특별자치도 의원
13	장태일	위 원	전북대학교 지역건설학과
14	채연주	위 원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9.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

	이 름	직 책	소 속
1	김윤권	사무처장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2	이성중	부장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3	홍성률	부장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4	김주리	팀장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5	박성희	팀장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6	설루나	간사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7	김가은	간사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모두가 꿈꾸는 미래!
지속가능한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시범지표 모니터링 보고서

발행처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549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89
홈페이지 : www.jbcsd.org | 전화 : 063-232-3543
팩스 : 063-288-3543 | 이메일 : jbcsd@daum.net